

한국 사회

2026년 제27집 2호

일반논문

- 1인 가구 관련 해외 정책의 현황과 함의: 유럽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 이명진
- 플랫폼 시대의 팬덤 정치 3.0: 청년세대 대리인 정치와 의미화 실천의 젠더 분화
| 석승혜
-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평가와 전망: 과학적 전문성을 넘어 기후 정의를 향한 저널리즘의 출발
| 박진우 · 진민정 · 김설아
- 신취약계층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중심으로
| 허준기
-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경험이 대학 진학 희망에 미치는 영향
: 국가정책성을 이용한 도구변수 추정 분석
| 박세황 · 이정택
-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관련 요인 탐색연구: 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 부민서

한국사회는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로
서 연2회 발간된다. 한국사회연구소는 급변하는 현대 한국사회와 국제지역사회의 제
반 현상을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구조와 변동에 대한 설명
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996년 8월 22일 설립되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Homepage: <https://socialresearch.korea.ac.kr/>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한국사회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장: 정고운(고려대 사회학과)

편 집 위 원: 강동훈(선문대 사회복지학과)	김지훈(인하대 사회교육학과)
사영준(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송효종(고려대 사회학과)
신은경(고려대 사회학과)	신인철(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윤상우(동아대 사회학과)	이해진(충북대 사회학과)
장안식(케이스탯 리서치)	조정우(경남대 사회학과)
황선재(충남대 사회학과)	황희영(동의대 행정학과)
	(이상 가나다순)

편 집 간 사: 이진영(고려대 사회학과)

한국 사회

2026년 제27집 2호

차례

〈일반논문〉

- | | |
|--|-----|
| ■ 1인 가구 관련 해외 정책의 현황과 함의: 유럽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이명진 | 3 |
| ■ 플랫폼 시대의 팬덤 정치 3.0: 청년세대 대리인 정치와 의미화 실천의 젠더 분화
 석승혜 | 21 |
| ■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평가와 전망: 과학적 전문성을 넘어 기후 정의를
향한 저널리즘의 출발
 박진우 · 진민정 · 김철아 | 87 |
| ■ 신취약계층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중심으로
 허준기 | 121 |
| ■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경험이 대학 진학 희망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성을
이용한 도구변수 추정 분석
 박세향 · 이정택 | 171 |
| ■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관련 요인 탐색연구: 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부민서 | 213 |
| ■ 『한국사회』 투고 및 발행규정 | 245 |
| ■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 249 |
| ■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 257 |

1인 가구 관련 해외 정책의 현황과 함의: 유럽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이 명 진**

요 약

이 연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관하여 검토를 통해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의 관련 정책의 출발점이나 바탕에는 보편적인 개인에 대한 시민권 보장이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만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각종 사회복지정책에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가 많다. 동시에 유럽의 사례가 다소 우리의 현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갖춰지지 못한 사회에서는 1인 가구 관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화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은 개인적인 수준의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 연대,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유럽 국가에서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 1인 가구, 복지제도, 유럽 국가, 1인 가구 지원 정책

* 이 논문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leemj@korea.ac.kr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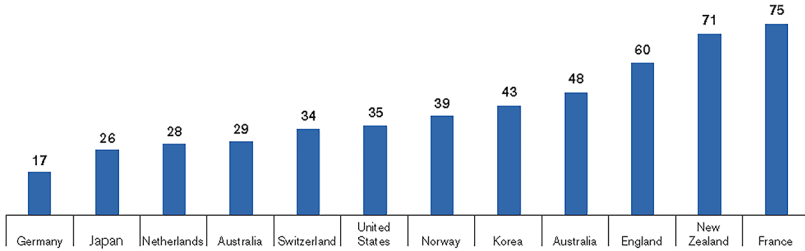
최근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화두로 단절, 고립, 분열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통합, 연계, 공생의 방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증은 개인의 고립과 단절과 관계가 깊은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퍼지고 있다는 점은 2007년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신조어로 ‘독신 경제(single economy)’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독신 가구의 소비와 구매력에 관한 관심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사회적 파급효과나 정책적 함의도 크다.

이미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은 주목할 만큼 높아졌다. 국제자료에 의하면 2020년 여섯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로 예상된다. 특히 오래전부터 서구 선진 국가와 일부 아시아 국가의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면, 유럽 국가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40%를 넘는 국가로는 핀란드(44.6%), 스웨덴(47.4%), 독일(41.4%), 노르웨이(42.5%), 덴마크 (45.0%), 에스토니아(41.2%) 등이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국가로 영국 (30.2%), 네덜란드(39.4%), 스위스(36.1%), 리투아니아(38.7%), 오스트리아 (36.6%) 등이 있다. 비유럽 국가 중에 높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38.1%)과 한국(34.5%), 캐나다(28.2%), 호주(25.9%), 뉴질랜드(24.4%) 등이 있다 (OECD, 2024).

일반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대도시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1인 가구 비율은 거의 45%에 이른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도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Cheung and Yeung, 2015; 서울특별시, 2018;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19).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에서 제시된 것처럼, OECD (2011)의 예측 자료에 의하면 2025-2030년 사이에 한국의 1인 가구는 4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OECD 국가들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예측되는 국가로 프랑스 (75%),

뉴질랜드(71%)이 선정되었고, 영국(60%), 오스트레일리아(48%), 노르웨이(39%), 미국(35%)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OECD.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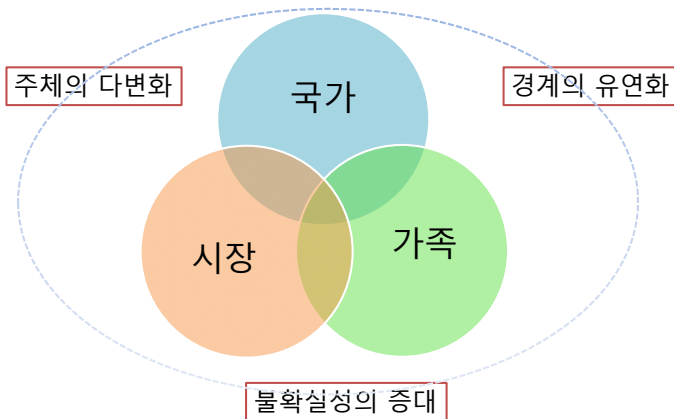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OECD 국가의 1인 가구 증가 비율 예측 (2025-2030년)

1인 가구의 급증은 단순한 가구 구성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증은 개인의 ‘개인화’와 ‘개별화’를 촉진하고 사회 내에서 개인 사이의 연결망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연결망의 결핍은 인간관계의 고립과 단절을 가져다 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잠식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문제라 할 수 있다(Giddens, 1991). 개인화의 심화는 단순히 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차원을 넘어, 개인들 간의 유기적 상호의존 관계를 약화시키고 구성원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조직·공동체로 결속시키는 사회적 응집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경우, 가치와 규범의 공유가 어려워지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회 해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함의가 있는 1인 가구의 급증에 대한 사회적 대응, 특히 유럽 국가의 정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인 가구 관련 정책이 비교적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1인 가구 정책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1인 가구 급증의 사회적 함의

사회 통합에 위해가 되는 개인주의 확산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사회 질서를 지탱해온 핵심 제도 영역인 가족·시장·국가의 변화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세 영역은 근대 사회 형성 이후 개인의 삶을 조직하고 사회적 연대를 매개해 온 기본 구조였으며, 사회 통합은 이들 영역 간의 기능적 분업과 상호 보완을 통해 유지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세 영역의 기능과 위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급격한 재편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동은 <그림 2>와 같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Kaufmann, 1991).



<그림 2> 사회 변화와 재구조화

우선 가족 영역의 변화는 개인주의 확산과 1인 가구 증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과거 가족은 경제적 재생산, 정서적 유대, 사회화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1차적 통합 장치로 기능하였다. 개인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었고, 가족은 개인에게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 기대를 부여하는 기본 단위였다. 그러나 압축적 산업화와

급속한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전통적 가족 구조를 빠르게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족은 형태의 급격한 다양화와 규모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혈연과 혼인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결속력 또한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을 포괄적으로 조직하는 기본 단위가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족 내부에서 수행되던 돌봄, 부양, 정서적 지지의 기능은 점차 외부로 이전되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가족의 약화는 단순히 사적 영역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통합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공감대가 붕괴할 경우,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연대 의식은 약화하기 쉽다. 이는 일상적 상호작용에서의 의사소통 비용을 증가시키고, 갈등 조정 능력을 저하해 사회적 비효율성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개입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게 된다.

가족 영역의 축소와 동시에 시장 영역의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 충족되던 다양한 욕구와 기능은 점차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상품을 통해 해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돌봄, 여가, 정서적 교류마저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은 소비자로서 사회와 연결되며, 사회적 관계는 점차 계약적·도구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 통합의 기반은 공동체적 연대에서 시장 논리로 이동하고, 개인은 시장 참여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자원 접근에서 차별화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역할은 과거보다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가족과 시장 간의 기능적 불균형이 심화할수록, 국가는 사회 통합의 최종적 조정자로서 제도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 특히 가족이 수행하던 보호와 통합 기능이 약화하고, 시장이 이를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국가는 복지, 규제, 공공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로 등장한다.

이는 국가가 단순한 행정 주체를 넘어, 사회적 연대의 제도적 기반을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바로 이 세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가족의 축소와 개인화의 결과이자, 시장을 통해 삶을 유지해야 하는 개인의 증가를 의미하며, 동시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등장이다. 정부 통계에서 1인 가구가 점차 전형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를 예외적 현상이나 일시적 추세로 간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1인 가구 현상은 개인의 선택 차원에서만 해석될 수 없는 구조적 변동의 산물이며, 사회 통합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라 할 수 있다. 가족·시장·국가라는 세 영역의 재조정 없이는 개인주의의 확산이 사회적 고립과 분절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1인 가구를 둘러싼 논의는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평가를 넘어, 현대 사회가 어떠한 통합 원리 위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이론적 질문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III. 유럽의 1인 가구 현황과 관련 정책

1인 가구는 이미 2018년에 유럽 특히 EU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가구 유형이 되었다. 2010년에 전체 EU 지역의 1인 가구의 비율이 31%이었고,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34%에 이르렀다(EU, 2018). 물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난다. 1인 가구의 비율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독일의 경우처럼 40% 내외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중해 국가나 동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25% 미만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가 있는가 하면, 199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국가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유럽에서 1인 가구 증가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1인 가구 비율은 여러 가지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노동시장,

교육제도, 복지제도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요인이 중요하다. 아울러 산업혁명의 시기와 유형으로 인한 도시 환경의 차이도 1인 가구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개인의 독립된 삶을 강조하는 문화적인 환경은 홀로 살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홀로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정책도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 국가 특히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경우에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인 가구에 국한한 특정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많은 경우에 개별 시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데 대한 대상이 1인 가구인 만큼 이들이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1인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공급이나 주거비 지원 혹은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정책 등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1. 영국

영국에서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밑바탕에는 크게 영국 내 1인 가구의 네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여성 노년 가구가 1인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25세 - 44세 연령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최근에 남성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경우 1인 가구가 일시적인 가구 유형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가구 유형이 되고 있다(Bennett and Dixon, 2006).

공식적으로 영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방향이 제시된 것은 없으나, 계획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세 개 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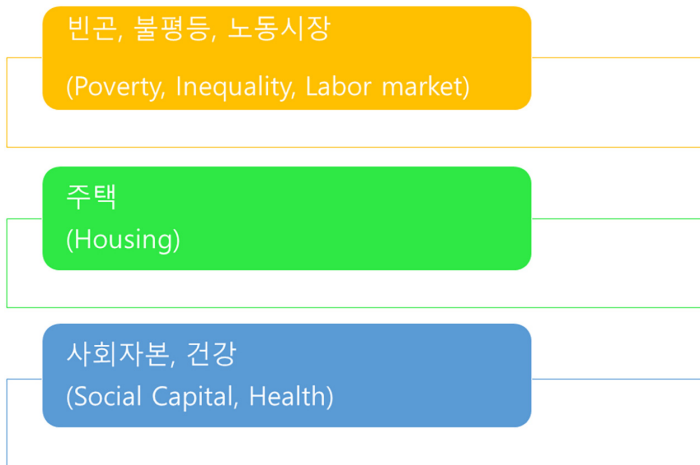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3>. 참조) 첫 번째 방향은 빈곤, 불평등, 노동시장 관련 정책과 관련이 깊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비자발적 혹은 강요된(forced) 1인 가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로 인해 1인 가구가 된 경우에 빈곤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1인 가구의 생활비가 다인 가구의 1인당 생활비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방향은 주택 정책과 관련이 크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주택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 구매 욕구와 주택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주택 구매력이 낮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 수요와 공급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 혹은 council housing)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택복지 정책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방향은 사회자본과 건강 정책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고립 상황을 악화시키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사람일수록 음주나 흡연 같은 건강위해행동(health risk behavior)을 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 상황이 열악함에 따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같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자본 수준을 높이고, 생활 안전 수준을 높이는 각종 정책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 기반하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 주택 정책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1인 가구 관련 주택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주택 유형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 등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련 정책으로는 25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다. 학교 등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주택임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세 번째 관련 정책으로는 싱글룸 대여 정책이다. 16세부터 25세 이하의 청년층이 공동거주형 숙소

내에 개인 침실을 임대할 수 있다. 네 번째 관련 정책은 공동체 주도 주택 정책이다.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으나 1인 가구의 수요에 부합하는 코하우징, 협동조합주택, 공동체 토지 신탁, 공동체 자가 건설주택, 자조주택 정책 등 다양한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60세 이상 1인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보호 주택(sheltered housing) 정책이 있다. 물론 노년 부부도 이 유형의 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에서는 요양원과 달리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며, 공동 라운지나 세탁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유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이석환·최조순, 2015; Scanlon and Arrigoitia, 2015; GOV.UK, 2019).



자료: Bennett and Dixon. (2006)에서 재구성.

〈그림 3〉 영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방향

2. 프랑스

프랑스의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전체 가구 중 약 33%를 차지하였고 2017년에는 35%로 상승하였다. 프랑스에서도 1인

가구 관련 단일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택 정책에서 가구원별 범주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주택 수당 지급 기준을 경제적 상황과 연계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주요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김윤영, 201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수입이나 자산 규모를 소유한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주택 수당 그리고 학생을 위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한다. 국적과 상관없이 청년이 정부와 협약을 맺은 임대아파트, 학교 기숙사나 민간 기숙자에 입주하게 될 경우 개인 주택 수당(APL: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을 제공한다. APL을 받게 되면 그만큼 월세나 대출금이 줄게 된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사회 주택 수당(ALS: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을 받게 된다. 1인 가구가 아지만 앞서 두 개 유형의 주택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가족 주택 수당(ALS: l'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 제도(CLE)는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28세 미만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학생은 이 보증제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가족이나 제삼자의 보증은 필요 없다. 박사 학위가 있는 28세 이상 외국인도 이 보증제도에 지원할 수 있다(European Youth Portal, 2019).

한편 노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역시 노년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노년 인구 문제를 살펴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노년 인구에 대한 정책은 크게 네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다(표 1 참조). 첫 번째 차원은 주거 문제이다. 그런데 노인도 청년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일정 자격을 갖추면 주택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원은 노년 빈곤 문제이다. 예를 들면, 2013년부터 2017년 빈곤과의 전쟁과 포용 정책(The Five-Year Plan of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for Social Inclusion)을 통해 사회 보장의 최소 기준을 높이고 건강 지원의 편의성을 높였다. 예를 들면, 노인의 경우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간병간호지원 제도(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APA)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혹은 간호를

제공한다. 가정도우미 제도와 노인 연대 수당(solidarity grant for elderly people)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이나 65세가 넘는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세 번째 차원은 노년 인구의 고립 문제이다. 많은 노인이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된다.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과 모임은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다른 세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적 유대와 활동을 위해 각종 기관과 협회로 구성된 모나리자(MONALISA: MObilisation NAtionale contre l'Isolement Social des Agé)가 2013년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김윤영, 2017). 네 번째 차원은 노년 이민자 문제이다. 이 문제는 프랑스의 특수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노년 이민자들은 프랑스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심지어 고국으로 귀국한 이민자들도 고국의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는 최대 매달 550유로 노년 이민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ADOMA 같은 공공 기업은 60세 이상이고 1960년대 프랑스로 와서 계속 거주하는 노년 이민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거나 노년층의 필요에 맞추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년 이민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2017).

〈표 1〉 프랑스 노년 정책의 차원과 관련 정책

차원	정책
빈곤	노년 연대 수당
고립과 정신 건강	노인을 위한 활동과 모임 활성화
주거	각종 주택 수당
이민자	은퇴 이민자 수당, 주거 지원

자료: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2017)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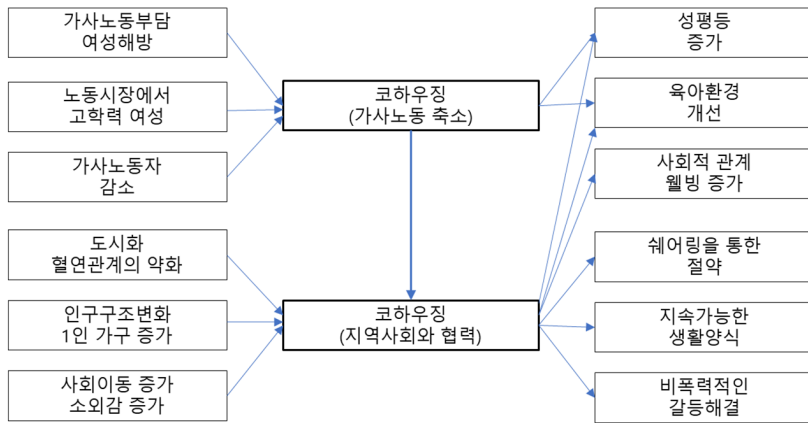
3. 스웨덴

스웨덴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 관련 정책이 개별 정책이라기보다는 각종 복지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자면 사회 부조(social welfare allowance)와 주택 수당(housing allowance)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여기에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기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는 18세부터 24세 사이 청년세대를 위해 최대 1,300 스웨덴 크로나 가량의 주거비용이 제공된다. 사회 부조 수급자에게 월세가 지원되며, 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을 위한 보조 주택 수당이 제공된다(OECD, 2018; European Commission, 2019).

협동 주택(cooperative house) 혹은 집합주택(collective house) 같은 코하우징은 사회 복지 제도를 넘어서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지원책이다. 코하우징을 통해 1인 가구의 주거비용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스웨덴에서 코하우징의 역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코하우징의 시초는 출산과 육아로부터 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가족에 기반을 둔 돌봄 기능을 대체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주로 중산층 이상 고학력자 부부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실제로 코하우징 입주자들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나 일을 통해 참여하기보다는 가사 노동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이러한 주거 형태를 선택하였다(Vestbro and Horelli, 2012; Vestbro, 2014).

이러한 코하우징 형태는 1970년대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공공 부문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 하되, 주거 유지비를 낮춘 대량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톡홀름 남부 지역의 Prästgårdshagen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코하우징에서 입주주민들은 공동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 주택 유지 비용을 절약하고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코하우징 모형은 좀 더 발전하여 Stolplyckan라는 코하우징 유형이 나타났다.

노년층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입주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아원, 체육관, 공동식당은 공동 공간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입주민 스스로 각종 공동체 행사와 건물 유지 작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와 협력 모형이 사회 혼합(social mixing) 이론과는 달리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세대 사이의 기대와 역할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자료: Vestbro. (2014).

〈그림 4〉 스웨덴의 코하우징 모형의 원인과 효과

최근의 코하우징 유형은 인생 후반기(second half of life) 모형이다. 예를 들면, 스톡홀름 Färdknäppend은 공동체 삶을 원하는 40세 이상의 중년과 노년 거주자를 위한 시설이다. 1993년에 건설된 건물은 총 7층 규모로, 총 43개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개별 시설로는 침실과 거실 그리고 간단한 주방이 있다. 공동 시설로는 도서관·컴퓨터실·세탁실, 취미 공간, 목공실, 체육관, 사우나는 물론 외부 방문객을 위한 침실도 있다. 거주민들은 건축물 설계 때부터 참여하였으며, 코하우징의 유지와 관리 활동에 참여한다. 각종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이러한 주거 환경을 누리기 위해 국가의 주택보조금은 필수적이다(Vestbo and Horelli, 2012).

IV. 요약과 토의

이 논문에서는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영국·프랑스·스웨덴은 공통적으로 1인 가구를 별도의 단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기존 복지·주택·사회정책 체계 속에서 대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여성 노년층과 25~44세 연령대, 특히 남성 청년층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1인 가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 가구 형태로 정착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증가는 빈곤과 불평등, 노동시장 취약성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인식되고 있으며,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1인 가구의 구조적 취약성이 정책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둘째, 세 나라 모두에서 주택 정책은 1인 가구 대응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임대주택, 청년 주거 지원, 싱글룸 임대, 공동체 주도 주택, 노년층 보호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통해 1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주택 수당 중심의 정책 체계를 운영하며, 청년 1인 가구에게 개인 주택 수당(APL), 사회 주택 수당(ALS), 임대 보증 제도(CLE)를 제공한다. 노년 1인 가구 역시 주택 수당과 연계된 지원을 받으며, 주거 안정은 빈곤 완화 정책과 결합되어 추진된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는 국가별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 사회적 연대 강화 정책을 통해 고립과 건강 악화를 완화하려 하고, 프랑스는 특히 노년층과 노년 이민자의 고립 문제를 주요 정책 영역으로 다룬다. 스웨덴은 사회 부조와 주택 수당이라는 보편적 복지 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 코하우징(co-housing)을 1인 가구 정책의 중요한 대안으로 발전시켜 왔다. 초기에는 중산층 중심이었으나, 이후 청년과 노년 1인 가구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였으며, 공동체 참여와 주거비 절감, 사회적 유대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우리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검토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바탕이나 여건이 한국사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40% 전후로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이다. 그만큼 1인 가구 관련 정책 자체보다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개인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유형의 배제를 최소화하여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측면이 크다. 1인 가구에 더욱 특화된 주택 정책 역시 보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홍승아 외, 2017).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사회에서 1인 가구 정책을 검토할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보편적인 시민권 보장이라는 큰 방향도 고려해야 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유럽의 사례가 다소 우리의 현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 방향이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사실 1인 가구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교육, 일자리, 고령화, 빈곤, 안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걸쳐있다. 게다가 세대, 성별로 각 문제의 중요성이 차이가 난다. 이들 사회경제적 상황도 다양하다. 그런데도 다양한 1인 가구에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이명진 외, 2014). 사회적인 고립은 개인적인 수준의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 연대,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유럽 국가에서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여러 계층과 세대 사이에 사회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회 혼합을 지향하는 이론의 이상적인 목표와는 달리 현실에서 유대와 상호작용이 실제로 작동하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개인 사이에 협동과 유대를 형성하기는 쉬운 작업은 아니다. 게다가 계층, 세대, 성별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적 차이가 큰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접수
2026년 6월 8일 수정 완료
2026년 5월 12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김윤영. 2017.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서울특별시. 2018.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특별시.
- 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권 1집: 229-253.
- 이석환·최조순. 2015.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옥·김수진. 2017.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ennett, Jim and Mike Dixson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 Chen, Jie. 2006. “The Dynamics of Housing Allowance Claims in Sweden: A discrete-time hazard analysis”. *Working Paper* 2006:1. Uppsala University.
- Cheung, Adam Ka-Lok and Wei-Jun Jean Yeung. 2015. “Temporal-Spatial Pattern of One-Person Households in China, 192-2005.” *Demographic Research*. Vol. 32. No. 44: 1209-1238.
- European Youth Portal. 2019. https://europa.eu/youth/fr/article/118/18213_en.
- European Commision. 2019. *Sweden Housing Allowance*.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30&intPageId=4807&langId=en>
-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2017. *Report on the French Ageing Policy*.
-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 GOK.UK. 2019. <https://www.gov.uk/council-housing/types-of-tenancy>.
- Kaufmann, Fanz-Xaver (ed.). 1991. *The Public Sector: Challenge for*

Coordination and Learning. Berlin: de Gruyter.

OECD. 2018. *The OECD Tax-Benefit Model For Sweden*. OECD.

OECD. 2024. *SF2.1 Household size*. OECD Family Database.

Scanlon and Meilissa Fernandez Arrigoitia. 2015. "Development of Mew Cohousing: Lessons from a London Scheme for the over-50s." *Urban Research and Practice* 8: 106-121.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19. *Statistical Handbook of Japan 2019*. Statistics Bureau of Japan.

UN. 2017.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Around the World 2017*. UN.

Vestbo, Dick Urban and Liisa Horelli. 2012. "Design for Gender Equality – the History of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Environment*, Vol. 38, No. 3: 315-335.

Vestbro, Dick Urban, 2014. *Cohousing in Sweden: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http://www.kollektivhus.nu/pdf/SwedishCohousing14.pdf>.

Curr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Single-Person Household Policies in Major European Countries

Myoung-Jin Lee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olicies related to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Sweden in order to draw policy implications. In these countries, policies are generally based on the universal guarantee of individual citizenship rights rather than on support systems exclusively for single-person households. Nevertheless, because single-person households are often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they are frequently included as beneficiaries of broader social welfare programs. Although European experiences differ from the Korean context, some measures may still be applicable in the short term. In particular, the rapid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may intensify social isolation, weakening social solidarity and trust. Therefore, policies and programs that strengthen social networks and community solidarity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Key Words: single-person household, welfare system, European Countries, single-person household policy

플랫폼 시대의 팬덤 정치 3.0: 청년세대 대리인 정치와 의미화 실천의 젠더 분화*

석 승 혜**

요 약

본 연구는 플랫폼 사회의 도래와 함께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가 대중문화 팬덤의 실천 양식을 내면화하며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정치인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스타처럼 소비하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투사하는 참여 양식을 '팬덤 정치 3.0'으로 개념화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더 분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기간 동안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천수가 높은 개념글을 중심으로 담론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청년 남성 팬덤은 자신의 욕구를 대리할 정치인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그를 게임에서 승리를 담보할 '전략적 대리인'으로 설정하며 성과에 따른 배당을 요구하는 투자가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반면 청년 여성 팬덤은 반페미니즘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여 상대 진영에 맞설 대리인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 이들은 대리인을 둘러싼 부정적 프레임 해체·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를 가족 서사 속 양육의 대상으로 편입시켰으며, 선거 패배의 부채감을 동력으로 책임과 보호의 원리를 강화해 나갔다. 특히 대리인의 성공을 위해 제도권 내 권리당원으로서의 참여와 조직적 개입을 통해 정당 시스템을 상향식으로 전유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정치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투자가적 정체성(investor identity)'과 '양육자적 정체성(nurturer identity)'이 결합된 팬덤 3.0의 이중적 주체성이 젠더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한 결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중문화 팬덤 양식에 익숙한 청년 여성의 경우 팬덤 3.0의 참여 문법이 정치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팬덤 정치가 청년 정치참여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리인의 성과에 따라 조건부로 배팅하고 철회하는 투자자적 냉소주의와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 개입과 희생을 자처하는 순교적 행동주의라는 젠더에 따라 분화된 정치 실천을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민주주의의 내재적 긴장을 드러낸다.

주제어: 팬덤 정치, 플랫폼 사회, 청년 정치참여, 젠더 갈등, 반페미니즘, 제20대 대통령 선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B5A17015630)

** 강원대학교 사회통합연구센터, sukmozzi@gmail.com

I. 문제 제기: 팬덤 정치, 무엇이 새로운가?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팬덤 정치는 더 이상 특이 현상이 아닌 일반적인 문법으로 자리 잡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사모’를 기점으로 팬덤의 집단적 영향력이 가시화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달빛기사단’, ‘문꼴오소리’ 등의 팬덤이 문빠를 자처하며 열성적 지지층을 형성했다(이상신, 2012; 천정환, 2017). 보수 진영의 ‘태극기 부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서 최근의 ‘윤어게인’ 행보에 이르기까지 집단적 결집을 과시하며 보수 정치의 견고한 지지층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정치와 팬덤의 결합이 한국 정치사에서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님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청년 세대의 팬덤 정치가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받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동일 세대 내에서 이념이나 계급이 아닌 젠더를 축으로 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김한나, 2022; 황정미, 2017).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시화된 이대남 현상은 청년 남성의 보수화로 일컬어지며, 이에 맞서 청년 여성은 진보 지지자를 내세운 개팔로 뭉쳐 본격적인 격돌을 보이고 있다(홍지아, 2022; 박영득·김한나, 2022). 가장 진보된 시대에 청년 남성의 보수화는 기성 상식과도 어긋난 이례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둘째,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정당 지지와 일치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집단이 아닌 개인의 욕구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과거 팬덤의 정치참여는 개인을 집단에 일치시키며, 동일한 목표와 행동을 지향하는 방식의 참여가 이루어졌다(조희연, 2002; Entman, 1993; Snow et al., 1986). 그러나 지금 청년들이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충성도를 보이지 않는다(도묘연, 2021). 청년은 진보나 보수의 일관된 이념성향을 가진 집단도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정치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주체에 가깝다. 이는 현재 젠더갈등에서 남성 보수, 여성 진보의 공식이 단순히 이념 성향이나 정체성 정치의 일면만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기존 학계는 이러한 청년세대의 팬덤 정치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해

왔다. 하나는 대중문화 팬덤의 확장적 측면에서 정치인의 셀러브리티화와 그에 따른 팬덤의 폐쇄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시각이다(오현철, 2021; 터너, 2018; Dean & Andrews, 2021). 정치의 개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치인은 대중의 정서적 애착과 동일시의 대상이 되었고, 유권자들은 연예인 팬덤과 유사하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젠더적 측면에서 ‘이대남’과 ‘개딸’이 각각 보수와 진보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사회구조적 맥락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 청년 남성에게 대해서는 주로 반페미니즘과 능력주의 담론이 보수화로 이어진 과정에 주목하는 반면(천관율·정한울, 2019; 한귀영, 2021; 김선영, 2023, 최중숙, 2020), 청년 여성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첨예하게 갈린다. 한편에서는 팬덤의 정당 장악이 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적 퇴행이라 비판하고(강준만, 2024; 윤평중, 2024; 김지민·김경민·최고훈, 2023),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차별에 맞선 능동적 주체화 과정으로 긍정한다(홍혜은, 2022; 문미진, 2024; 윤보라, 2025). 비록 평가는 엇갈리지만,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강렬한 정서적 유대를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정치 집단의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참여의 결과적 차이와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왔으나 동일한 플랫폼 기반 참여 구조 속에서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즉 청년 남성과 여성은 공통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개인화된 참여 구조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른 정치적 관계 맺기와 행동 양식으로 분기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플랫폼 사회의 심화에 따라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동일한 참여 구조 속에서도 청년 남성과 여성의 정치 참여 양식이 젠더를 축으로 뚜렷하게 분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젠더 분기가 이념 차이나 정체성 정치의 산물이 아니라, 플랫폼화가 정치 참여의 단위를 개인의 욕구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그 참여 방식을 대리인(정치인)에 대한 전략적 배팅으로 전환시킨 결과라고 본다. 즉 청년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팬덤 정치 3.0의 문법을 공유하면서도, 대리인을 선택하고 의미화하며 실천하는 방식에서 젠더에 따라 상이한 경로를 밟는다는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정치의 개인화와 플랫폼화가 가져온 참여 양식의 변화를 ‘3세대 개인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대중문화의 서바이벌 오디션 은유가 정치 팬덤의 실천 구조로 이식되는 양상, 즉 ‘팬덤 정치 3.0’의 형성 논리를 규명하였다. 셋째, 이러한 참여 구조 속에서 청년 남성과 여성이 정치적 대리인을 어떻게 선택하고 의미화하며 실천으로 연결하는지를 ‘대리인 선정-의미화-실천’의 과정적 틀에 따라 담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젠더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가시화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청년 남성과 여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정치참여의 과정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대선 이전, 대선 직후, 이후 정치적 위기 국면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의미화 실천의 젠더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팬덤 정치 3.0이 플랫폼 민주주의의 지형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 함의를 논의한다.

II. 플랫폼화와 3세대 개인주의 정치참여의 등장

1. 정치의 개인화: ‘정치인 중심’에서 ‘개인 주체 중심’으로

정치의 개인화(personalization of politics)는 근대 정치구조의 중심축이 정당이라는 조직에서 개인 행위자로 이동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시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정제하는 핵심 중개자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 세대에 걸쳐 정당 일체감이 약화되고 중도무당층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집단적 대표의 구조는 점차 느슨해지고 정치적 지지의 단위 역시 정당에서 정치인 개인으로 이동하였다(Rahat & Sheaffer, 2007; Dalton & Wattenberg, 1993; 이재묵, 2019; 이상신, 2012). 정치의 개인화는 유권자가 정당의 이념과 조직보다 정치인 개인을 중심으로 정치적 선택을 조직하게 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유권자는 정치인의

카리스마, 스타일, 능력, 지도력, 서사 등 개인적 특성에 반응하며 지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의 개인화는 미디어 환경의 진전과 밀접히 관련된다. 2000년대 전후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형성된 온라인 공론장 및 커뮤니티 중심의 소통 구조는 ‘노사모’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시기 ‘노사모’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는 정당에 대한 지지와 개인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 지지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형태를 띠었다. 이들은 노무현이라는 개인에 대한 지지를 동력으로 삼았으나, 그 지지는 ‘탈권위주의’라는 공적 가치와 대의에 근거한 것이었다(조재욱·강진우·김연주, 2024; 성채린·이연호, 2023). 따라서 팬덤 내에서도 정치인의 행보가 집단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개인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공적 대의 사이의 긴장을 내포하면서도 집합적 지지의 성격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2010년 중반,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소셜미디어 중심의 모바일 미디어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정치의 개인화는 보다 강화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특정 인물과의 직접적 의사소통은 정치인에 대한 친밀감의 환상을 제공하고, 정서적 소속감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등장한 ‘달빛기사단’, ‘문꼴오소리’ 등의 팬덤은 정치인 개인과의 강력한 동일시를 바탕으로 강력한 결속력을 형성하며, 공적 가치에 근거한 비판보다는 정치인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위치시켰다(성채린·이연호, 2023).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구호에서 드러나듯, 이 시기의 팬덤은 비판에 대한 높은 불관용성을 보이며 대의보다 개인에 대한 지지를 우선시하는 ‘정치의 사인화(私人化)’를 본격화하였다(오현철, 2021; 박영득, 2019; 이상신, 2012).

그러나 최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관찰되는 정치의 개인화는 이전 세대와 질적 차이를 보인다. 청년 세대는 정당과 제도에 기반한 전통 정치를 불신 속에서 경험했고, 맹목적인 정치 팬덤을 ‘미개한’ 패거리 문화로 냉소한다(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7). 이들에게 정치 참여는 공동체적 의무나 규범

의 실현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투사하고 관찰하는 문제로 이해된다. 청년 주체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인 개인 자체가 아니라, 정치인의 전략적인 활용을 통한 개인 주체의 욕구의 실현 가능성이다(도묘연, 2021).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의 개인화는 ‘정치인 중심’에서 ‘개인 주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주체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플랫폼화이다. 청년 세대에게 플랫폼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원자화된 개인의 행위를 집합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도구다. 플랫폼 환경은 집단 정체성이나 조직적 매개 없이도 개인화된 행위들의 느슨한 연결만으로 집합적 영향력을 산출하는 ‘연결행동(connective action)’을 가능하게 한다(카스텔, 2015; Bennett & Segerberg, 2023). 더구나 2010년대 이후 고도화된 플랫폼화로 인해 이용자의 미시적 참여는 즉각적으로 수치화하고 가시화된다. 좋아요, 댓글, 조회 수, 공유 수와 같은 누적된 지표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정치인의 대중적 영향력과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기능한다(레크비치, 2023). 정당이나 조직을 경유하지 않고도 개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집합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Bennett & Segerberg, 2023; Helmond, 2015). 즉 플랫폼은 개별 행위자의 분산된 욕구와 감정을 실시간으로 집합적 압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팬덤 정치의 개인주의의 반대가 아니라, 초개인화된 세대¹⁾가 자신의 욕구를 관찰하는 실천 방식이다.

2. 3세대 개인주의의 효능감 정치와 전략적 ‘배팅(Betting)’

정치의 개인화는 지지 대상의 변화뿐 아니라 정치 참여의 방식을 근본적

1) 초개인주의(Hyper-Individualism)는 후기 근대사회에서 자아의 기획, 자율성, 개체성, 독창성, 개인적 성취를 극대화하고 유동적인 정체성, 주체성의 과잉, 사생활의 팽창을 통해 고도의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심화된 상태로의 진전을 의미한다(이영자, 2011). 이와 같이 근대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개인주의 경향을 경제적 개인주의(Beck/Beck-Gernsheim, 2010), 초개인주의(Aubert, 2010)로 구별짓는다.

으로 변화시킨다. 이즐테 카림(Charim, 2019)은 이러한 변화를 ‘3세대 개인주의’ 정치참여로 명명한다. 1세대 개인주의가 집단적 실천을, 2세대가 정체성 기반의 인정 투쟁에 집중했다면, 3세대는 온전히 개별적인 단독성을 유지한 채 자신의 일상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접속한다. 이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1세대 개인주의 정치 참여는 군사독재 정권에 맞선 반독재·민주화 투쟁기에 해당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은 근대 개인의 개념이 비로소 싹튼 주체들이 권위주의 체제의 해체를 지향하며 전개한 저항적 참여였다(조희연, 2004; 최장집, 2003). 19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되면서,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이루어진 2세대 참여로 전환되었다(최장집, 2003: 100; 조희연, 2004; 송호근, 2003).

반면 현재의 3세대 개인주의 정치참여는 계급이나 이념 같은 보편적 대변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적 개체성을 유지한 채 자신의 일상적 불만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접속한다(카림, 2019; Sandvoss, 2013; 서향리·정재민·윤종성, 2022). 즉 3세대 개인주의 정치참여는 집단적 대의를 위한 참여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정치에 접속하는 참여 양식을 띤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모든 삶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되어온 오늘날 청년세대는 ‘헬조선’, ‘n포세대’, ‘수저계급론’과 같은 자학적 비탄 속에 사회에 대한 불만을 누적해왔다(석승혜·김남옥, 2019). 그러나 2017년 촛불탄핵 이후 공정성 담론이 정치의 중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이들의 불만은 단순한 냉소를 넘어 공정성에 대한 정치적 요구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청년세대에게 공정성은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자신이 감내한 희생과 기회 상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문제로 이해된다(석승혜, 2020). 예컨대 남성에게 공정성은 군복무와 같은 의무 수행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박탈감,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역차별로 작동한다는 인식과 결합된다. 반면 여성에게 공정성은 노동시장과 일상에서 경험되는 구조적 차별, 임금 격차,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자신의 기회가 제약되어 왔다는 경험과 맞닿아 있다(마경희, 2007). 이처럼 공정성은 각기 다른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수렴되며, 구조적 불만을 개인의 보상 문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매개로 작동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년 세대에게 정치는 현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된다. 조직적 참여가 아니더라도 플랫폼 환경에서 개인의 불만은 집합적 주목을 형성했고, 정치권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이나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와 같은 사례는 이러한 참여 양식이 실제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경험은 청년세대에게 결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정치가 여전히 '반응하는 영역'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클릭과 선택이 정치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효능감의 축적이 그것이다(송경재, 2020; 송경재·임정빈·장우영, 2016; 최정화, 2012). 이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는 의무나 규범이 아니라 '내 개입이 실제 결과를 만든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핵심 동력으로 삼게 된다.

정치적 효능감은 단순한 참여 동기에 머물지 않는다. 효능감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선택과 개입이 실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자기 인식을 강화하며, 이는 이후 정치적 선택을 반복하고 심화시키는 피드백 구조를 형성한다. 나아가 효능감은 정치인과 지지자 사이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 개인은 제도적 매개 없이 정치인에게 직접 접촉하면서 정치인과 지지자 사이의 거리감은 상쇄된다. 지지자는 논리, 이념, 정책보다 감성적 연결에 끌리며, 정치인은 지지자의 욕망, 희망, 분노, 혐오를 자극하여 강렬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김수정·오지현·최선헌, 2020; Dean, 2017; Brough & Shresthova, 2012). 이 과정에서 정치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지지자의 욕망이 투사된 대상으로 재구성되며, 팬덤의 욕망이 집결된 실체가 된다(Katz, 1994; Smith-Mady, 2017). 따라서 3세대 개인주의에서 정치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대신해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효능감을 내면화한 3세대 개인주의 정치참여에서 지지 행위는 실질적 참여가 아니라, 투자자적 정체성에 기반한 성공에 대한 배당의 성격을 갖는다(카림, 2019:182-183).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 내에서 청년 세대에

게 정치는 더 이상 공동체의 가치 실현의 장이 아니라, 성공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고 관리해야 하는 ‘투자처’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주체는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효능감을 정치적 무대에서 실현해 줄 최적의 인물을 발굴하고 대리인으로 선택한다. 터너(Turner, 2018:209-211)가 지적하듯, 플랫폼 시대의 셀브리티는 미디어 산업이 위로부터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중이 아래로부터 직접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존재다. 정치인 역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유권자는 플랫폼을 통해 정치인을 직접 발굴하고 자신의 욕망을 투사함으로써, 수동적 지지자가 아닌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주체로 전환된다.

플랫폼을 통한 정치인과의 직접적 상호작용과 노출은 친밀감의 환상을 형성하며, ‘내가 선택한 대리인’을 단순한 타자가 아닌 확장된 자아의 영역으로 편입시킨다(터너, 2018:213). 즉, 지지자는 자신이 배팅한 대리인의 정치적 위상과 성패를 자신의 유능함 및 사회적 효능감과 일치시키게 된다. 대리인의 실패는 단순한 지지 대상의 탈락이 아니라, 주체 본인의 욕구 좌절이자 투입된 정치적 자산의 실질적 ‘투자 손실’로 인식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치적 선택은 결과에 따라 주체의 자기 인식에 대한 타격과 기회비용의 상실이 발생하는 ‘고위험-고관여 배팅’의 구조를 띠게 된다(문미진, 2024).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투자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플랫폼의 실시간 지표를 동원하여 집요하고 공격적인 행동 양식을 보인다.

요컨대 플랫폼화와 개인화의 결합은 정치참여를 ‘전략적 배팅 구조’로 재편하며, 3세대 정치는 정치인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공 보수를 얻어내려는 ‘투자자적 행동주의(investor-oriented activism)’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투자자적 행동주의란 정치 참여를 공동체적 의무나 이념적 헌신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자원을 투입하고 그 성과에 따른 배당을 요구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하는 고도로 전략화된 참여 양식을 의미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시민적 참여가 소비자적 선택의 논리로 재편된다는 ‘소비자 시민권(consumer citizenship)’ 개념과 맥을 같이하면서 서도(Cohen, 2003; Mukherjee & Banet-Weiser, 2012), 단순한 소비적 선

택을 넘어 성과 지향적 배팅과 조건부 철회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효능감 정치와 배팅 구조가 청년 세대 내부에서 젠더에 따라 상이한 실천적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²⁾ 최근의 선거와 정치 집회 국면에서 관찰되듯, 동일한 플랫폼 환경과 개인화된 참여 조건 속에서도 정치적 대리인에 대한 의미화나 실천 양상은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분기된다(조소연·정성조·이나영, 2025; 박영득·김한나, 2022). 이러한 현상은 3세대 개인주의라는 공통의 토양 위에서도, 젠더라는 변수가 배팅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젠더적 분화의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청년 세대 팬덤 정치가 한국 민주주의 지형을 재편하는 다층적인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III. 서바이벌 오디션 무대로의 은유: 정치의 아이돌화

1. ‘원픽(One-Pick)’과 양육 기반의 정치 팬덤 3.0

앞서 논의한 ‘전략적 배팅 구조’는 실제 정치참여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일정한 실행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참여 양식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 영역에서 발생한 팬덤의 세대적 진화와 그에 따른 주체성 재편 과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정치와 대중문화는 상이한 영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치인이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대중적 인지도와 주목을 권력의 핵심 자산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기 때문이다(터너, 2018; Marshall, 2014). 특히 정치의 엔터테인먼트화는 정치

2)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남녀의 정치참여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정치참여의 형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결과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플랫폼화가 정치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양적으로 확장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에는 ‘스스로의 역량과 영향력에 대한 자신감’, 즉 내적 정치효능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Coffé & Bolzendahl, 2010; Sartori et al., 2017).

인을 정책 수행의 주체라기보다 주목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존재로 재구성하며, 이는 정치참여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초기 팬덤 1.0이 스타를 향한 맹목적 추종과 능동적 해독에 머물렀다면, 팬덤 2.0은 인터넷과 커뮤니티 문화의 확산 속에서 2차 콘텐츠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적극적 생산자로 전환되었다. 타 팬덤과의 관계에서도 팬덤 1.0의 배타적·경쟁적 태도와 달리, 팬덤 2.0은 동시대에 데뷔한 유사 그룹의 팬덤과 동질감을 형성하며 호혜적 연대를 맺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팬덤 1.0과 2.0 모두 그룹 전체를 지지하는 ‘올팬’ 중심이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신윤희, 2019).

그러나 팬덤 3.0은 이전 세대와 질적으로 구별된다. 팬덤 3.0의 가장 큰 특징은 ‘올팬’이 아닌 ‘원픽’ 중심으로 조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팬덤 3.0의 부상은 정치 참여를 진지한 숙의의 장에서 유희와 경쟁이 공존하는 ‘게임적 장’으로 전환시키는 인식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갠슨(Gamson, 1994)이 지적하듯, 현대의 수용자들은 셀러브리티의 진정성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교환과 경쟁, 그리고 승패가 작동하는 놀이적 구조 속에서 쾌락을 얻는 ‘게이머적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게이머적 인식이 가장 선명하게 제도화된 형태가 바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특정 개인을 원픽으로 선택하고 그를 데뷔시키기 위해 타 팬덤과 전략적 연합을 구성하고, 투표·홍보·자원 동원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팬은 수동적 소비자에서 적극적 ‘기획자’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스타는 더 이상 발견된 존재가 아니라 팬덤이 직접 만들어낸 존재로 재구성되며, 지지자는 스타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양육자이자 성과를 요구하는 투자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된다(신윤희, 2019; 김수정, 2018).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문화 팬덤 3.0과 정치 팬덤의 수렴이 가능해진다. 주목할 것은 대중문화 팬덤의 진화와 정치 팬덤의 진화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팬덤 1.0, 2.0 시기의 정치 참여는 정당 일체감, 집단적 이념, 공공성에 기반한 독자적 경로를 밟아왔으며, 대중문화 팬덤의 참여 양

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의 셀러브리티화와 정치의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유권자는 정당이 아닌 특정 개인 정치인을 ‘원픽’으로 선택하고 그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획자’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즉 대중문화 팬덤이 3.0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정치 팬덤 역시 정치인의 셀러브리티화와 정치의 개인화를 매개로 동일한 참여 양식을 내면화하며 수렴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팬덤 정치 3.0’으로 개념화한다. 팬덤 정치 3.0이란 대중문화 팬덤 3.0의 행동 논리가 정치 영역으로 전이된 참여 양식으로, 유권자가 정치인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대리인으로 선택하고 그 성공을 위해 기획·운영·관리에 직접 개입하는 고도로 전략화된 정치참여의 형태를 의미한다.

기획자로서의 역할 경험은 참여 주체의 정체성을 질적으로 전환한다. 팬덤 3.0의 지지자는 대상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정체성이 결합된다(우루루·남윤재, 2018; 신윤희, 2019). 첫째는 양육자적 정체성이다. ‘내가 이 스타를 키워냈다’는 인식은 대상에 대한 애정을 보호와 책임의 윤리로 확장시킨다(김수정, 2018). 둘째는 투자자적 정체성이다. “내가 돈을 냈으니”, “내가 너를 데뷔시켰으니”와 같은 인식은 지지 대상을 관리와 감독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며, 그 행보와 성과에 대한 지속적 개입을 정당화한다(신윤희, 2019: 56). 이처럼 양육과 투자가 결합된 이중적 주체성은 지지 행위를 단순한 선호의 표현이 아니라, 대상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속적 개입의 과정으로 전환시키며, 이것이 앞서 논의한 ‘전략적 배팅 구조’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행동 논리로 기능한다.

나아가 이 이중적 주체성은 집단행동의 양식을 ‘원픽 중심의 배타적 행동주의’로 유도한다. 신윤희(2019)는 투자자이자 양육자로서 스타를 직접 만들어냈다는 인식은 “우리가 이러려고 데뷔시킨 줄 알아?”라는 발화에서 드러나듯, 스타의 행보가 기대에 어긋날 때 기획사나 방송국에까지 강력한 피드백을 요구하는 소비자 행동주의로 전환된다고 지적한다(신윤희, 2019: 102). 이러한 논리는 외부 경쟁자에 대한 공격을 넘어 동일 집단 내부의 비판자나 이탈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까지 확장되며, 지지 대상의 성공을 저

해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즉 팬덤 3.0의 행동주의는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자신이 투자하고 양육한 대상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개입의 논리로 작동한다.

이러한 대중문화 팬덤 3.0의 실천 구조는 플랫폼화를 매개로 정치 영역으로 전이된다. 유권자는 더 이상 정당에 대한 집단적 충성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 정치인을 ‘원픽’으로 선택하며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참여 주체로 변화한다. 베넷과 세거버그(Bennett & Segerberg, 2012)가 지적하듯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화된 연결행동(connective action)은 조직 중심의 정치참여를 네트워크 기반의 개인화된 참여로 전환시켰으며, 팬덤 정치 3.0의 맥락에서 이는 원픽의 성공을 위해 정보 확산·여론 형성·조직적 동원에 직접 개입하는 ‘기획자이자 운영자’의 역할로 구체화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참여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내가 선택한 대리인을 성공시키기 위한 개입 과정’으로 재구성된다. 결국 팬덤 정치 3.0은 정치참여의 감정적 강화가 아니라, 전략적 배팅 구조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참여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성공보수 구조로서의 젠더 이슈와 정치참여의 성별 분화

최근 젠더 이슈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과거 한국 정치를 지배했던 지역, 세대, 계급 중심의 균열 구조와 달리, 현재의 청년 세대는 젠더를 매개로 정치적 태도와 정당 지지 성향을 극단적으로 양분하고 있다(김지민·김경민·최고훈, 2023, 김한나, 2022).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거시 담론이 약화된 자리에서 강화된 개인주의 세대의 ‘전략적 합리성’이 자리하고 있다. 검찰개혁과 같은 거시적 정치 의제는 청년의 일상적 삶과 유리되어 있고, 기존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인 희망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나 ‘여성할당제 폐지’와 같은 의제들은 취업 경쟁, 병역 부담, 자원 배분과 같은 개인의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선택지로 인식된다. 특히 군 복무와

관련된 성별 간 갈등은 장기간 축적되어 온 문제로, 취업난이 극심한 현실에서 시간적·경력적 손실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나타난다(석승혜·김남옥, 2019:66). 이와 같이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는 인접집단과의 갈등으로 문제를 전환하며, 이를 통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정치적 보상, 즉 '성공보수'를 획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Sandvoss, 2013). 따라서 젠더 갈등은 단순한 가치 대립이 아니라, 개인의 생존과 직결된 보상 구조 속에서 조직되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청년세대의 공정성 감각은 '나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개인적 보상의 문제로 수렴된다. 그런데 이 개인적 차원의 공정성 감각이 젠더 갈등 국면과 결합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공적 담론의 수준으로 전환된다. 즉 '나의 희생이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개인적 박탈감은, '우리 집단이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집단적 부정의(injustice) 서사로 전환되며, 이는 젠더 갈등을 사적 감정의 영역에서 공적 정치 의제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논리로 작동한다(프레이저·호네프, 2019). 이러한 전환의 기저에는 교환 관계에서의 등가성 원칙이 작동한다. 본래 무임승차자를 탐지하고 집단 생존을 보호하려는 진화론적 기제였던 공정성 감각은, 현대의 시장적 환경에서 철저한 '속임수 탐지-징벌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게 된다(천관울, 2018). 이 원칙이 집단 간 논리로 확장될 때, 상대 집단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공적 규칙을 위반한 '불의의 수혜자'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남성 집단은 여성을 군복무에 무임승차한 특권층으로, 여성 집단은 남성을 구조적 차별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특권층으로 각각 타자화한다(석승혜·김남옥, 2019:60).

이처럼 공정성은 보편적 정의의 원칙이라기보다, 교환 관계에서의 등가성 유지라는 협소한 의미로 작동하며(석승혜, 2020; 프롬, 2018), 상대 집단을 '규칙을 어긴 자'로 규정하는 순간 정치적 선택은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젠더 이슈는 앞서 논의한 배팅 구조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성공보수 구조'로 기능하며, 청년 주체들이 보편적 복지 수혜보다 확실한 성공 보수를

약속하는 젠더 정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된다.

주목할 지점은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정책적 지지를 넘어, 상대 주체의 공적 존재성을 부인하고 삭제하려는 극단적 배제의 양상으로 발현된다는 사실이다. 카림(Charim, 2019:159)이 강조하듯, 3세대 개인주의 주체들에게 정치 참여의 핵심은 집단적 위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주체로서 공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주관적 감각에 있다. 이 논리에서 젠더 갈등은 단순한 이익 다툼이 아니라 자신을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존적 투쟁의 장이 되며,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존재론적 위협감은 상대를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존재로 낙인찍어 공적 무대에서 소거하려는 억압 기제를 작동시킨다(바간, 2017). 남성 커뮤니티가 ‘뷔페니즘’이나 ‘해집’과 같은 신조어로 여성의 사회적 요구를 희화화한다면, 여성 커뮤니티는 군 복무를 ‘군강스’로 비하하거나 상대를 ‘도태남’으로 명명하며 시민적 자격을 박탈한다. 이처럼 혐오와 조롱을 동력 삼아 전개되는 젠더 정치는 선거를 승패가 갈리는 게임의 장으로 변모시킨다. 팬덤 정치에서 나타나는 강렬한 호전성은 단순한 감정적 열정의 과잉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공적으로 승인받기 위한 절박한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현대 정치 팬덤에 관한 기존 학계의 논의는 주로 ‘이대남’과 ‘개딸’로 대변되는 각 집단의 현상적 특수성을 포착하는 데 주력해 왔다(천관울·정한울, 2019; 김기동·이양주, 2021). 먼저 2030 남성에 관한 연구들은 박탈감의 정치화와 능력주의적 공정성 서사를 핵심 분석틀로 삼아, 이들이 양성평등 정책으로 인한 역사별을 경험한다는 ‘피해자 서사’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석했다(천관울·정한울, 2019; 김기동 외, 2021). 반면 2030 여성 팬덤에 관한 연구는 이를 가부장적 권위에 의존하려는 퇴행적 징후이자 감성적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시각(강준만, 2024; 이철희, 2024)과, 반페미니즘적 공격에 대항하는 능동적 주체화이자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 모델로 평가하는 시각(진주원, 2022; 성기신, 2022)이 대립한다.

기존 연구들이 이들을 ‘능력주의적 보수화’나 ‘감성적 포퓰리즘’으로 분절

하여 해석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세대적 조건 위에서 나타나는 ‘의미화와 실천의 분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년세대는 동일한 플랫폼 기술과 서바이벌 오디션의 문법을 공유하면서도, 정치인과의 관계 설정과 의미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실천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실제 담론과 정치적 실천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V. 연구 방법론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에서 나타나는 대리인의 선정, 의미화, 실천 양식의 성별 차이를 밝히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담론 분석은 단순히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를 측정하는 양적 내용분석의 한계를 넘어, 특정한 시공간 내에서 의미가 생산되는 체계를 규명하고, 행위자들의 사고와 행동이 어떠한 의미 체계 속에서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Fairclough, 1992:64; 차태서, 2020:143). 이 방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처럼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텍스트에서 지배적 의미 구조와 주체 형성의 논리를 포착하는 데 특히 유효하다.

본 연구는 텍스트를 단순한 의견의 집합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 구성 방식과 주체 형성의 실천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분석은 개별 텍스트의 내용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사 구조, 은유, 수사적 표현, 그리고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해석의 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청년세대가 ‘서바이벌 오디션’의 은유를 통해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정치적 대리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지지 대상과의 정서적 관계 맺기가 어떻게 담론적으로 구성되는지 분석한다.

분석 절차는 우선 수집된 게시글을 시기별로 배치한 뒤, 각 게시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서사, 감정 표현, 대리인에 대한 평가 언어, 집단 정체성의 구성 방식을 귀납적으로 유형화하였다. 이후 남성 중심 커뮤니티와 여성 중심 커뮤니티 간의 담론적 특징과 정서 구조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젠더적 분화의 양상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주체들이 정치적 대리인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경쟁 집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타자화하는지 그 담론적 실천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자료 수집

1) 분석 시기 및 시기 구분

본 연구는 청년 세대의 새로운 정치참여 양식과 젠더적 분화가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시기(2022.01.01~2023.09.30)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청년세대 정치참여의 젠더별 분기는 ‘대리인 선정-의미화-실천’의 분석 틀을 통해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단순한 지지 행위가 아니라, 특정 정치적 대리인을 선택하고 그 의미를 구성하며 행동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참여 과정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대리인 선정’은 자신의 욕망과 문제의식을 대리할 정치인을 선택하는 단계이며, ‘의미화’는 선택 이후 해당 대리인을 지지하는 이유를 정당화하고 자신과 대리인의 관계를 해석·구성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실천’은 이러한 관계 설정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조직화, 여론 형성,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참여 양식이 주요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하고 분화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분석 시기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제1시기: 대리인의 선정 국면(2022.01.01~2022.03.09)은 대선 직전까지 젠더 의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지지할 대리인을 선택하고 초기

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이다. 이는 이후 의미화와 실천이 전개되는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둘째, 제2시기: 의미화의 심화 국면(2022.03.10~2022.08.28)은 대선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대리인에 대한 집단적 서사가 구축되는 시기이다. 이 기간은 청년 남성의 지지 대상인 이준석의 윤리위 징계(당원권 정지)와 청년 여성의 지지 대상인 이재명의 당대표 선출 국면을 포괄한다. 본 연구는 이 시기에 형성되는 담론적 서사와 정서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제3시기: 실천 양식 분화 국면(2022.08.29~2023.09.30)은 대리인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팬덤의 실천 양식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이준석의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당내 고립 시기와 이재명의 검찰 소환 및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 시기이다. 이를 통해 청년 남성과 여성이 담론적·조직적 실천을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추적하였다.

2) 분석 커뮤니티 선정

분석 대상 커뮤니티 선정을 위해, 본 연구는 청년 남성과 여성의 ‘대리인’이 되는 정치인을 먼저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청년 남성 팬덤의 핵심 지지 대상으로 부상한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청년 여성 팬덤의 핵심 지지 대상으로 부상한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각 젠더 팬덤이 선택한 대리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준석은 반페미니즘 의제와 능력주의 담론을 전면화하며 청년 남성 유권자의 집합적 지지를 이끌어낸 인물로, 이재명은 반페미니즘 공세에 맞선 청년 여성들의 결집 과정에서 생존의 대리인으로 호명된 인물로 각각 기능했다(김지민·김경민·최고훈, 2023; 김한나, 2022). 분석 기간 동안 두 인물의 직함은 대선 후보에서 당대표 등으로 변화하므로, 이하 본문에서는 별도의 직함 표기 없이 이름으로만 지칭하도록 했다.

이러한 대리인 설정에 따라 남성 중심 커뮤니티는 ‘에phem코리아’와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로, 여성 중심 커뮤니티는 ‘더쿠’와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로 선정하였다.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석'을,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을 핵심 분석 키워드로 설정하였으며,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와 이재명 갤러리는 각 팬덤이 직접 형성한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에펠포리아와 더쿠는 각 성별 중심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임동균·김선호(2022)가 청년세대의 정치적 양극화와 혐오를 분석하는 데 동일하게 활용한 바 있다.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는 2022년을 기점으로 기성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의 성향과 구분되는 청년 여성이 대거 유입된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갖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이용자의 성별·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커뮤니티별 이용자층은 선행연구 및 커뮤니티의 맥락적 특성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3) 수집 및 표집 방법

자료는 커뮤니티 유형에 따라 수집 방식을 달리하였다. 에펠포리아는 '이준석'을, 더쿠는 '이재명'을 키워드로 검색한 게시글(댓글 포함)을 분석 기간 내 전수 수집하였다(에펠포리아 270건, 더쿠 92건).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와 이재명 갤러리는 각각 높은 추천 수를 획득한 게시글(개념글) 전체를 모집단으로 삼아 계통 표집하였다(이준석 갤러리 모집단 7,166건, 이재명 갤러리 모집단 93,198건). 분석 대상 기간 내 수집된 원자료는 남성 중심 커뮤니티 총 7,436건, 여성 중심 커뮤니티 총 93,290건이었다.

두 커뮤니티 간 자료 생산 규모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분석의 정밀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커뮤니티별 차등 계통 표집(differential 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답론 밀도가 높은 이준석 갤러리는 페이지당 100건 기준으로 매 5페이지(500건)마다 1페이지를 추출하였고, 게시글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재명 갤러리는 매 15페이지(1,500건)마다 1페이지를 추출하였다. 에펠포리아와 더쿠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수 수집하였다. 이는 특정 시점의 일시적 사건에 편중되지 않고

약 20개월간 지속된 정치 팬덤의 의미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균형있게 포착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편, 커뮤니티의 게시글 정렬 방식의 특성상 표집 과정에서 분석 기간 이전(2021년 12월 31일 이전) 및 이후(2023년 10월 1일 이후)의 게시글이 일부 포함되었다. 이에 게시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게시글을 직접 확인하여 제외하는 방식으로 분석 기간의 경계를 엄밀하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남성 커뮤니티 약 1,480건(에펠포리아 270건 + 이준석 갤러리 표집 약 1,210건), 여성 커뮤니티 약 6,500건(더쿠 92건 + 이재명 갤러리 표집 약 6,408건)으로 총 약 7,980건을 1차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된 표본의 제목과 핵심 키워드를 전수 검토하여, 연구 문제와 관련성이 낮은 단순 정보 게시글과 중복 내용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399건(남성 중심 커뮤니티 238건, 여성 중심 커뮤니티 161건)을 담론 분석의 최종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 399건은 해당 시기 각 커뮤니티의 지배적 담론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사 구조, 은유, 수사적 표현, 집단 내 공유된 해석 틀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V. 청년 세대의 팬덤 정치에서 의미화와 실천 방식

1. 제1시기: ‘픽(Pick)’의 선발 - 대리인 발굴과 초기 의미화

1) 픽의 선발: 능력주의의 분기와 욕망의 투사

청년세대의 정치적 선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공정’이다. 그러나 이때의 공정은 빈부격차의 완화를 지향하는 평등의 원칙을 배제한,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기계적 능력주의의 강화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기성 정치권의 할당제나 약자 우선 정책은 자신들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특권으로 규정되며 집단적 냉소와 불신을 낳았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공통의 토양 위에서 발현되는 능력주의가 젠더에 따라 분기한다는 사실이다.

청년 남성에게 능력은 무엇보다도 객관적 지표로 입증 가능한 성능(performance)의 영역이다. 이들에게 이준석은 가치나 이념의 대표자가 아니라, 압도적인 학벌과 정교한 정치 공학적 전략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을 갖춘 대리인으로 소비된다. 실제 커뮤니티 담론에서 그는 “전투 각을 잘 보는 제갈량(이준석 갤러리, 2022.01.08.)³⁾”으로 호명되며, 이는 정치를 가치 지향적 공론장이 아닌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게임의 장’으로 재구성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쭉 보면서 느낀건데 확실히 이준석이 싸우는법을 알음. 어디서 싸워야 유리하고 상대가 어느정도 들어왔을때 뺏쳐야하는지 이런 각을 잘봄

(이준석 갤러리, 2022.02.02.)⁴⁾

남성 팬덤이 이준석을 대리인으로 선발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반페미니즘 정서와 결합한다. 이들에게 이준석은 이른바 ‘역차별’에 대한 억울함을 세련된 언어와 논리로 대변해 주는 강력한 대리인이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그간 금기시되었던 남성 중심적 의제를 공적 정치의 중심부로 진입시킨 상징적 사건으로 수용되었다.

여가부 폐지가 굉장히 센 한 방인 이유....여가부 폐지는 이수정이나 신지에 영입한 걸 충분히 덮을 정도로 엄청난 개혁이고 큰 한 방이다....여가부 폐지 한 방으로 인해서 2030들 표심은 모조리 역전되었다고 보면됨. 여가부 폐지를 반복만 안하면 (2030세대를) 확실한 우군으로 회복가능하다.

(이준석 갤러리, 2022.01.07)⁵⁾

3)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난 이준석을 제갈량이라 믿는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1714&exception_mode=recommend&page=1233 (2022.01.08 게시, 2025.09.12 접속)

4)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쭉 보면서 느낀건데 확실히 이준석이 싸우는법을 알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3283&exception_mode=recommend&page=1231 (2022.02.02 게시, 2025.09.12 접속)

이 게시글에서 나타나듯, 이용자들은 이준석의 행보를 정치적 판도를 뒤집는 ‘전략적 이벤트’로 소비한다. 이들에게 정치적 지지란 가치 지향적 신념이라기 보다, 대리인의 역량을 통해 승리의 보상을 획득하려는 실용적 선택에 가깝다.

반면 청년 여성에게 능력은 학벌이나 스펙과 같은 계량화된 성능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돌파해내는 추진력과 성실함, 그리고 끝까지 버텨내는 독기 속에서 입증되는 실천적 역량으로 구성된다. 이들에게 이재명은 ‘소년공’이라는 밑바닥 출발점에서 행정적 성과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온 인물이며, 그가 보여주는 ‘추진력’과 ‘독기’는 기성 엘리트 정치가 갖지 못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으로 인식된다.

이재명 진짜 지독하게 살았네...이렇게 살아왔는데 대통령 후보까지된거잖아
ㄹㅇ독기 인정

진짜 딱 한 번만 대통령 시켜주자

(더쿠, 2022.03.04.)⁶⁾

이러한 지지는 결코 무조건적인 선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대선 초기 청년 여성은 이재명의 사생활 논란 등에 강한 거부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기성 세대의 ‘올드 페미니즘’부터 2015년 이후의 ‘래디컬 페미니즘’에 이르기까지, 내부적으로 서로를 분리하고 배척하는 파편화된 스펙트럼 속에 놓여 있었다(엄혜진, 2025; 정사강·홍지아, 2019; 신상숙, 2011). 그러나 이준석-윤석열 연합이 내세운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은 청년 여성에게 단순한 정책적 이견을 넘어, 자신의 안전과 지금까지 투쟁해서 얻어낸 시민적 위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청년 여성은 반페미니즘 정서로 무장한 남성들의 정치적 결집에 직면하여,

5)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여가부 폐지가 굉장히 센 한 방인 이유”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1697&exception_mode=recommend&page=1233 (2022.01.07 게시, 2025.09.12 접속)

6) 더쿠, “이재명 진짜 지독하게 살았네....” <https://theqoo.net/ktalk/2365019931> (2022.03.04 게시, 2025.09.07 접속)

그간 유지해온 페미니즘 내부 전선의 균열을 유예했다. “찍어만 줘라. 그다음 페미 박멸은 우리가 한다(이재명 갤러리, 2022.01.01)”⁷⁾라는 이들의 발화는 청년 남성의 결집으로부터 느낀 공포와 절박함을 보여준다. 분열되어 있던 청년 여성은 이재명이 보여준 추진력을 ‘반대 진영의 공격을 막아낼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심지어 대선 판도를 흔들던 대장동 리스 크조차 이들에게는 승리 이후로 유보해야 할 부차적 문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팬덤 내부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고 지지를 결집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다.

캠프측 오피셜이 뜨지도 않았는데 왜들 자꾸 이러는거냐....오피셜 뜨기 전까지 자꾸 왈가왈부하는건 강경 대응할것이고 반론 일체 안받는다
(이재명 갤러리. 2022.01.07.)⁸⁾

결국 이재명에 대한 여성들의 선택은 새로운 정치인의 발굴이 아니라,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존의 대리인’에 대한 배팅이었다. 주목할 것은 청년 남성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대리인을 아래로부터 발굴한 것과 달리, 청년 여성은 반페미니즘 공세라는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을 차악으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선 당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자”는 반응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조선일보 특별취재팀, 2022). 그러나 이후 청년 여성 지지자들은 기존에 접했던 이재명 관련 이미지와 실제 행보 사이의 간극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언론과 정치권이 구성

7)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찢겔 6시간 감상평”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217984>
(2022.01.01 게시, 2025.09.17 접속)

8)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사실이라는 오피셜이 뜨면 그때 자유롭게 비판하고 욕해라”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319477&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998 (2022.01.07 게시, 2025.09.17 접속)

해은 부정적 서사 자체를 다시 해석하려는 움직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전략적 선택을 넘어, 정치적 대리인과의 관계를 다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출발점으로 작동하게 된다.

2) 픽의 의미화: ‘도구적 셀럽 소비’와 ‘가족적 입적’

대중문화 영역에서 팬덤의 형성은 단순히 스타를 좋아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팬덤 문화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덕통사고(갑작스럽게 팬이 되는 현상)’ 이후, 팬들은 대상에게 다양한 의미와 서사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의미화 과정’으로 이어진다(Chen, et al., 2022). 이 의미화 과정은 스타를 완벽한 대상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인 동시에, 그 대상을 지지하는 나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활동이다(Jiang, SaRuLa & Hwang, 2020). 정치인의 선택 역시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행위이지만, 그 선택을 정당화하고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미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그러나 의미화의 방식은 젠더에 따라 극명한 분기를 보인다.

남성 팬덤에게 이준석 지지는 ‘지적 능력과 합리적 안목의 증명’으로 의미화된다. 이들에게 이준석 지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로 이해된다. 이준석 지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합리적 주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상대편 지지는 비합리적이고 감정에 휘둘리는 지적으로 열등한 선택으로 규정된다.

갤주가 말한 “합리적으로 처신하고 그 세대가 관심가질 만한 아젠다를 잘 이해하는 지도자에게 표를 줄 것” ← 이걸 못 지키고 쫓한테 표 주는 애들이 20대에 35.4%, 30대에 38.5%나 있다는 게 좇갈네ㄸ

(이준석 갤러리, 2022.03.03.)⁹⁾

9)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이준석의 2030정치학”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9043>
(2022.03.03 게시, 2025.09.12 접속)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펼치는 전략은 상식, 논리, 객관적,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선거는 비논리적, 감정적.비과학적인 면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는게 문제지...워낙 합리적인인간이라 비합리성에대한 이해가낮은건 어쩔수없는듯. 배워가야지

(이준석 갤러리, 2022.03.10.)¹⁰⁾

남성 팬덤에게 이준석은 대중문화의 셀러브리티와 유사하게 소비된다. 남성 팬덤은 이준석을 ‘준스톤’이라 부르며 유희적으로 소비하지만, 그 관계는 철저히 ‘투자자와 상품’ 혹은 ‘플레이어와 아바타’의 거리감을 유지한다. 이들의 의미화는 강한 효능감을 수반하지만, 그것은 현신이나 보호보다는 ‘성능에 대한 평가’와 ‘승률에 대한 배팅’의 감각에 가깝다. 즉 이준석은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대신 입증해 주는 ‘전략적 대리인’으로서, 지지자와의 관계는 감정적 결속보다 도구적 계약에 가까운 ‘투자자적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반면, 청년 여성에게 이재명에 대한 의미화는 대상에 대한 정서적 재해석을 넘어서 ‘관계의 전면적 재구성’으로 나타난다. 여성들은 이재명의 과거 행적과 정책, 블로그 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기득권이 덧씌운 프레임을 해체하는 작업에 나섰다. 기득권 언론이 부각시킨 ‘전과 4범’의 낙인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서사로 재구성된다. 성남지역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시민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서다 생긴 전과, 전직 시장의 특혜분양 비리를 파헤치다 얻은 전과 등, 해당 전과 상당수가 기득권과 맞서 싸운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다. 이러한 재발굴을 통해 ‘부도덕한 전과자’라는 프레임은 오히려 시민과 약자를 위해 투쟁한 ‘훈장’으로 전치된다.

이 사건(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¹¹⁾) 수사는 성남지청, 수원지검,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까지 매년 한번씩 했었습니다....거대한 기득권과

10)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나도 개준스기 지지하지만 한마디 하자면”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10138&exception_mode=recommend&page=1224 (2022.03.10 게시, 2025.09.12 접속)

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한 한사람의 힘으로 맞닥드리고 싶을 때 그 두려움을 아십니까?”...변호사 시절부터 한나라당/검찰/법원/조폭/토건세력에게 좌표찍혀서 싸워왔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임.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음. 다 돌파하고 홀로 여기까지 온 사람. 이젠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주자.

(이재명 갤러리, 2022.01.10.)¹²⁾

이 과정에서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20대 여자 지지자인데 참에 나도 걔주 오해했었어’ ‘나는 이재명을 이유 없이 싫어했었다’, ‘전향자입니다 반성합니다’와 같은 간증글이 쏟아졌다. 이러한 집단적 전향 서사는 단순한 의견변경이 아니다. “난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아프더라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도 안됨(이재명 갤러리, 2022.01.10.)¹³⁾”, “힘들게 자란건 알았는데 이렇게 자세하건 처음 알았음 ㅠ(더쿠, 2022.03.04.)¹⁴⁾”에서 보듯이, 극적인 정서적 전환을 수반한다.

이 전환의 핵심에는 도덕감정으로서의 부채감이 자리한다(김왕배, 2013). 검찰의 수사와 기득권의 공격 속에서 홀로 버텨온 ‘생존자’로서의 이재명 서사는, 지지자들에게 감사함·미안함·죄책감이 결합된 정서적 부채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도덕감정으로서의 부채감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보호와 책임에 대한 강렬한 의무감을 촉발하며 집단적 연대 행동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한다(신진옥, 2007; 굿원·제스퍼·폴레타, 2012:29).

이러한 정서는 “이제는 내가 함께한다 더이상 외로워 말아요”, “걔주를 지킨다고? 그냥 한몫이다”라는 발화¹⁵⁾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나며, 부채감이 보호

12)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걔주 눈물나는 영상”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349254&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965 (2022.01.10. 게시, 2025.09.17 접속)

13) 상동

14) 더쿠, “이재명 진짜 지독하게 살았네....” <https://theqoo.net/ktalk/2365019931> (2022.03.04 게시, 2025.09.07 접속)

15) 각주 14) 게시글의 댓글

의지로, 나아가 대리인과의 일체감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은 이 과정에서 더 이상 객관적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기득권에 의해 고통받는 ‘우리 중 하나’로 재구성되며, 여성 팬덤은 스스로를 그의 곁을 지켜야 할 보호자로 위치시키는 가족 서사 안으로 편입된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축적된 정서적 부채감과 보호 의지는 단순한 감정 공유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유세 현장에서의 집합적 열광으로 폭발하는 동력이 된다. 여성 팬덤의 감정적 몰입은 2015년 혜화역 시위에서 경험했던 여성 주체들의 연대 기억을 정치적 현장으로 소환한다. 혜화역 시위는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은 평범한 여성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결집하여 두려움 속에서도 연대감을 경험하며 능동적 주체로 전환된 사건이었다(정사강·이재원·박동숙, 2021). 이재명 유세 현장에서 나타난 자발적 결집과 집합적 열광은 이러한 연대의 원체험을 정치적 맥락에서 재활성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유세같은데 나갈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의 뭔가가 계속 끓어오르더라... 결국 대전유세까지 갔다왔어. 2030여성들 각성할때되면 진짜 무서움. 덕질도 덕질인데 혜화역시위때도 인파 장난 아니었잖아. 이번에 또 한번 그 각성이 시작된거임ㅋㅋㅋ

(이재명 갤러리, 2022.03.08.)¹⁶⁾

20년전 노사모들이 이런 기분이었나?...나도 오늘 상록수 따라 부르며 몇 번씩 눈물이 솟구쳤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애써 일군 민주주의를 우리가 꼭 지키자

(이재명 갤러리, 2022.03.08.)¹⁷⁾

16)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청계광장 유세 후기 (tmi, 개인감상, 긴글주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723245&page=13306> (2022.03.08. 게시, 2025.09.17. 접속)

17)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20년전 노사모들이 이런 기분이었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723191&page=13307> (2022.03.08. 게시, 2025.09.17. 접속)

나아가 청년 여성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기억에도 접속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사모’가 경험한 패배와 상실의 서사는, 여성 팬덤에게 이재명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채감과 공명하며 집합적 기억으로 소환된다. 이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닌, 노사모가 경험했던 헌신과 좌절의 정서를 이재명 팬덤의 현재적 실천과 증첩시키는 정서적 동일화 과정이다.

이러한 부채감과 연대 기억이 수렴하는 지점에서, 이재명을 ‘지켜주자’는 수사는 단순한 감상주의를 넘어선다. 이는 ‘우리가 너를 발굴하고 입적시켰으니, 이제 우리가 너를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주체적 양육 의지’의 표현이다. “사방에서 후드려 패는데 우리는 깰주 믿고 응원해야 해....삐뚤어진 길은 가는 것 아니면 우리가 뒷배가 되어야 해 깰주 인생 말년까지 지켜주고 싶다 (이재명 깰러리, 2022.03.08.)¹⁸⁾”는 그러한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여성 팬덤은 이재명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그 보호의 주체로서 자신들을 위치시킨다. 대리인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보호받는 자가 아니라 보호하는 자로의 전환, 이것이 여성 팬덤의 ‘양육자적 정체성’의 발견이다.

요컨대 제1시기에서 남녀가 픽을 선택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은 뚜렷하게 분기한다. 그 분화의 출발점은 ‘능력’에 대한 상이한 정의에 있다. 청년 남성에게 능력이 승리를 위한 객관적 성능(학벌, 토론 능력)이라면, 청년 여성에게 능력은 실존적 위기를 돌파할 실천적 추진력이다. 이러한 상이한 능력 기준 속에서 청년 남성은 이준석을 정치 게임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도구적 대리인’으로 확정하며, 그를 선택한 자신의 합리적 안목을 지적 우월감으로 전환하는 ‘투자자적 정체성’을 강화해 나간다. 반면 청년 여성은 반페미니즘의 공세가 초래한 실존적 위협 속에서 이재명을 ‘생존의 대리인’으로 선택하고, 정서적 부채감을 매개로 그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재구성해

18) 상동

나간다. 이 과정에서 여성 팬덤 내부에서는 대리인을 가족 서사 안으로 편입시키고 돌보고 성장시키려는 양육자적 관계 맺기의 단초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동일한 서바이벌 오디션의 배팅 구조 속에서도 청년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리인과 관계를 맺으며, 이는 이후 정치참여의 조직화 방식과 실천 양식이 분화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작동하게 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과정 전반에서 플랫폼이 핵심적인 매개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터너(Turner, 2018)가 지적하듯, 플랫폼 환경은 대중이 아래로부터 직접 셀러브리티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청년 남성에게 이준석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부상한 정치인이었다. 반면 새로운 정치인의 발굴이 아닌 기성 정치인 이재명을 선택한 청년 여성에게 플랫폼은 이재명을 둘러싼 부정적 프레임에 대응하여 관련 정보와 해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구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청년 여성 지지자들은 의혹과 비판 담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집단적으로 축적·확산하며, 대리인에 대한 정서적 결속과 재의미화를 강화해 나갔다. 즉 플랫폼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대리인의 발굴과 의미화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조건이다.

2. 제2시기: 의미화의 심화 - 서사의 고착과 팬덤의 조직화

1) 선거 결과와 효능감의 분기: 게임 승리의 도취 vs 패배 이후의 각성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는 남성 팬덤에게 단순한 정치적 승리를 넘어 자신들의 전략적 우월성이 입증된 사건이었다. 이들에게 이준석은 학벌과 데이터 전략으로 기성 정치의 문법에 균열을 낸 ‘능력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 소비되며,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해주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는다. 남성 팬덤은 이준석이 설계한 ‘세대포위론(노인세대와 청년세대가 중간의 진보적인 4050세대를 포위하여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전략)’이 실제 승리를 견인했다는 사실에 열광하며, 스스로를 선거판의 결과를 좌우한 핵심 지지층으로 자처한다.

이준석 대표의 반페미 전략 없이는 윤석열당선인의 박빙승부는 불가능했다! 국민의힘이 물에 물 탄 듯 페미도 좌파 조직도 조화롭게 포용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당론은 깰주공이 크다임

(이준석 갤러리, 2022.03.11.)¹⁹⁾

이 시기 선거 승리로 극대화된 효능감은 단순한 기쁨에 머물지 않고, 기계적 공정성의 논리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남성 팬덤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호소하던 진보 정치의 패배를 당연한 귀결로 규정하고, 예외 없는 평등이라는 잣대를 여성과 진보 진영을 넘어 사회적 약자 전반으로 투사했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둘러싼 담론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준석이 이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며 공권력 집행을 강조하자, 남성 팬덤은 이를 약자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공정한 정치’의 실현으로 환호했다. 이러한 기계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부모 세대와 달리 남성으로서의 특권을 체감하지 못한 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생만 강요받아왔다는 박탈감에서 비롯된다. ‘마이내리티 정체성(천관울·정한울, 2019)’을 내면화한 청년 남성에게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여되는 무조건적 우선권은 또 다른 역할이며, 전장연 시위에 대한 이준석의 단호한 대응은 예외 없는 동일한 규칙의 적용, 즉 기계적 공정의 실현으로 수용되었다.

역사안을 휠체어로 사람 퍽 퍽 치고다니면서 비키라고 소리지르고 욕하던데 그게 약자임? 열차출발못하게 휠체어 깔아놓고 깡판행패 부리는게 그게 약자임?...그건 약자가 아니고 범죄자임 법아래 평등하게 똑같이 감옥가야됨 지하철 통행 막고 시위하는건. “불 법 시 위”

(이준석 갤러리, 2022.03.28.)²⁰⁾

19)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이준석 대선전략에 대한 글”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10417>
 (2022.03.11. 게시, 2025.09.14. 접속)

“준석이는 ㄹㅇ 감이 존나 좋다... 정치인치고 젊으니까 이런 공격 정치가 가능함ㅋㅋ 나이 들면 체면 차리느라 방어정치밖에 못 하는데, 이견 약자가 아니라 범죄자라고 딱 잘라 말하잖아.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정치지.”

(이준석 갤러리, 2022.03.26.)

이들에게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범죄자’이자 ‘공정을 해치는 특권층’으로 재정의되었다. 대리인의 거침 없는 발언은 팬덤 스스로 ‘미움받을 용기’로 명명하며 수용되었으며, 그동안 표출하지 못했던 박탈감을 공적으로 관철해주는 강력한 정서적 해방감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남성 팬덤의 승리에 대한 도취의 기저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기성 보수 주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선 승리의 공로와 지분을 ‘우리(청년 남성)와 이준석’의 결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는 언제나 철회 가능한 ‘조건부 배팅(contingent betting)’의 성격을 띠었다. 또한 당내 주류 세력이 자신들과 이준석을 배제할지 모른다는 방어적 심리는 승리 직후에도 아군과 적군을 끊임없이 식별하려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나는 걔주보고 윤(윤석열) 찍은거라 윤은 무지성지지는 못하겠다. 애당초 윤을 안믿음 ㅇㅇ 믿기엔 경선 기간에 보여준 이미지가 너무 발암... 상대가 찢새끼라 좇갈고 걔주 생각해서 투표장 간거지 윤 자체가 좋아서 투표장 간 것도 아닌데 무슨 무지성 지지를 할 수 있겠나 싶음

(이준석 갤러리, 2022.03.25.)²¹⁾

-
- 20)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이준석당대표가 잘못한게 뭐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12233&exception_mode=recommend&page=1218 (2022.03.28. 게시, 2025.09.14. 접속)
- 21)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근데 나는 걔주보고 윤 찍은거라 윤은 무지성지지는 못하겠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11783&exception_mode=recommend&page=1219 (2022.03.25. 게시, 2025.09.14. 접속)

‘이대남 반감유도조’가 나타나서 2030 남성들을 국힘에서 떼어내는 전략적 목표를 위해... 날조 선동 글/댓글들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대량적으로 작성하여 반페미 이대남에 대한 반감을 유도하고 내분을 확대시킨다.

(이준석 갤러리, 2022.03.26.)²²⁾

첫 번째 게시글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이준석이라는 대리인에 대한 배팅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두 번째 게시글은 승리 직후에도 내부 적군 식별과 음모론적 경계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상의 사례는 지지 대상인 정치인을 자신의 이해관계와 효능감을 실현해 줄 ‘수익률 높은 투자처’로 인식하는 청년 남성 팬덤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이들에게 정치인은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대리인의 성과와 자신의 지분이 보장될 때만 유효한 계약적 관계에 가깝다. 결국 이는 정치인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기보다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그 성과에 따른 배당(정치적 성과 지분)을 요구하는 ‘투자가적 정체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승리에 도취된 남성 팬덤과 달리 여성 팬덤은 패배의 허탈함, 좌절, 분노를 순식간에 씻어 내고 다시 일어나서 향후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으로 변화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번 일 통해서 깨달은 점들과 앞으로의 다짐들” 장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여초에서 짤주 이미지 ㄹㅇ 안 좋았잖아. 아니 안 좋은 것을 넘어서 극도로 혐오를 했지....이재명 악마화 진실부터 그간 논란들의 진실,해명,사건의 오해,언론의 진실 등등...난 이 모든 진실 알자마자 내가 더 화나고 수치스럽더라, 여초들에서 온갖 패배로 인해 쓴맛을 맛보고..화나고 무기력해지고 모두가..그렇지만 바로 다시 일어나서 더욱 단단해져가는 여자들 보고 나도 신기해졌어.

(이재명 갤러리, 2022.03.13.)²³⁾

22)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특하면 ‘이대남 버리자’는 개복치들도 찢갈이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11860&exception_mode=recommend&page=1219 (2022.03.26. 게시, 2025.09.14. 접속)

23)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이번 일 통해서 깨달은 점들과 앞으로의 다짐들.”

여성 팬덤에게 이재명은 오해와 악마화의 프레임에서 구출해야 할 대상이자, 뒤늦게 발견한 ‘정치적 보호자’로 재규정된다. 미디어가 구축한 이미지를 거두어내고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깨달음은 곧 지켜주지 못한 대상에 대한 집단적 부채감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부채감은 단순한 연민에 그치지 않고 ‘권리당원 가입’이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입당은 과거 1-2세대의 ‘정당 일체감’과는 궤를 달리한다. 이들에게 정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자, 자신들의 지지세를 과시함으로써 정당을 압박하는 수단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개인에 대한 정서적 결속은 더욱 심화된다.

그간 행한 일들을 보게 되고 열심히 추진한 일들을 보게 되고 그럴수록 내 안의 ‘이재명’에 대한 마음이 더 거대해지더라ㅋㅋㅋㅋ 이제 우리 아빠보다 사랑할지경임 진심으로....다음 생이 있다면 내가 이재명의 딸이 되어 힘든 아빠를 늘 포옹하고 항상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이재명 갤러리, 2022.03.13.)

쌤 아빠: 아가 잘 자요...진짜 나 걔주 대통령 세상에 살고 싶다고 ㅠㅠ ㅠㅠㅠㅠ...완전 서weet한 쌤 아빠

(이재명 갤러리, 2022.03.20.)²⁴⁾

이상은 정치적 대상을 가족 서사 안으로 편입시키며 강한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선 패배는 여성 팬덤에게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을 정치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시키지 못한 서사적 비극으로 수용된다. “걔주 대선질때 진짜 아버지 돌아가셨을때만큼 울음(이재명 갤러리, 2022.03.26.)²⁵⁾”이라는 고백은 아이돌 팬덤의 용어로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778600&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695 (2022.03.13. 게시, 2025.09.19. 접속)

- 24)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쌤 아빠: 아가 잘 자요 _____”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805013&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687 (2022.03.20. 게시, 2025.09.19. 접속)

‘한을 쳐먹은’ 상태, 즉 지지 대상의 실패를 자신의 상실로 내면화하는 극도의 정서적 몰입을 보여준다. 이재명의 대선패배는 여성 팬덤에게 각성으로부터 더욱 공세적 태도로 ‘흑화’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어제는 정말 지옥같았다. 누워도 잠이 안와 기어이 밤을 새고 밥도 못먹었는데 이렇게 부활하는거보고 힘이 난다. 그리고 결심했다. 요즘 유행하는 흑화를 해볼라고

(이재명 갤러리, 2022.03.10.)²⁶⁾

혁명 모드 시작됨...아직 취임전인데 곧 핫볼된다...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서초대첩도 저렇게 하다가 100만 이상 모임 진심 곧 핫볼됨

(이재명 갤러리, 2022.03.26.)²⁷⁾

여성 팬덤의 흑화는 두 방향의 적대 대상을 향한다. 하나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보수 후보를 선택한 ‘계급배반투표’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패배 이후에도 도덕주의 프레임에 안주하며 전략적 쇄신을 거부하는 기성 민주당이다. ‘부활’, ‘혁명’, ‘핫볼’, ‘대첩’으로 표상되는 이 언어는 단순한 감정적 분노의 표출이 아니다. 이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느슨한 연결을 넘어, 정당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전투적 팬덤으로의 전환 선언이었다. 즉 여성 팬덤은 더 이상 대리인을 보호하는 방어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실패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내면화하며 직접 정치적 개입과 조직화에 나서는

25)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꺾주 대선질때 진짜 아버지 돌아가셨을때만큼 울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811062&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680 (2022.03.26. 게시, 2025.09.19. 접속)

26)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어제는 정말 지옥같았다. 그리고 부활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763207&page=13108> (2022.03.10. 게시, 2025.09.19. 접속)

27)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혁명 모드 시작됨”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811491> (2022.03.26. 게시, 2025.09.19. 접속)

‘양육자적 정체성’의 전투적 실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2) 대리인 관계의 심화: 조건부 충성 vs 헌신적 양육의 확정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자, 남성 팬덤의 자신감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 이준석은 국회 세미나에서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2022.06.28.)”과 같은 게임 언어를 활용해 “2030 정신으로 공정과 가족의 가치를 바로세운다”는 메시지로 청년 남성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영달보다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소신을 전하며 청년 남성들이 꿈꾸는 변화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남성 팬덤은 이준석이 주도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eople Power Aptitude Test, 이하 PPAT)와 공천 개혁을 승리의 핵심 동력으로 해석했다. PPAT는 ‘깜깜이 공천’과 ‘줄 세우기’를 없애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투명하게 발굴하겠다는 능력주의 기조를 표방했으며, 청년 남성에게 역차별의 박탈감에서 벗어나 투명한 경쟁이 복원되는 신호로 수용되었다.

이준석 중심의 서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남성 팬덤은 두 방향의 적을 규정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기성 세력인 이른바 ‘구태’를 능력 없이 욕심만 많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준석의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타자화했다. 동시에 여성 팬덤을 ‘생계형 전문 폭도들’이나 ‘뇌가 절여진 페미니치’로 철저히 악마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지가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서사를 공고히 했다. 이러한 내외부의 적대 구도 속에서 이준석은 기성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도 남성의 희생을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인물로 의미화되며, 팬덤과의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했다.

페미니치와 구태들 쳐내는 방법 세력을 확장해서 구태쓰레기들 몰아내고 페미니치년들이 만든 말도 안되는 남성혐오법안 다 개정해야됨 안그러면 블루투스 성추행범으로 몰리고(실제사건) 한번도 본적이 없는 여자한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가야됨(실제사건)

(이준석 갤러리, 2022.05.31.)²⁸⁾

개딸들 활동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만진당에서 보찌 받았을 듯
생계형 전문 폭도들임...민주주의 파괴시키는데

(에phem코리아, 2022.06.01.)²⁹⁾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안철수 인수위의 여가부 폐지 공약 후퇴
조짐과 과거 페미니스트 행보를 보인 인사(신지예)의 영입설이 불거지자 이
들의 효능감은 급격히 ‘불안 섞인 분노’로 전환되었다. 남성 팬덤에게 이준
석과 윤석열의 관계는 승리를 안겨준 대가로 여가부 폐지와 역차별적 법안
개정을 받아내야 하는 조건부 계약 관계였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라는 핵심 공약을 흐지부지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청년 남성은 이를 계
약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기성 정권과의 심리적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보수를 위하여 1020 니들이 희생하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던데 니들
그지랄해서 선거 4연패한거 모름?...신지예 꺾고도 정신 못차리네...이
준석이 참전하지 않는 이상 일이 존나 커질거 같진 않지만 재수없이 포
텐의 주 여론으로 잡히면 그땐 진짜 막을 방법이 없다

(이준석 갤러리, 2022.03.26.)³⁰⁾

지선 끝나고 당대표 전당대회 있음 간쟁이 저지해야됨 총선망할수있음

(에phem코리아, 2022.06.01.)³¹⁾

-
- 28)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페미니즘과 구태들 처내는 방법”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19682&exception_mode=recommend&page=1204 (2022.05.31.게시, 2025.09.14. 접속)
- 29) 에phem코리아, “개딸들 활동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https://www.fmkorea.com/4679577721> (2022.06.01.게시, 2025.09.08. 접속)
- 30)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뽕코정겅 여론쫓겨서 윤석열이 2030 먹고 버렸다고
가버리면 다 끝나는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11836&exception_mode=recommend&page=1219 (2022.03.26.게시, 2025.09.14. 접속)
- 31) 에phem코리아, “2023년도에는 따로 선거없음?”
<https://www.fmkorea.com/4679254830> (2022.06.01.게시, 2025.09.08. 접속)

이러한 거리두기는 청년 남성의 대리인인 이준석이 당내 고립을 겪을 때 ‘이준석의 말을 듣지 않아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지며, 대리인의 무결성(integrity)을 방어하는 동시에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는 전략적 근거가 된다. 결국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언제든 배팅을 철회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했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며 여성 팬덤의 실천 양식은 대중문화 팬덤 3.0의 양육자 모델을 정치 영역에 이식하며 고도로 전략화된 양상을 띤다. 남성 팬덤이 승리의 감각에 취해 이준석을 도구적 대리인으로 소비하는 데 머물렀다면, 여성 팬덤은 이재명을 차기 대선에서 승리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지지자들은 단순히 스타를 추종하는 팬의 위치를 넘어, 대리인의 성공을 위해 직접 기획·홍보·조직화에 개입하는 전략적 기획자로 전환되었다.

여성 팬덤이 이토록 공세적인 기획자로 나선 배경에는 두 가지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는 이재명의 당내 고립이다. 당시 이재명은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주류인 친문(親文) 및 기성 계파로부터 ‘비주류’ 혹은 ‘이단아’로 취급받으며 심각한 정치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대리인의 취약성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니면 그는 당내에서 고사당할 것’이라는 강렬한 양육자적 위기감을 촉발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성 민주당의 전략적 무능에 대한 불신이다. 여성 팬덤은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민주당의 낡은 ‘도덕주의 프레임’에서 찾았다. 이들은 상대 진영의 이준석이 보여준 실익 중심의 선거 공학과 공격적인 프레임 전환 능력을 목격하며, 민주당 역시 약자 보호라는 당위에서 벗어나 표가 되는 실용주의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믿었다. 여성 중심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준석 같은 인물을 우리도 영입해야 한다’, ‘저쪽의 전략이 부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직접적 산물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리인을 차기 권력으로 이끌기 위한 일차적 관문으로 ‘민주당의 체질 교체’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위 양식을 실행에 옮겼다.

첫째, 기존의 ‘약자 중심 정당’이라는 당위적 프레임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

한다는 냉정한 판단 하에, 지지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는 ‘유능한 정당’으로의 재편을 주장한다. 이는 이재명을 향한 포퓰리즘 공세라는 논리적 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실익 중심의 유능함’이라는 새로운 정당 프레임을 지지자들이 아래로부터 직접 설계하고 유통한 행위였다.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선한 자를 위한 정당이 되길! 약자 = 선 이 프레임은 제발 버렸으면 한다... 민주당이 진짜 표 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비중을 조금 올렸으면 함... 그래야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에서도 안 밀림.

(이재명 갤러리, 2022.03.12.)³²⁾

나아가 이들은 당내 동료를 지키지 못하는 관성적 정치를 비판하며, 최강욱 등 이재명의 우군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 게시판을 점령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정당 내부의 역학 관계를 직접 조율하려 시도했다.

미리 입성한 권당계이들아아 구속 이런거 신경쓰지 말고 최강욱 밀어라.. 민주당도 이제는 동료를 지킬때가 되었지..언제까지 불쏘시개 놀이만 할려...계속 계속 갈수록 더 미친짓만 하는것들한테...

(이재명 갤러리, 2022.03.26.)³³⁾

이러한 시도는 기성 민주당 주류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권리당원으로서의

32)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선한 자를 위한 정당이 되길!”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777202&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695 (2022.03.12. 게시, 2025.09.19. 접속)

33)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권리당원 게이들아!!!당계에 최강욱 원내부대표 글썽쓰자~~”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811367&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680 (2022.03.26. 게시, 2025.09.19. 접속)

가입 확대를 통해 내부로부터 압박하려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둘째, 여성 팬덤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영업 활동을 강화했다. 주변인을 지지자로 포섭하는 ‘발갈기’를 단순한 응원이 아닌 실적 중심의 영업 활동으로 인식하고, 대리인을 향한 후원금 모금을 ‘양육비’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대리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자금 동력 확보에 집단적으로 매진했다.

내 인생 최초 당원가입을 시키다니... 다같이 께주 지키자!!!!!!

(이재명 갤러리, 2022.03.10.)³⁴⁾

께주는 쓸 곳이 많은데 후원금이 너무 작음... 아니, 여기저기 돌아댁기면서 좀 뭐도 먹고 운동원들도 좀 쓰고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작아... 1억 5천만원이 뭐냐고? 아오.”

(이재명 갤러리, 2022.05.17.)³⁵⁾

이러한 행위들은 팬덤 3.0의 ‘적극적 관여’ 원리가 정치적 실천으로 전이된 결과다. 여성 팬덤은 ‘내가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비장미를 동력 삼아, 당내 비토 세력을 향한 집단행동을 대리인을 중심으로 정당 내부 질서를 재구성하는 정당한 방어 기제로 정의했다.

결국 여성 팬덤의 양육자적 기획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당권의 중심부로 밀어 올리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노동(political labor)으로 진화한 것이다. 대중문화 팬덤에서 스타의 성공을 위해 스밍(streaming, 음원 순위를 올리기 위한 반복 재생), 총공(총공격, 팬덤이 특정 시간에 일제히 투표·댓글·공유 등에 집중 참여하는 행위)을 이어가는

34)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내인생 최초 당원가입을 시키다니...”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763262&page=13107> (2022.03.10.게시, 2025.09.19. 접속)

35)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후원마감 이재명 반응”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857269&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636 (2022.05.17.게시, 2025.09.19. 접속)

행위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정동적 노동(affective labor)으로 전환되듯(방희경·오현주, 2018), 여성 팬덤의 후원(정치활동을 위한 자금 모금), 발걸기(주변인을 지지자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 설득 및 영업 활동)와 같은 정치적 실천 역시 동일한 구조적 전환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분산된 감정을 실시간으로 연결·증폭하며 정서적 결속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작동한다. 파파카리시(Papacharissi, 2016)의 ‘정서적 공중(affective publics)’ 개념이 보여주듯,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여성 팬덤은 플랫폼을 통해 상호적 감정에 기반한 강한 결속감을 형성하고, 이를 조직화된 정치 행동의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3) 제도 권력과의 충돌: ‘토사구팽’의 냉소와 이탈 vs ‘혁명적 당대표’ 선출과 전유

제2시기의 종결은 남녀 팬덤에게 각각 상반된 정치적 귀결을 안겼다. 먼저 남성 팬덤의 동력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치 6개월’이라는 초유의 징계 사태(2022.07.08)를 기점으로 급격히 와해된다. 윤핵관과의 권력 투쟁 끝에 불거진 이 사건은 남성 팬덤에게 ‘기득권에 의한 혁신 세력의 토사구팽’이라는 강력한 피해 서사를 제공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들의 거대한 분노가 여성 팬덤과 같은 조직적인 실천이나 기구 내부로의 집단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남성 팬덤은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드러난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파동과 윤리위 징계 시진으로 ‘친윤’에서 ‘반윤’으로 급격히 선회한다. 이들은 대선과 지선의 연이은 승리를 견인했던 주인공 이준석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는커녕,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출신 권력과 ‘윤핵관’이라 불리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축출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행된 윤리위 징계를 ‘법적 근거도 없는 인민재판’으로 규정하며, 기성 권력이 젊은 정치인 하나를 잡자고 탄압하고 있다는 논리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순교자로 만들 생각인가 요즘 정치판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분노를 넘어 아예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과연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지방선거까지 압승으로 이끈 당대표가 고작 한 달 만에 토사구팽 당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에phem코리아, 2022.07.01.)³⁶⁾

남성 팬덤은 정당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남성에게 불리한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게임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적 공생관계를 취했기 때문에, 권력을 준 윤석열과 윤해관의 배신이라 보았고 분노감은 극에 치달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성 권력을 향한 분노가 조직적 결사로 행동으로 전환되진 못했다.

어제는 짜증났는데 오늘 마음 굳힘 징계가 나오면...정치에 관심 안 가진 병신들 뒤지게 만드는 데만 집중함...전국단위 선거에는 둘 다 안 찍고 무효표 낼 거임..유학이민 노리기 나도 내 살길은 마련해야지

(이준석 갤러리, 2022.06.22.)³⁷⁾

진지하게 뽕표 징계받고 나가려면 윤카도 지지못함 전당대회 똥뿌리고 총선 경선도 똥뿌리고 민중당찍을건지 고민할거임

(이준석 갤러리, 2022.06.21.)³⁸⁾

이상과 같이 남성 팬덤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를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게 개준스기 걱정(이준석 갤러리, 2022.06.23.)³⁹⁾”이라며, 정치에 관심을

36) 에phem코리아,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순교자로 만들 생각인가”

<https://www.fmkorea.com/4778021342> (2022.07.01.게시, 2025.09.08. 접속)

37)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나는 스탠스 정했다 어제는 짜증났는데 오늘 마음 굳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24483&exception_mode=recommend&page=1187 (2022.06.22.게시, 2025.09.15. 접속)

38)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진지하게 뽕표 징계받고 나가려면 윤카도 지지못함”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24275&exception_mode=recommend&page=1188 (2022.06.21.게시, 2025.09.15. 접속)

39)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어제 좀 현타 많이왔는데 다시 좀 괜찮아짐”

끊고 자신의 삶을 먼저 챙기겠다는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조건부 배팅을 철회할 것을 다짐한다. 물론, 청년 남성들 중 일부는 이준석을 구하기 위한 징계 규탄 시위를 기획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갈지말지 생각중”, “좀 갑작스러운 면이 있지”, “근데 홍보가 많이 필요해 보임”이라는 미지근한 태도를 취했고, 실제 현장에는 참여 인원이 60여 명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남성 팬덤은 정당 내부에서 투쟁하여 주도권을 탈환하기보다, ‘정치적 무관심’과 ‘조건부 배팅을 철회’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적 우월감을 보존하려 했다. 이들은 ‘우리가 만들어준 승리이므로 우리가 회수하겠다’는 논리 하에 기성 정당 체제로부터 심리적으로 이탈했으며, 이는 승리의 주역에서 ‘냉소적 관조자’로 퇴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이후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정당 기구를 전유하며 당권을 장악해 나가는 여성 팬덤의 행보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2022년 8월 28일, 이재명의 당대표 당선과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은 여성 팬덤이 정당이라는 공적 기구와 그 의사결정 체계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시기 여성 팬덤의 효능감은 정점에 도달하며, 이는 대선 패배로 상실되었던 정치적 자부심을 대리인의 권력 장악을 통해 보상받는 회복적 의미를 갖는다. 남성 팬덤이 이준석의 당대표 지위가 위태로워지자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 거리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 여성 팬덤은 정당 내부의 공식적 절차에 깊숙이 개입하여 제도적 결과를 산출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이준석의 공천권 등 권한을 축소하려던 기성 제도 권력(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시도를 대리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응하여 당원 게시판 점령 및 대규모 집단 의사표시를 통해 공적 기구의 자율적 결정을 압박하고 수정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행된 ‘113 전략’(최고위원 선거 시

대리인의 핵심 우군에게 표를 집중시키는 전략적 분산 투표 전략)은 팬덤 3.0의 기획자적 속성이 고도로 정교화된 당내 선거 공학으로 진화했음을 입증한다.

자 계산해보자. 정청래는 우리가 안 밀어줘도 최고위원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는 박찬대, 장경태 맘 편히 밀어줘도 된다... 잼겔은 찬대, 경태에서 그치면 안 되고 다른 커뮤도 찬대, 경태 하도록 여론 바뀌도록 노력해야 함.”

(이재명 갤러리, 2022.07.30.)⁴⁰⁾

당대표 선출에서 77.77%라는 압도적 수치는 비주류로 취급되던 이재명을 배제하려던 정당 내 기존 권력 질서에 대한 팬덤의 승리 선언이었다. 이는 팬덤 정치가 단순한 지지 세력을 넘어, 정당의 인적 구성과 제도적 운영 원리를 자신들의 감정적 지향에 맞춰 재구조화할 수 있는 주역이 되었음을 상징한다고 여겼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한거 봤음? 울컥하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비주류에 다 핍박받고 무시받고 거기다 더해서 중상모략질에 악마화에 당하던 겔 주인데. 역대 최고득표율에 당선되서 이렇게 대한민국 1야당 공식적인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에 울컥하고... 맨날 똥파리들한테 이젠 출당시켜라 지랄발광 민주당 인간들한테 공격받은 세월이 언제였는데 지금은 역대 최대 지지를 받은 당대표. 감개무량이 이런걸 두고 하는거 같음. 역시 진심은 통해. 우리 잼칠라

(이재명 갤러리, 2022.08.29.)⁴¹⁾

-
- 40)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자 계산해보자(우리의 최고위 전략)”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915653&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591 (2022.07.30.게시, 2025.09.20. 접속)
- 41)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오늘 최고위원 회의한거 봤음? 울컥하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945842&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545 (2022.08.29.게시, 2025.09.20. 접속)

요컨대, 제2시기는 ‘조건부 배팅’에 의한 이탈과 ‘기획적 양육’을 통한 전유로 극명히 대비된다. 남성 팬덤은 이준석을 승리를 위한 ‘전략적 대리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직무정지라는 위기 상황에서 냉소적 태도를 취했다. 이는 청년 남성들이 느끼는 ‘억울함’의 정서가 공적 해결책을 찾는 집단적 에너지로 전환되기보다, 보상 체계가 무너진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며 사적인 생존 전략으로 회군하는 ‘냉소적 주체’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정수남, 2021). 반면, 여성 팬덤은 이재명의 패배를 계기로 ‘헌신적 양육자’를 자처하며, 기획자이자 홍보 주체로 진화하여 제도 정치 내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대비는 플랫폼이 감정을 집합적 행동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플랫폼은 동일한 감정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증폭시키는 매개로 작동하지만, 그 효과는 남녀에 따라 상이하게 발현되었다. 청년 남성 팬덤의 억울함과 냉소는 플랫폼 내부에서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과 조소로 분산되며 파편화된 이탈로 귀결되었다. 반면 여성 팬덤의 미안함과 분노는 강한 상호적 감정과 결속감을 형성하며 조직화된 정치 행동의 동력으로 전환되었다. 제스퍼(Jasper, 2012)는 집합행동이 참가자들 내부의 친밀감·연대감과 같은 ‘상호적 감정(reciprocal emotion)’과, 외부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 같은 ‘공유된 감정(shared emotion)’이 서로를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여성 팬덤에서는 이재명을 향한 외부의 공격과 당내 고립에 대한 공유된 분노가 팬덤 구성원 사이의 상호적 유대를 강화하며 조직화된 행동주의의 기반으로 작동한 것이다.

3. 제3시기: 실천 양식의 분화 - 대리인 위기와 행동주의의 극단화

1) 위기 대응 전략의 분기: 게임 오버 선언 vs 내부 정화의 본격화

대리인이 당내 고립과 사법적 압박이라는 위기에 처하자, 남성 팬덤의 전략적 대응은 체념과 관조로 선회했다. 특히 당의 비대위 전환이 무효라고 주장한

가처분 신청의 최종 기각(2022.10.06.)과 당원권 1년 추가 징계(2022.10.07.)는 이들에게 법리적 승리에 대한 기대를 꺾고, 이준석의 제도 내 영향력이 소멸했음을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절망에 머무르기보다, 무능하고 비윤리적인 정권과 결별하게 된 상황 자체를 오히려 행운으로 재해석하며 정당과의 심리적 절연을 시도했다.

만약 두창이가 준석이 안쳐냈으면 저 병신 5년 내내 어떻게 설드치나
이준석 머리 바개졌을테고 이준석도 같이 윤석열 개국공신 책임론으로
같이 정치생명 매장되었을듯

(이준석 갤러리, 2022.09.23.)⁴²⁾

이쯤되면 윤석열이 걔주 살리게 아닐까 난 예전부터 석열이가 밍진
않음 개판날때마다 고마웠음 걔주가 역일 일 없게 쫓아내고...

(이준석 갤러리, 2022.09.22.)⁴³⁾

이들에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기구는 더 이상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유능한 대리인의 정치적 자산을 소진시키는 이익 집단에 불과했다. 이들은 대리인의 고립을 지켜내야 할 결집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정당이라는 제도적 틀 자체에 파산을 선고하고 새로운 대안(신당 창당 등)을 모색하는 유동적 주체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한편, 이재명 당대표 선출 이후 여성 팬덤의 전략은 이재명을 향한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당 내부의 질서를 재편하는 ‘내부 정화’로 급격히 선회했다. 이들은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쁘락치’ 혹은 ‘밀정’으로 규정하며, 이들을 색출하고 배제하는 것을 권리당원의 핵심적 사명으로 삼았다.

42)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난 진짜 두창이가 준석이 쳐내줘서 너무 고마운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48532&exception_mode=recommend&page=1157 (2022.09.23.게시, 2025.09.15. 접속)

43)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이쯤되면 윤석열이 걔주 살리게 아닐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ids&no=48351&exception_mode=recommend&page=1157 (2022.09.22.게시, 2025.09.15. 접속)

이 시기 이른바 ‘수박’ 리스트의 제작은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차기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이해된다.

이낙연은 민주당에 들어온 브락치임 호남출신만 아니었으면 100% 한 나라당 갔을 새끼다..공 탄핵막은것도 판사탄핵 방해한것도 죄다 낙지 새끼지...개혁 골든타임을 두고 그저 엄중거린걸 보면

(이재명 갤러리, 2022.09.18.)⁴⁴⁾

극우에서 “이재명구속” 이럴때 “이재명구독”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김건희 구속”으로 대응해야하는데 안함....김건희 구속을 못되친다? 그럼 밀정이지.

(이재명 갤러리, 2023.02.10.)⁴⁵⁾

동시에 여성 팬덤은 틱톡(TikTok)이나 숏폼 콘텐츠를 활용해 정치 저관 여층에게 이재명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온라인 여론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이들은 기성 언론의 권위를 부정하고 플랫폼을 통해 당대표의 메시지를 직접 생산·유통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정보 유통 구조를 구축했다. 한편 오프라인 집회에서 나타난 철저한 자기 검열과 평화 시위 지침은, 자신들의 행동주의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고도의 조직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박들의 흔들기가 시작됨. 수도권과 호남 권리당원의 역할이 크다. 수박들이 사의재를 중심으로 공천받으려고 반란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음.

44)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이낙연은 민주당에 들어온 브락치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945842&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545 (2022.09.18.게시, 2025.09.20. 접속)

45)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이재명 구독으로 대응할게아니라 김건희 구속으로 대응해야”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051399&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365 (2023.02.10.게시, 2025.09.20. 접속)

저쪽은 벌써부터 분탕, 공작 준비중임. 앞으로 껄주 중심으로 톨톨 뭉치고
수도권과 호남은 권리당원이 뭉쳐 공천 참여해야 한다.

(이재명 갤러리, 2023.01.20.)⁴⁶⁾

(윤석열퇴진) 집회는 절대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저쪽에 그 어떤
빌미로 주면 안돼 말 들어보니 개장수가 자꾸 선동하려고 하는것같은데
그렇게 만들면 안된다 누구누구 수호금지 폭력 집회로 불릴 빌미 금지
모두들 따뜻하게 입고와

(이재명 갤러리, 2022.10.22.)⁴⁷⁾

이러한 여성 팬덤의 결집은 단순한 세력 과시를 넘어, 대규모 당원 가입
을 통한 ‘정당 기구의 제도적 점유’로 이어졌다. 과거 정당을 압박하는 외부
압력 단체에 머물렀던 여성 팬덤은, 이제 권리당원이라는 공식적 지위를 획득
함으로써 정당 체제 내부를 전유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사 내 ‘당원존’ 설치, 전자당원증 도입, 당직자 업무
연락처 공개 등 팬덤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
냈다(뉴시스, 2022). 이는 ‘민주당이 당원들 것이 되어간다’는 효능감을 제
공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공식적 인정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여성 팬덤은 정서적 지지자에 머물지 않고 정당 기구
내부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46)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수박들의 흔들기가 시작됨. 수도권과 호남 권리
당원의 역할이 크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040522
&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396](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040522&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396) (2023.01.20.게시,
2025.09.20. 접속)

47)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저쪽 집회가 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을까 (집회
팁 몇가지 추가)”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984426
&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485](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984426&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485) (2022.10.22.게시,
2025.09.20. 접속)

2) 행동주의의 극단화: 파편화된 이탈 vs 순교적 희생의 성역화

남성 팬덤의 정치적 관여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3.8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천아용인’으로 불리는 이준석계 후보들의 전원 낙선은 제도권 내에서 이들의 정치적 기대가 더 이상 실현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킨 결정적 사건이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논란과 도덕적 결함이 연이어 드러나는 국면에서, 남성 팬덤은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정권교체’가 당초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 즉 배팅의 수익률이 기대 이하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는 앞서 논의한 조건부 배팅 구조의 필연적 귀결로, 대리인과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정치 자체로부터 심리적으로 이탈하는 ‘냉소적 탈정치화’로 이어졌다.

강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뽑았더니...이렇게 개판칠줄은 정말 몰랐음... ㅋㅋ

페미말고는 그닥 기대안했는데 그것도 못함.... 유승민하고 토론하는거 보면 저길 뽑아야하나... 라는고민 많이했다...보편적인 양심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에펨코리아, 2023.09.06.)⁴⁸⁾

두창견들이 웃긴게 난 돼준스기가 빨갓하면 욱할건데...자기들마냥 이준석이 빨갓하고 병신마냥 굴어도 쉴드칠거라 생각함 아니 이준석이 그러면 그 즉시 이준석한테 십자포화 겨누지 뭘 쉴드치냐ㅋ

(에펨코리아, 2022.09.06.)⁴⁹⁾

남성 팬덤은 ‘탈당 인증’이나 ‘무효표 던지기’를 통해 파편화되었으나, 이것이 상대 진영으로의 전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이재명의 단식에

48) 에펨코리아, “윤이 대통령되면 뭐가 바뀌길 바랬나요?”

<https://www.fmkorea.com/6154343723> (2023.09.06.게시, 2025.09.08. 접속)

49) 에펨코리아, “두창견들이 웃긴게 난 돼준스기가 빨갓하면 욱할건데”

<https://www.fmkorea.com/6154758001> (2023.09.06.게시, 2025.09.08. 접속)

대해서도 “의미 없는 출퇴근 단식(에phem코리아, 2023.09.06.)⁵⁰⁾”이라 비난하며 적대감을 유지했다. 동시에 자신들의 대리인 역시 잘못하면 언제든 비판할 수 있다는 냉정한 관조자의 위치를 고수하며 정당 정치와의 거리두기를 공고히 했다.

2023년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는 여성 팬덤의 양육자적 정체성을 ‘공격적 보호자’를 넘어 ‘종교적 성역화’의 단계로 진화시킨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당내에서 발생한 무더기 이탈표를 마주하며, 이들은 이재명을 고난받는 성자로 설정하는 한편, 찬성표를 던진 이들을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에 비유하여 ‘가결유다’로 규정했다. 이러한 종교적 서사는 갈등의 축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결로 고착시켰고, 내부의 적을 처단하는 행위에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가결던진 인간들 가롯유다로 밀어야겠다 이재명이 희생제물인 그리스도라면 아저씨는 가롯 유다죠. 은전 30냥에 그리스도 팔아먹은 가롯 유다처럼 너는 공천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팔아 먹었잖아요.

(이재명 갤러리, 2023.02.28.)⁵¹⁾

이 지점에서 여성 팬덤의 행동주의는 고도로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이들은 가결표 의심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는 ‘수박 지도’를 제작하고, 의원 개개인을 압박하는 문자 폭탄과 후원금 ‘18원’ 입금 등 의정 활동에 실질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수행했다. 언론은 이를 야만적인 수박 사냥을 하는 ‘정치 캄패’ 혹은 ‘악성 개딸’이라고 비난했고(김명일, 2023), 이재명 역시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성 팬덤은 ‘이번만은 꺾주(이재명)

50) 에phem코리아, “이재명, 차라리 단식을 육사 홍범도 홍상 앞에서 하던가” <https://www.fmkorea.com/6154546387> (2023.09.06.게시, 2025.09.08. 접속)

51)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가결던진 인간들 가롯유다로 밀어야겠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066667&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336 (2023.02.28.게시, 2025.09.20. 접속)

말을 듣지 않겠다'며 독자적 행동주의를 자처했다. 이는 이재명의 정치적 품위를 보존하는 한편, 팬덤 스스로가 '개싸움'을 자처해 오명을 뒤집어쓰겠다는 순교적 결의의 산물이었다.

궤주 죄송합니다. 어쩔수가 없어요. 이전엔 하지 말라하실때 다들 최대한 자제했고 말 잘 들었는데요. 이번엔 진짜 안될것같습니다....이번만 말 좀 안들으게요. 궤주 지지하는 사람들 피눈물 나는것도 그거지만 앞뒤다르게 지지자들 뒤통수 쳐버린건 지지자들이랑 전면전 하겠다고 선전포고 저것들이 먼저 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갤러리, 2023.02.28.)⁵²⁾

궤주는 (민주당과) 원팀 외치세요! 개싸움은 우리가 할테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던 말인데 진짜 개싸움 우리가 해야할때가 온거같다

(이재명 갤러리, 2023.02.28.)⁵³⁾

이러한 정서적 폭발은 이재명의 단식과 2차 체포동의안 가결 정국에서 정점에 달했다. 팬덤은 이재명의 단식을 대의를 위한 '배수의 진'으로 이해했으며, 그를 제거하려는 기성 정치를 향해 더욱 강력한 공세적 노선을 취했다. 결국 이는 정치적 위기를 단순한 지지 대상의 위기가 아닌, 자신들이 육성하고 보호해 온 대상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자신의 사회적 평판마저 기꺼이 희생하는 '양육자적 정체성'의 극단적이고도 실천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극도의 배신감과 보호 본능이 결합된 결사 항전의

52)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궤주 죄송합니다. 어쩔수가 없어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067496&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335 (2023.02.28.게시, 2025.09.20. 접속)

53)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궤주는 원팀 외치세요! 개싸움은 우리가 할테니"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067729&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335 (2023.02.28.게시, 2025.09.20. 접속)

분위기는 일주일 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팬덤에게 영장 기각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고난받던 성자의 부활’이자, 자신들의 투쟁이 도덕적 승리를 거두었음을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이후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정치적 효능감을 만끽하는 축제적 투쟁으로 진화하게 된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 난 옳은 행동을 하는거야! 라는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한 정당성 확보, 그리고 함께 함으로써 느끼는 유대감.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으샤 으샤 하면서 답답했던 마음을 후련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어졌을때 뽕 맞는 느낌이 느껴지는 듯.

(이재명 갤러리, 2022.09.05.)⁵⁴⁾

난생 처음 정치인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특급행정이 이재명님의 삶 존경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시고 퇴임후 까지

(이재명 갤러리, 2022.09.05.)⁵⁵⁾

대규모 축제 분위기의 항쟁은 여성 팬덤에게 ‘우리가 옳다’는 집단적 확신을 불러넣는 동시에, 메시지북과 화환 등 팬덤 고유의 문화를 정당 정치와 결합하며 대리인과의 정서적 일체감을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다졌다. 이는 양육 서사가 3시기에 이르러 종교적 숭배와 순교적 결의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최종적 목표를 향해 팬덤이 더욱

54)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집회하면 왜 뽕맞는거냐?”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952357&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531 (2022.09.05.게시, 2025.09.20. 접속)

55)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메세지북] 마감”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951734&exception_mode=recommend&list_num=100&page=1515 (2022.09.05.게시, 2025.09.20. 접속)

강력하고 조직화된 행동주의적 결속을 구축하게 된 배경을 형성한다.

특히 남성 팬덤의 냉소적 이탈이 가속화되는 동안, 여성 팬덤의 행동주의는 플랫폼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조직화된 형태로 조율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자제 요청은 단순한 행위 중단의 메시지라기보다, 대리인이 자신들의 존재와 행동을 직접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즉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내용 자체보다, 대리인과 팬덤 사이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었다. SNS 연구에서 지적하듯, 셀러브리티와 지지자 사이의 메시지 교환은 정보 전달 이상의 효과를 가지며, 항시적 연결의 감각을 강화함으로써 친밀감과 정서적 일체감을 증폭시킨다(Marshall, 2014; Licoppe, 2005). 이러한 플랫폼 매개의 상호작용은 팬덤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이 대리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강화시켰고, 결과적으로 팬덤 내부의 행동주의를 더욱 성역화하고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여성 팬덤의 정치적 실천은 단순한 지지 행위를 넘어, 대리인을 보호하고 함께 고난을 감수하는 ‘순교적 결의’의 형태로까지 고양된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대리인 정치와 플랫폼 민주주의의 확장 긴장

본 연구는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폭발한 청년 세대 팬덤 정치의 젠더적 실천 양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동일한 참여 조건 속에서도 성별에 따라 상이한 정치참여 모델이 구성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는 제3세대 개인주의적 양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정치인을 통해 효능감을 확인하려는 ‘전략적 배팅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팬덤 3.0’이라는 실천 문법으로 수렴된다. 본 연구는 이를 ‘팬덤 3.0에 기반한 대리인 정치’로 개념화하고, ‘대리인 선정-의미화-실천’이라는 과정 속에서 젠더적 분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리인 선정 단계에서 청년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능력 기준을 통해 정치인을 선택하며 상이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청년 남성은 능력주의적 경쟁 속에서 승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기준으로 이준석을 ‘전략적·도구적 대리인’으로 선택하였다. 반면, 청년 여성은 반페미니즘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추진력과 생존 능력을 기준으로 이재명을 자신의 안위를 위탁할 대리인으로 승인하였다. 특히 이는 청년 남성처럼 자신의 욕구를 직접 대리할 정치인을 ‘발굴’했다기보다, 상대 진영에 대응하고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성격이 강했다. 이후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둘러싼 부정적 프레임을 보수 언론과 정치권이 구성한 결과물로 비판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며, 점차 대리인을 가족적 유대 속에 편입시키고 양육의 서사를 형성해 나갔다.

둘째, 대리인에 대한 의미화 단계에서 청년 남성은 이준석을 공정성을 회복하고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의미화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언제나 철회 가능한 ‘조건부 배팅’으로 구성하였다. 반면 청년 여성은 대선 패배 이후의 부채감을 동력으로 이재명을 보호하고 성장시켜야 할 양육의 대상으로 의미화하였다. 그러나 이 양육자적 정체성은 대리인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방어적 보호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적대 세력에 맞서 정당의 체질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정치 개입과 조직화를 위한 기획자이자 홍보자로서 ‘정치적 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전투적 주체로 전환되었다.

셋째, 실천 단계에서 청년 남성은 이준석의 실패를 ‘토사구팽’으로 인식하면서도 집합적 저항으로 나아가기보다 기성 정권으로부터 냉소적 이탈과 배팅 철회라는 파편화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청년 여성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결속을 강화하며 이재명을 ‘성역화’하고, 이재명을 대신해 싸움을 수행하는 ‘순교적 행동주의’로 나아갔다.

이러한 결과는 팬덤 3.0의 ‘양육자적 정체성’과 ‘투자자적 정체성’이 결합된 참여 구조임을 보여주며, 청년 세대 정치참여의 젠더 분화는 이 두 정체성이 상이하게 강조되고 배열된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즉, 자신의 욕구를 대변한 ‘대리인 정치’라는 동일한 참여 구조 내에서 남녀에 따라 정체성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게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결국 팬덤 3.0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리인과의 관계 맺기 방식에 따라 재배열되는 유동적 구조이며, 이러한 젠더적 분화가 현재 한국 정당 정치의 가동 원리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시대 정치참여의 변화를 ‘정치의 오디오화’와 ‘팬덤 3.0’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식화하였다. 본 연구는 플랫폼 환경에서 대중문화 팬덤의 실천 양식이 정치 영역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밝혔다. 오늘날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는 대리인을 발굴하고 성공을 전인하기 위해 기획·홍보·자원 동원에 직접 개입하는 ‘전략적 개입’의 과정으로 재구성된다. 특히 대중문화에서 양육자 모델을 체화하고 있는 여성들은 ‘스밍’, ‘충공’, ‘영업’ 등의 전략적 노동 경험을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정치적 노동’으로 전환하여 발현하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이 파편화된 개인을 조직화된 정치 주체로 재구성하는 매개로 작동함을 보여주며, 팬덤 문화가 정당 정치의 운영 원리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동일한 플랫폼 환경 속에서도 감정의 성격과 관계 맺기 방식에 따라 정치적 실천의 방향이 젠더별로 상이하게 조직화되었다는 점이다. 청년 남성에게 플랫폼은 전략적 대리인을 발굴하고 배팅의 효능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간으로 기능한 반면, 청년 여성에게 플랫폼은 공유된 분노와 부채감을 정서적 공증으로 결집시키고 대리인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순교적 결의로 고양시키는 매개로 작동하였다. 이는 플랫폼 민주주의 연구가 참여의 양적 확대를 넘어 감정과 젠더의 교차 속에서 정치적 실천이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능력’과 ‘공정’ 개념이 젠더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며, 이로 인해 정치적 효능감이 비대칭적으로 발현됨을 규명하였다. 청년 세대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며(성상훈, 2021), 정치 역시 승패가 결정되는 경쟁적 무대로 인식한다. 그

러나 동일한 경쟁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이해하는가는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분기된다. 청년 남성은 학벌, 스펙, 토론 실력 등 객관적으로 계량화된 성능을 기반으로 능력을 평가하며, 실제 경쟁 상황에서 ‘기계적 등가성’을 공정의 기준으로 이해한다. 반면 청년 여성은 엘리트주의적 스펙이나 계량화된 성능보다, 위기 상황을 돌파해내는 추진력과 성실함, 그리고 끝까지 버텨내는 독기 속에서 입증되는 실천적 역량을 능력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능력과 공정에 대한 상이한 인식은 정치적 효능감이 발현되는 방식의 차이로 이어진다. 남성은 정치인을 전략 게임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즉각 지지를 철회하며 냉소와 이탈로 귀결된다. 반면 여성은 성실함과 추진력으로 실존적 위협을 돌파할 수 있는 인물로 대리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패배는 대리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기득권의 방해와 자신들의 불충분한 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패배를 부채감으로 전환시키며, 보호와 결속, 그리고 공격적 행동주의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셋째, 여성 팬덤정치의 공격적 실천 양상을 ‘순교적 행동주의(martyrological activism)’로 개념화하고, 이를 정당의 상향식 전유 메커니즘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여성 팬덤의 집단행동을 감정적 집단행동이나 포퓰리즘으로 비판해 온 기존 연구와 달리, 대리인(정치인)과의 동일시를 기반으로 정당의 제도적 기능을 점유하고 재구성하려는 주체적 권리 실천임을 밝혔다. 특히 대리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대신 오명을 뒤집어쓰고 개싸움을 자처하는 ‘순교적 행동주의’는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랜들 콜린스(Collins, 2014:73)가 제시한 집단적 에너지에 기반한 고도의 전략적·이타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순교적 행동주의는 온라인 뿐 아니라 권리당원이라는 오프라인 제도 참여가 결합된 형태로, 팬덤 정치가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 운영 방식을 아래로부터 어떻게 강제하고 재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정치의 변화가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과 플랫폼

기반 팬덤 문법이 결합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지지하는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는 ‘순교적 결의’와, 승률에 따라 지지를 철회하는 ‘도구적 냉소’가 공존하는 현재의 정치 지형은 민주주의의 참여 기반을 확장하는 동시에, 감정적 결속에 기반한 배타성을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민주주의의 구조적 긴장을 드러낸다. 향후에는 정치 고관여층인 팬덤과 정치 무관심층인 중도와의 간극을 조정하고, 감정적 정치가 초래하는 배타성을 완화할 수 있는 ‘포용적 정치의 소통 구조’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제시한 ‘팬덤 3.0 기반 대리인 정치’는 향후 한국 정치의 참여 양식과 정당 혁신을 이해하는 핵심 분석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4월 18일 접수
2026년 6월 24일 수정 완료
2026년 5월 8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강준만. 2022. “‘개딸’들은 왜 ‘불꽃대장’에 등돌리고, 페미니즘을 외면했나”. KPI뉴스. 2022.06.20. (검색일: 2026.02.01)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7. 『부들부들 청년: 막막했고 두려웠고 답답했다 그리고 분노했다』. 후마니타스.
- 굿윈·제스퍼·폴레타(Jeff Goodwin, James M.Jasper, and Francesca Polletta), 2012.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 박형신·이진희 역. 한울아카데미.
- 김명일. 2023. “이재명이 공개석상서 ‘수박’ 먹자, 개딸들 “시그널 보내셨다””. 2023.05.18. (검색일: 2026.02.0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5/18/LIZ5PLWZJBD2XD4UE7L53FUGDI/
- 김비환. 2009. “한국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정치사상연구』 15(2): 1-30.
- 김선영. 2023. “온라인 커뮤니티 ‘에펠폰코리아’로 살펴본 ‘이대남 현상’”. 『한국언론정보학보』 118: 34-75.
- 김수정. 2018. “팬덤과 페미니즘의 조우-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팬덤 연구의 성과와 쟁점”. 『언론정보연구』 55(3): 47-86.
- 김수정·오지현·최섯별. 2020. “청년세대의 정치: 정치의 주변화인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인가”. 『사회과학연구논총』 36(2): 283-318.
- 김왕배. 2013. “도덕감정: 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의 연대”. 『사회와이론』 2: 135-172.
- 김지민·김경민·최고훈. 2023. “20대 대선과 ‘젠더 포폴리즘’: 정치적 양식의 반페미니즘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9(2): 203-239.
- 김한나. 2022. “20대 청년 유권자의 젠더 균열과 투표 선택: 제 20 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15: 296-338.
- 김호기. 2020. “한국 민주주의와 팬덤 정치”. 『사회와 이론』 36: 45-78.
- 뉴시스. 2022. “‘개딸 소원 들어주기’ 이재명…당사에 당원존 만들고 연락처도 공개”. 동아일보. 2022.08.31. (검색일: 2026.02.01.)

- 도묘연. 2021.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의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정치 팬클럽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4(1): 1-35.
- 레크비치(Andreas Reckwitz). 2023. 『과잉 히스테리 사회, 단독성들의 사회: 21세기 경제, 기술, 정치, 노동, mz세대, 라이프스타일, 문화의 숨은 퍼즐』. 윤재왕 역. 새물결.
- 마경희. 2007.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23(1): 39-67.
- 문미진. 2024. “‘편’에서 ‘개딸’까지 이들의 또 다른 이름 ‘정치 고관여자’”. 『한국언론정보학회 2024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2-187.
- 바칸(Abbie Bakan). 2017. “마르크스주의의 차별론.” 책갈피편집부 편. 『계급, 소외, 차별: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소외,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책갈피. pp. 81-100.
- 박영득. 2019. “유튜브에 나타난 정치의 사인화와 정당정치의 미래”. 『글로벌 정치연구』 12(2): 1-30.
- 박영득·김한나. 2022. “한국 청년 세대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향과 투표 선택: 2021 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6(2): 5-35.
- 방희경·오현주. 2018. “아이돌의 정동노동(affective labor)과 노동윤리: 리얼리티 오디션 쇼 <프로듀스 101>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91: 76-117.
- 서향리·정재민·윤종성. 2022. “MZ 세대의 선거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문사회 21』 13(4): 241-252.
- 성기신. 2022. “2030 여성의 정치 참여와 ‘개딸’ 현상에 관한 고찰”. 『여성과 정치』 11(2): 45-78.
- 석승혜. 2020. “배려의 대상은 어떻게 무임승차자가 되는가?: 공정성 인식이 배려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사상과 문화』 23(4): 137-175.
- 석승혜·김남옥. 2019. 『불안한 사냥꾼의 사회: 우리는 왜 서로를 혐오하는가』, 스리체어스.

- 성상훈. 2021. “청년세대는 왜 ‘능력주의’를 옹호할까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한국경제. 2021.06.08. (검색일: 2026.02.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6085127i>
- 성채린·이연호. 2023. “문재인 팬덤(fandom) 정치 현상과 뉴미디어 플랫폼”. 『문화와 정치』 10(4): 105-133.
- 송경재. 2020.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다층적 참여 시민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 29(2): 153-181.
- 송경재·임정빈·장우영. 2016. “SNS는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정치 정보 신뢰, 지지의 전환 및 참여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7): 154-167.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 삼성경제연구소.
- 신상숙. (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 『페미니즘 연구』, 11(2), 153-197.
- 신윤희. 2019. 『팬덤 3.0: 기획하고 양육하고 홍보하는 소비자』. 스리체어스.
- 신진옥. 2007.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임에서 도덕감정의 역할: 5·18 광주항쟁 팸플릿에 대한 내용분석”. 『경제와사회』 73: 203-243.
- 엄혜진. 2025.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분열적 결속: 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 비판 쟁점들과 함의”. 『한국여성학』 41(1): 43-91.
- 오현철. 2021. “문재인 정치팬덤의 복합적 성격”. 『시민사회와 NGO』 19(1): 3-38.
- 우루루·남윤재. 2018,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서사연구 경쟁과 육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7): 503-518.
- 윤영관. 2019.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 대안적 정치문화를 위한 기획”. 『문화와 정치』 6(2): 5-40.
- 윤평중. 2024. “디지털 포퓰리즘과 공화 자유주의: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철학과 현실』 141: 100-116.
- 이상신. 2012. “정치의 사인화(私人化)와 대선 후보자의 인지적 평가: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인의 스키마(Schema)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4): 149-170.

- 이영자. 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초개인주의”. 『현상과 인식』 23(3): 103-127.
- 이재묵. 2019. “유권자 세대교체와 한국 정당의 미래: 탐색적 연구”. 『미래정치연구』 9(2): 5-33.
- 이철희. 2024.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삼키다』. 메디치미디어.
- 임동균·김선호. 2022.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양극화와 혐오 표현: 예뻐 코리아와 더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6(2): 45-89.
- 정수남. 2021. “빛장결기와 탈사회적 공간의 감정동학: 하층계급의 모욕과 분노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55(4): 37-70.
- 정사강·이재원·박동숙. 2021. “나에게 해화역 시위는 무엇이었나?: 2030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7: 116-148.
- 정사강·홍지아. 2019.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209-253.
-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2022. “20대女 58%, 왜 ‘형수욕설·모녀살해 변호’李에 투표했나”. 조선일보. 2022.05.13. (검색일: 2026.04.10.)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2C5WFIW2QVH6NJIAGYHJ2ZB3CM/
- 조소연·정성조·이나영. 2025. “팬덤과 광장의 조우: 2030 여성들의 윤석열 탄핵 광장 참여 경험을 통해 본 젠더화된 문화정치”. 『미디어, 젠더 & 문화』 40(3): 115-155.
- 조재욱·강진우·김연주. 2024. “팬덤정치의 민주주의 기제 가능성 검토”. 『대한정치학회보』 32(3): 113-138.
- 조희연. 2004. 『비정상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 차태서. 2020. “담론분석의 이론과 실제: 사회과학 연구에서의 적용”. 『국제정치논총』 60(3): 135-172.
- 천관울. 2018.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시사IN. 2019.03.05. (검색일: 2025.12.0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5>
- 천관울·정한울. 2019. 『20대 남자: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시사인북.

- 천정환. 2017. “누가 촛불을 들고 어떻게 싸웠나: 2016/17 년 촛불항쟁의 문화정치와 비폭력·평화의 문제”. 『역사비평』 118: 436-465.
- 최성용. 2022. “‘이대남’,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누적된 억울함과 불신 위의 청년 세대”. 『오늘의 교육』 71: 203-217.
- 최장집. 200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 최종숙. 2020.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 대와 3040 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125: 189-224.
- 카림(Isolde Charim). 2019. 『나와 타자들: 우리는 어떻게 타자를 혐오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가』. 이승희 역. 민음사.
- 카스텔(Manuel Castells). 2015.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 인터넷 시대의 사회운동』. 김양욱 역. 한울아카데미.
- 콜린스(Randall Collins). 2014. 『사회학 본능: 일상 너머를 투시하는 사회학적 통찰의 힘』. 김승욱 역. 알마.
- 터너(Graeme Turner). 2018. 『셀러브리티: 우리 시대 셀럽의 탄생과 소멸에 관하여』. 권오현·심성보·정수남 역. 이매진.
- 프레이저·호네프(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2014. 『분배냐, 인정이나?: 정치철학적 논쟁』. 김원식·문성훈 dur. 사월의책.
- 프롬(Erich Fromm). 2018. 『자기를 위한 인간』. 강주현 dur. 나무생각.
- 황정미. 2017.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사회』 114: 17-51.
- Aubert, Nicole. 2004. *L'individu hypermoderne*. Erès.
- Beck, Ulrich. and Elisabeth Beck-Gernsheim. 2010. *Individualization*. SAGE.
- Bennett, W. L., and Segerberg, A. 2023.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ntentious politics. *In Handbook of digital politics* (pp. 287-338). Edward Elgar Publishing.

- Brough, M. M., and Shresthova, S. 2012. Fandom meets activism: Rethinking civ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10. <https://research-ebsco-com-ssl.oca.korea.ac.kr/c/ldecro/viewer/html/pw354dmxkb>
- Chen, L., Chen, G., Ma, S., and Wang, S. 2022. Idol worship: how does it influence fan consumers' brand loyalty?. *Frontiers in Psychology* 13: 850-670.
- Coffé, H., and Bolzendahl, C. 2010. Same game, different rules?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Sex roles* 62(5): 318-333.
- Cohen, L. 2003. *A Consumers' Republic: The Politics of Mass Consumption in Postwar America*. Alfred A. Knopf.
- Dalton, R. J., and Wattenberg, M. P. 1993. The not so simple act of voting.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II* 2: 193-218.
- Dean, J. 2017. Politicising fandom.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9(2): 408-424.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 Gamson, J. 1994. *Claims to Fame: Celebrity in Contemporary Ameri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lmond, A. 2015. The Platformization of the Web: Making Data Platform Ready. *Social Media + Society* 1(2): 1-11.
- Jenkins, H. 2012. *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and Participatory Culture*. Routledge.
- Jasper, J. M. 2012. Choice points, emotional batteries, and other ways to find strategic agency at the microlevel. *Strategies for social change* 37: 23-42.
- Jiang, X., SaRuLa, S., and Hwang, H. 2020.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Chinese BTS female fandom: The effect of fandom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21(4): 59-68.

- Bolzendahl, C., and Coffé, H. 2026. Different and Unequal?: Gender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European Democracies. *Elements in Gender and Politics*. <https://www.cambridge.org/core/elements/different-and-unequal/14A25E5BD68A16945141912DAC9785FA>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Jasper, J. M. 2011. Emotions and social movements: Twenty years of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1): 285-303.
- Katz, E. 1994. *Popular cultur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D. Crowley & D. Mitchell (Eds.), *Communication Theory Today*. Polity Press.
- Licoppe, Christan. 2005. Rhythms and ties: Towards a pragmatics of technologically-mediated sociability, *MOBILE COMMUNICATION*.
- Marshall, P. D. 2014. *Celebrity and Power: Fame in Contemporary Culture* (2nd e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ukherjee, R., and Banet-Weiser, S. (Eds.). 2012. *Commodity activism: Cultural resistance in neoliberal times*. NYU Press.
- Papacharissi, Z. 2016. Affective publics and structures of storytelling: Sentiment, events and mediality.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9(3): 307-324.
- Rahat, G., and Sheafer, T. 2007.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Interpretations, Types and Causes. *Party Politics* 13(1): 65-80.
- Sandvoss, C. 2013. Toward an understanding of political enthusiasm as media fandom: Blogging, fan productivity and affect in American politics. *Participations* 10(1): 252-296.
- Sartori, L., Tuorto, D., and Ghigi, R. 2017. The social roots of the gender gap in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ole of situational

and cultural constraints in Italy.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4(3): 221-247.

Smith-Mady, M. 2017. Celebrity drug endorsements: are consumers protected?.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43(1): 139-160.

Snow, D. A., Rochford Jr, E. B., Worden, S. K., and Benford, R. D. 1986.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4): 464-481.

에phem코리아 <https://www.fmkorea.com>. 자료 수집 기간: 2022.01.01~2023.09.30.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kids>. 자료 수집 기간: 2022.01.01~2023.09.30.

더쿠. <https://theqoo.net>. 자료 수집 기간: 2022.01.01~2023.09.30.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leejaemyung>. 자료 수집 기간: 2022.01.01~2023.09.30.

Fandom Politics 3.0 in the Platform Era: Gendered Differentiation in Agent Politics and Meaning-Making Practices among Korean Youth

Seok, SeungHye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platform society, where its underlying logic increasingly internalizes the practices of popular culture fandom. In particular, it conceptualizes the participatory mode in which young people consume political actors as if they were stars of survival audition programs and project their desires and emotions onto them as 'Fandom Politics 3.0,' and comparatively analyzes the gendered differentiation that emerges in this process. To this end, a discourse analysis was conducted on highly recommended posts from online communities predominantly used by young men and women, covering the period surrounding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e findings reveal that young male fandom actively identifies and recruits political actors who can serve as proxies for their desires, setting them as "strategic agents" who guarantee victory and forming an investor-oriented relationship that demands returns based on performance. In contrast, young female fandom strategically selects political actors capable of countering the opposing camp in response to the existential threat of anti-feminism. They deconstruct and reconstruct the negative frames surrounding their chosen agent, incorporating him into a familial narrative as an object of nurturing care, and reinforce an ethic of responsibility and protection driven by a sense of debt following electoral defeat. Notably, female fandom demonstrates a form of bottom-up appropriation of party politics through active party membership and organized collective intervention aimed at ensuring their agent's success. These differences are interpreted not merely as divergences in political orientation, but as outcomes of the differentiated gendered operation of a dual subjectivity inherent in Fandom 3.0, combining an 'investor identity' and a 'nurturer identity.'

In conclusion, the study confirms that the participatory logic of Fandom

3.0 is most immediately actualized in the political practices of young women who are already familiar with popular culture fandom. This indicates that fandom politics provides new momentum for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while simultaneously revealing the inherent tensions of platform democracy — intensifying two divergent forms of political practice: an investor-oriented cynicism that conditionally bets on and withdraws support based on the agent's performance outcomes, and a martyrological activism that embraces aggressive intervention and self-sacrifice in order to protect the political agent.

Key Words: Fandom Politics; Platform Society;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Gender Conflict; Anti-feminism; 20th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평가와 전망: 과학적 전문성을 넘어 기후 정의를 향한 저널리즘의 출발

박진우* · 진민정** · 김설아***

요약

본 논문은 국내 언론인들의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 보도 현장에 대한 언론인들의 평가 및 미래 전망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가 기상 재난 등 사건 중심적인 보도에서 한층 구조적인 쟁점들에 대한 보도, 나아가 '기후 정의'를 향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보도로 이행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후 위기를 주된 취재 분야로 다루는 국내 언론인 1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국내 언론인들은 기후 위기의 문제를 더 이상 부차적인 이슈로 다루지 않으며,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개인적 노력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그럼에도 보도가 기후 위기 현상의 횡단적 측면에 대하여 매우 비대칭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정의에 대한 전망을 별달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후 위기 보도가 변화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과거의 '전문성'에 대한 사고에 여전히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기후 위기 보도가 전문성의 새로운 구성, 강화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퀄리티 저널리즘'의 전망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기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향한 전망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음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기후 위기, 기후 정의, 보도 관행, 전문성, 퀄리티 저널리즘

* 주저자,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jinwoo421@gmail.com

** 공동저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minjin@kpf.or.kr

*** 교신저자,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문화예술경영대학원, soelah@hongik.ac.kr.

I. 들어가며

기후 위기의 해결은 이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¹⁾. 최근 수 년 동안 벌어진 그 많은 기후 재난이나 이상 기후 사례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님은 명확하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단순한 기상 이변, 혹은 기상 재난 차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류 및 지구상 생명체들의 생존과 지속을 도모할 수 있는 인간 사회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Thunberg, 2023).

오늘날 기후 위기라는 용어는 대중들에게 우선 여러 국제적 프로젝트들, 그리고 여기서 유래된 다양한 전문 용어들과 함께 인식되고 있다.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일명 ‘파리협정(Paris Agreement)’를 통해 ‘신기후체제’와 자본주의의 녹색 전환 과제, 즉 보다 생태친화적인 경제 및 사회 질서의 전환이라는 주제가 대중들에게 가시적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변화는 여전히 더딘 상태이다(홍덕화, 2020; 김선철, 2022). 사정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파리협정 이후 국내에서 이러한 생태친화적이고 기후 위기의 신속한 예방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후 위기와 언론 보도의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각 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 ‘기후 저널리즘 현장’이나 ‘환경 서약’ 등 기후 위기 보도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는 언론사가 등장

1) 상황에 대해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가 때로는 경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가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후 위기’라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정서적 상황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Hansen & Cox, 2023/2024). 여기서는 일단 학계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하되, 필요시 두 용어를 혼용하고자 한다.

했다. 기후 위기를 전담하는 기자들뿐 아니라 모든 언론인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기후 위기가 단순히 환경이나 기상 재난의 차원을 넘어서는, 즉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 전반에 걸친 이슈에 적용되는 일종의 ‘프리즘’이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진민정 외, 2021; 2022; 2023). 하지만 많은 개선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의 현실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노력과 여전히 적지 않은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은 기후 위기가 제기하는 도전에 인류가 맞서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IPCC 보고서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이 그 책무에 얼마나 충실한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신방실, 2023). 신우열(2023)의 지적처럼 과학적 소양을 갖춘 리더십의 부재, 상업성의 유무로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기후 위기는 국내 언론에서 여전히 부차적인 주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언론은 기후 위기라는 쟁점을 대중들에게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이나 재난 차원을 넘어서 보다 진지하고 입체적인 관점으로 전달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요구는 기존의 저널리즘 문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문법을 요청한다. 즉 기후 위기를 둘러싼 언론 보도와 사회적 담론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의 문제를 넘어, 그 자체로 우리 모두의 사고적 전환과 일상적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리하여 기후 위기 보도는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라는 보다 큰 과제의 실현에 대한 검증의 대상으로 그 속성이 바뀌어 가고 있다(Pezzullo, 2013; Pezzullo & Onis, 2018; Raphael, 2019). 즉 기후 위기 보도는 이제 ‘현재의 사건’이자 ‘미래의 가능성’의 영역에 동시에 걸쳐 있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하는 한층 복잡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난 수년간 국내 언론 현장에서 기후 위기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왔던 주요 언론인들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인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속에서 미래의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국내 언론인들은 과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 무엇이 여전히 문제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인들의 자사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 위기 보도의 전망과 이를 위한 준비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기후 위기를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 왔는지, 그리고 기후 위기를 둘러싼 가능성과 횡단의 속성에 대해 얼마나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II. 기후 위기, 기후 정의, 그리고 언론 보도의 동시대적 맥락

1. 기후 위기와 기후 정의의 ‘횡단적 특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불일치 현상

현재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또는 기후 환경의 변화가 산업화 이후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기후 변동에 따른 결과인지 등을 놓고 논쟁하던 시절은 끝났다(Thunberg, 2023). 오늘날 대중들에게 기후를 둘러싼 파국적인 경고들은 흡사 묵시론적 명령에 가깝다. 실제로 기후 위기의 ‘파국론’은 우리가 생태 위기를 상상하는 가장 흔한 대중적 서사이며, 이는 다수의 미디어 재현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최명애·박범순, 2019; 정지영, 2023). 파국적 상황에 대한 상상은 물론 생태 위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중이 공감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력은 파국과 공포에만 집중할 뿐, 생태 위기 그 자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및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 불평등 문제 자체를 도외시하는 탈정치적(post-political) 기후 정치로 우리를 이끄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새로운 차원의 생태 전환 과정에 대한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과 민주주의, 그리고 고도의 사회학적 상상력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기후 위기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제 ‘기후 정의’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는 이론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기후 정의’란 단순한 규범적 범주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충격이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모순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위계화된 위험에 대응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는 확장적인 개념이다(한상운 외, 2019; 김종길, 2026). 이 개념은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환경 정의’ 개념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는 유해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서 미국 사회가 보여준 인종차별적 시각을 문제 삼으면서, 계급 및 인종에 따른 환경 오염의 차별적 피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김종길, 2026). 그리고 이는 기후 위기 역시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구조를 함께 고려한 보다 시스템 차원의 전환 노력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임을 명시한다. 즉 기후 위기는 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여타 요소들의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Crenshaw, 1989)²⁾ 혹은 ‘횡단적 특성’(Dryzek, 2005)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사회적 불평등이 실제 삶에서는 단일한 축을 중심으로 한 선형적 형태가 아니라 대단히 복합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며,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다층적인 사회적 범주들의 통합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구조적 억압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한상운 외, 2019; 홍덕화, 2022). 이러한 구조적 억압은 기후 위기의 양태 속성인 ‘누적적 가속성’과 ‘시공간적 비동기성’에 의해 단순한 경제적 결핍을 보다 입체적인 사회적 취약성으로 구조화하는 핵심적인 동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종길, 2026).

환경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연구계에서도 기후 위기와 기후 정의라는

2) 크렌쇼(1989)의 ‘상호교차성’ 개념은 원래 미국 법학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계급의 문제로 환원하는 대신, 일상에서 그것이 어떻게 여타의 동인들 - 인종, 종족, 젠더 범주가 대표적이다 - 과 교차하면서 한층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주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개념은 미국의 1990년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핵심적인 이론적 가정으로 사용되었다.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이 기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이가 야기하는 사회적 불평등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Pezzullo, 2013; Raphael, 2019). 그렇기에 이 연구는 기후 위기 현상을 보다 복합적인 관점, 즉 인간과 자연, 이를 둘러싼 국가-시민사회-시장의 다층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의 전체적인 조건과 환경을 살펴야 하는 사회적 임무에 대해 주목한다(Dryzek, 2005; 정태석, 2023). 이 말은 기후 위기 보도가 결국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영역 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을 이끌어 내 제도적 전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대단히 복잡한 해결 과정에 대해 끈기 있고 수준 높은 보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ntonio & Clark, 2015; Dyke et al., 2021. 4. 21).

그렇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후 위기를 둘러싼 정책 담론, 그리고 이를 반영한 언론 보도는 좁은 의미의 에너지 정책, 즉 '원전 관련 정책'만을 정책 이슈로 반복 표출시켜 왔다(Carter & Little, 2021; 한재각, 2021; 정지영, 2023). 주류 정당 간의 정책적 논쟁이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것에 국한되고, 그것마저 정당 간의 대립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정책 이슈로 부각되어 왔던 것이다. 김선철(2022)의 지적대로 주류 양당 모두가 기후 위기 대응, 탈석탄 및 탈화석연료,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논쟁의 쟁점들에 대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일 자체를 회피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제도 정치의 지형은 생태 전환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자리 위기나 소득 불안정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 그리고 '정의로운 생태 전환'의 진전 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김수진, 2023).

근본적으로 이는 기후 위기의 상황을 인식하는 한국 정치의 단일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로부터 탈피가 쉽지 않은 한국 정치, 그리고 한국 언론의 구조적인 난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이슈는 여전히 상징적 정치 언어로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기후 위기 정의에 대한 주장들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통해 지지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김수진, 2023). 사실 이는 언론에 내재된 구조적 속성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환경과 기후 위기를 다루었던 저널리즘 현장은 오랜 기간 동안 엘리트

정보원과 엘리트 기자의 관계, 즉 정부, 대기업, 과학자/전문가, 시민사회/환경 압력단체 등과 소통하는 전문기자 집단의 글이 형성해 낸 담론 구조에 지배되어 왔다(Hensen & Cox, 2023/2024). 그렇다면 이들 저널리즘 행위자들은 기후 위기를 둘러싼 대중적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를 전문가의 영역으로 상정하고, 대중의 참여보다는 대중에 대한 교육이라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지배적 모델에 끊임없이 집착해 온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 기후 위기를 둘러싼 언론 보도의 문제는 이제 이러한 지배적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2. 기후 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와 대중적 인식의 불균등한 진전

기후 위기 현상 자체가 복잡해지고 다층화되는 현실은 한국 언론이 그동안 기후 위기를 다루어왔던 시선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 왔는가? 기후 위기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그리고 이에 대한 뉴스 수용자들의 인식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수년 동안 큰 개선이 있었지만, 동시에 쟁점의 횡단적 특성에 비추어 그 진전은 매우 ‘불균등’하다고 지적해 왔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측면에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지만, 대중들이 기후 위기에 대하여 인식하는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신우열, 2022; 진민정, 2023; 김천수, 2025). 동시에 이러한 인식이 곧장 기후 정의에 대한 수준 높은 대중적 합의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수치상으로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이미 2022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진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4.7%(1,694명)이 ‘기후 위기 문제는 실제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2024년 12월에 새롭게 실시된 조사에서는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 수치가 96.7%까지 치솟았다(진민정·김창숙, 2024). 같은 해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생활 양식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도 87%에 달하였다(이상엽 외, 2022).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인식 비교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2년 퓨 리서치(Pew Research)에서 19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82%가 기후 위기를 ‘매우 중요한 위협’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이 수치는 19개국의 중위값인 7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Poushter, Faga & Gubbala, 2022. 8. 31).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후 위기에 대하여 기후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다 ‘횡단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높다고 진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직접성에 대한 인식, 즉 기후 위기가 과연 자신의 일상적 삶에 대하여,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심각한 사안인지, 내가 현실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조사에서는 기후 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7.6%가 ‘전 세계적인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 기후’라고 답하였다. 이는 대중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기상 재해와 같은 일상 생활 속의 이슈에 ‘밀접히 관련되어’ - 즉 ‘간헐’ -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생태계 붕괴(13.8%), 식량 위기(10.1%), 에너지 위기(3.3%), 전쟁(2.5%), 기후 불평등 심화(2.5%)와 같은 여타의 응답들은 대단히 소수에 그쳤다.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대단히 낮게 나타난 것이다(진민정 외, 2022). 여전히 ‘기후 변화에 관심은 생겼지만 나의 행동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응답도 43.1%에 이르렀으며,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3.3%가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가 그 이유라고 답하였다(ibid.).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언론이 저야 할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인식도 발견된다. 2024년 조사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응답자의 71.4%가 “보도량이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보도 내용이 반복적이고 새롭지 않다”는 응답도 67.3%였다. 그렇기에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한국 언론이 보다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사”를 다루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91.4%에 달하였다(진민정·김창숙, 2024).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공동 설립한 〈기후정치바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이 마음에 들면 평소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53.5%에 달하였다(기후정치바람, 2026. 3. 9.). 하지만 새로운 쟁점들, 예컨대 2025년 여름의 폭염,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정책(원전 재가동 혹은 신규 설치 문제), 지역별 폐기물 소각장 건립 혹은 이전 문제, 국가의 AI 정책 추진에서 야기되는(예컨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지역별 의견의 불균형과 편차 역시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에 매우 소극적이며, 현재 생활의 질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수용하겠다는 인식이 이 시민사회에 짙게 깔려 있음을 뜻한다(이상엽 외, 2022).

그런 면에서 대중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결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럴 경우 기후 위기를 다룬 언론 보도는 대체로 도덕적 쟁점들과 유사하게 당파적 입장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이슈, 소위 ‘합의 이슈(valence issue)’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정지영, 2023; 김천수, 2025; 김다정·서수민, 2025). 온실가스나 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은 주제들은 여기서 전통적인 환경 이슈(환경오염 방지, 자연보호 등)와 마찬가지로 거의 별다른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언론 보도 역시 이러한 주제들에 집중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음 단계의 이슈로 나아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동의하더라도 이를 위해 세금을 걷거나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부터는 관계자들 사이에 매우 큰 온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부터는 합의 이슈라는 속성을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갈등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자체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 차이를 야기하는 ‘당파적 이슈(positional issue)’로 변화하는 것이다(Carter & Little, 2021). 그리하여 기후 위기를 둘러싸고 의회를 구성하는

정치권·정당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입장 차이,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정치적 차이가 이 문제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3. 기후 위기 보도에 내재된 구조적 제약 : 뉴스 조직 관행, 취재 역량과 환경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가를 수 있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에 비례하여, 과연 이 주제는 언론으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중요한 뉴스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러하며,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 문제는 오랫동안 기후 위기와 저널리즘이라는 주제에 관해 제기되었던 무수히 많은 논의와 비판의 핵심적인 주제였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쟁점이다.

기후 위기가 여타의 어느 뉴스보다 더 높은 뉴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옥스퍼드 기후 저널리즘 네트워크(Oxford Climate Journalism Network)의 공동 설립자인 볼프강 블라우(Wolfgang Blau)는 한 인터뷰를 통해 편집국 내부에서 “기후 위기보다 더 중요한 다른 주제들”로 인해 기후 위기 관련 기사들이 예정대로 출고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한다³⁾(Rahimi, 2022. 7. 20). 실제로 해외에서는 기후 위기 관련 보도가 ‘이슈 관심주기(issue attention

3) “데스크들은 새로운 게 뉴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기후 변화는 이미 새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후변화 이슈는 지난해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여전히 있을 텐데 왜 굳이 오늘 그 이야기를 써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상 이변을 더 중요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당장 그 언론사가 있는 지역의 홍수 피해가 몇 년 뒤에 닥칠지 모르는 기후 재난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죠. 기상 이변은 단순하지만 기후변화는 인과관계가 복잡하죠. 남극에서 커다란 빙산이 무너졌다거나 사상 최악의 산불이 났다거나 하면 기사가 되지만, 중요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거의 뉴스에 나오지 않거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IPCC 보고서 같은 게 발표되거나 어쩌다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때가 그나마 이벤트가 되죠”(Rahimi, 2022. 7. 20; 이정환, 2022. 11. 20에서 재인용).

cycle)'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보도량 자체는 전체 보도 건수의 5% 이하이다(Bruggemann & Engesser, 2014; Ungar, 2014). 이러한 사건 위주의 보도 경향, 그리고 보도량 자체의 부족함 현상은 국내 언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정지영, 2023; 진민정·김창숙, 2024. 12. 23).

이와 더불어 주목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언론사가 여전히 사건 위주의 기상 이변이나 재해에 훨씬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다룰 수 있는 의제들이 뉴스 가치 측면에서 훨씬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가 장기적인 의제인 만큼, 이는 뉴스룸 내부에서 그다지 높게 평가받지 못할뿐더러, 심지어 대중들 역시 이를 '우울한 기사'로 인식하여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Rabinowitz, 2021. 4. 21). CNN의 기후변화 분야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존 서터(John D. Sutter)의 기고문은 "기자들은 얼마나 상황이 나쁜지 이야기하는 데 익숙하지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Sutter, 2022. 3. 22)⁴⁾.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국내 언론에서도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한국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를 분석한 대다수 연구들은 한국 언론의 기후 보도가 비록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진민정 외, 2021; 2022; 2023; 신우열, 2023). 우선 양적으로는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시즌에만 관련 보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혹은 폭증)하는 경향을

4)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에 이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진은 한국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요약 정리한 바 있다(진민정 외, 2021, 121쪽).

1. 정재계 검증 및 감시 소홀 : 정치인들 혹은 기업인들의 책임을 묻는 기사를 보기 어려움.
2. 계절성 보도 : 기상 이변이 잦은 여름과 겨울에 집중되어 있음.
3. 정치적 양극화 :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하여 보도.
4. 논리적 비약 : 정부가 설정한 정책적 목표만 달성되면 기후 위기가 해결될 것처럼 보도.
5. 취재원 선택과 인용의 문제 : 소수의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혹은 검증 없이 인용.
6. 일관성 없는 보도 : 언론사가 한 지면에 전혀 다른 관점의 기사들을 보도.
7. 기사 내용의 획일화 :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저널리즘 관행으로 인해 유사한 보도를 낱발.

보인다. 질적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내용들이 별다른 부가설명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기후 위기 보도가 문제를 ‘기상/날씨’ 영역의 이슈로 좁게 설정하는 뉴스 조직 내부의 보도 관행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우열(2022)이 ‘언론 논리에 갇힌 기후 위기’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뉴스 조직 내부의 오랜 관행이 관습적으로 이어지면서 보도가 폐쇄적으로 구조화되는 양상을 지칭한다. 취재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부에 소속되어 기상청, 환경부 등을 주로 출입하는데, 이 구조가 실제 보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해당 출입처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기관의 보도자료를 전하거나 언론사가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적이고 입체적 접근이 어려운 현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이진혁·안차수(2025)의 지적처럼 방송 뉴스에서 반드시 영상을 동반해야 하는 보도 풍토, 기후 위기를 비교적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들이 자신의 노력 여하와는 무관하게 언제 다른 부서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축적이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만 달려있는 현실 역시 국내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를 제약하는 ‘언론 논리’들이다. 이 모든 제약의 결과, 기후 위기 관련 기사의 주제나 내용 모두 천편일률화 되어, 기후 위기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긴 호흡의 수준 높은 기사, 언론사의 개성이 발휘된 기사들은 찾아보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언론의 관행적 보도 태도는 결정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기후 위기의 횡단적 특성에 대한 언론 보도의 입체적인 대응을 가로막는다. 국내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는 그것의 사회경제적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보도가 본 이슈를 지나치게 ‘경제적 기회(economic opportunity)’라는 관점으로부터 접근한다(윤순진, 2016; 김천수, 2025). 실질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과 같은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은 그 자체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도, 현장 언론인들은 이러한 기후 위기 보도의 기사 작성 과정이 뉴스 조직의 내부적·외부적 압력에 손쉽게 노출되는 영역

이라 인식하는 것이다. 결국 기후 위기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이슈의 대다수는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관련한 이슈로 축소되었고, 또한 이런 뉴스가 상품성을 갖춘 뉴스라는 인식까지 형성되고 있다 (Hansen & Cox, 2023/2024). <한국일보>의 2022년 기업의 위장 환경주의를 감시하는 <그린워싱 탐정> 시리즈⁵⁾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친환경 선언, 혹은 ESG 경영이 혹시 '그린워싱'은 아닌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하겠다.

한국 언론 특유의 무비판적 정쟁화의 대상 속에 기후 위기, 환경, 그리고 에너지 정책과 같은 주요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특히 '탈원전'과 같은 에너지 정책의 이슈는 가장 전형적인 정쟁화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언론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특정한 과학기술이나 정책 등의 이득과 위험이라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증하는 대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의적 기사 또는 과학적·체계적 관점이 결여된 비판적 기사를 내는 현상 속에서 '진보/보수' 언론이 나뉘는 현상도 매우 자주 관찰되고 있다(심은정·김위근, 2016; 한준, 2018; 정지영, 2023). 나아가 특정한 과학기술 정책에 내재된 기술적·이데올로기적 낙관론과 편향성 문제 역시 기후 위기를 둘러싼 최근의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김다정·서수민, 2025). 결론적으로 이들은 모두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 모색의 가능성을 한층 낮추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4. 변화를 위한 언론 현장에서의 노력 탐색 : 심층 인터뷰의 시도 및 방법

이 연구는 오늘날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언론 현장의 인식 심화를 관찰하고, 변화의 계기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보도 관행에서 나타나는

5) <한국일보> 포커스 취재 <그린워싱 탐정> 시리즈. 이 시리즈는 2022년 1월에 시작되어 2023년 11월까지 진행되었다. <https://m.hankookilbo.com/Collect/7017?Page=1> 참조.

이슈의 횡단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불균형성 문제, 기후 위기 보도의 퀄리티 향상을 위한 전문적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의 비전과 실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2023년 7~8월에 걸쳐 국내 언론사에서 기후·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적이 있는 15인의 전문 기자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첫 연구가 이루어졌던 시점과의 격차를 고려하여 2026년 1월에 추가로 3명 - 따라서 총 18명 - 의 현직 언론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는 2023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총 5차례에 걸쳐 개별적, 집단적 인터뷰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사 기자 3명(A, B, C), 종합편성 방송사 기자 1명(D), 종합일간지 기자 4명(E, F, G, H), 경제지 기자 5명(I, J, K, L, M), 뉴스 통신사 기자 1명(N),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 1명(O)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략 10년차 내외의 젊은 기자들로, 사내에서 기상 전문기자 혹은 기후 위기 관련 기획취재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⁶⁾.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개인적인 경력은 아주 다양한 편이었다. 2026년 1월에는 추가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3명(P, Q, R)을 인터뷰하였다. 이들은 모두 기자 경력 5년차 내외의 젊은 연령대 기자들로, 언론사 입사 이전부터 기후 위기라는 주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지만, 실제 근무 현장에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인터뷰는 총 3가지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이슈들이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제기되었다. 질문지는 크게 1) 국내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진단, 2) 기후 저널리즘의 전문성 강화 방안, 그리고 3) 기후 저널리즘에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에 대한 질문을 기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들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해당 업무를 맡게 되기까지의 과정, 자신이

6) 다만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여건상 소위 '데스크 급'의 기후 전문기자를 찾기는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인터뷰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 점은 인터뷰 자료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명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험한 국내 기후 위기 보도의 변화 과정과 그 문제점, 기후 위기 보도의 차별적 특징과 이에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성의 구체적 내용,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체계적인 교육 과정 등), 그리고 기후 위기 보도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보도 관점과 관행, 규범적 기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주제에 한층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이 연구가 주목한 기후 위기 보도와 기후 정의라는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Ⅲ.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언론 현장의 인식 심화 : 심층 인터뷰 검토

인터뷰 대상자들은 현재 한국 언론 현장에서의 기후 위기 보도는 일단 그 주제와 빈도, 보도 실천의 전체적인 퀄리티 수준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다고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기후 보도가 기상 이변 등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후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극복의 계기들은 느리지만 차분히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언론 현장을 중심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며, 따라서 대중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보도되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단순한 ‘과학’, ‘환경’ 영역을 넘어서 주제 선정과 방향성 측면에서 기후 위기 현상의 본질에 천착하는 한층 수준 높은 ‘퀄리티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현장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종말론적인 분위기로 그려내던 재난 보도의 단계를 넘어 일상에 끼치는 영향, 대중들의 실천 방안과 같은 해법(솔루션) 위주의 보도로 진화하려는 노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 기후 위기 보도의 새로운 단계 : 2022년을 전후한 국내 언론의 인식 전환

우선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인 사항은 대략 2022년을 전후하여 국내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이었다. 먼저 이들은 양적으로 보도가 증가했다고 단언한다⁷⁾. 그리고 기사량 증가의 원인으로 그 시점에 있었던 일련의 정책적 사건들, 예컨대 정부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 선언, 그레타 툰베리의 영향, 태풍이나 수해와 같은 기후 재난 현상 자체의 증가 등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경제지 기자 I는 “이상기온이나 극단적인 날씨와 함께 원인을 설명하고, 국제뉴스로도 자주 보도하는 것 같”으며, “확실히 극단적인 기상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내 언론도 이전보다 많이 조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 기자 A는 이렇게 말한다. “방송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기후 관련 보도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방송사는 여전히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조직이나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고 있었다. 이전에는 그야말로 불모지와 같은 영역이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탄소 중립 선언한 것이 큰 계기나 변곡점이 됐던 것 같다”. 지상파 방송 기자 C 역시 비슷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 시점이 “당장 나부터도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크게 느낀 계기”였다고 말한다.

또한 주제나 방향성 차원에서의 변화를 지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과거에는 기후 위기 보도가 환경이나 과학 분야의 영역이라고 인식되었으나, 이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횡단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들의 뉴스 조직 내부의 업무 자율성이 적어도 기후 위기 영역에서는 조금씩 개선되었다는 언급도 있었다. 즉 기자들이 기후 위기에 관한 주제를 비교적 자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지 기자 K는

7) 유감스럽게도 보도량 증가에 관한 실증적인 증거는 아직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뉴스 수용자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즉 “여전히 기후 변화에 관한 뉴스 보도량은 적은 편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한다(진민정·김창숙, 2024).

“과거에는 주제 선정과 방향성에 있어 윗선의 개입이 있었고 회사의 입장과 상반된 내용은 다룰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자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 쓰기가 가능해 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거에 비해 ‘해법’ 중심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늘어났다(이정환, 2022). 기후 위기의 심각성 전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해법들이 존재하는지를 알리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지 기자 K는 “대안이 없는 그런 기사는 아예 안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기후 위기로 인해 식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기업들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부가 어떤 규제를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국내 언론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순간,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 주고 있다.

2. 언론사 조직 차원의 변화에 대한 유보적 평가

이러한 변화를 낳게 된 원동력은 역시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언론사 조직 차원에서의 변화와 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은 2010년대 이후 해외 언론에서 적지 않게 발견된 바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2017년부터 일간지 〈가디언〉을 중심으로 기후 저널리즘 영역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2021년부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독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자본(Climate Capital)’이라는 섹션을 신설하였다. BBC는 2019년부터 기후 전담 에디터를 두고 있다(Schäfer & Painter, 2019).

2022년을 기점으로 국내 언론계에도 조직 차원에서 기후 위기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기후 위기 관련 취재를 전문화한 ‘기획 부서’를 신설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분명한 지표라고 하겠다. 〈한겨레〉는 2022년부터 기후 위기로 인해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현장을 찾아 그곳 사람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연속 기획 시리즈인 <기후 위기와 인권>을 보도하였고, <연합뉴스>는 각국 특파원들을 가뭄, 홍수, 폭염 등 재난과 이상 기후 현장을 취재한 <기후 위기 현장을 가다> 시리즈를 내보낸 바 있다. 또한 KBS <9시뉴스>의 연중 기획 <기후는 말한다, ‘코드레드 : 북극을 가다’> 등과 같은 참신한 시도들이 이러한 조직적 확대를 통해 등장할 수 있었다(진민정 외, 2023).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취재 관행이었던 소위 ‘출입처 중심주의’를 탈피하여 수준 높은 기후 보도를 성취할 수 있었던 여러 조직적 단위들의 실험이 계속된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조직적 대응에 대해 언론계 내부 종사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을까? 그 평가는 비교적 유보적이었다. 무엇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시도들을 여전히 매우 특수하고 또 특별한 사례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인터뷰 대상자 C, D, O, Q, R). 이들은 여전히 기후 위기를 다루는 보도에서 언론사 내부의 협력과 자원 공유의 경험이 ‘대단히 일천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상파 방송 기자 C는 “기후 위기 보도가 여전히 편집국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 소양을 갖춘 데스크의 부재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다⁸⁾. 이 모든 요인들에 의해 기후 위기라는 것으로 포괄할 수 있는 이슈와 주제의 범위도, 기자 개인의 관점의 범위도 현실적으로 극히

8) 사실 기자 대상의 인터뷰를 통한 연구들은 대체로 (그것이 뉴스 가치 판단이든, 취재 보도 관행이든, 혹은 디지털 혁신에 관한 것이든) 주제를 막론하고 일선 기자들과 소위 ‘데스크 급’ 기자들 간의 현격한 인식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주어진 주제와 관련된 자신들의 문제의식이나 개선 노력에 비해 ‘윗분’들의 현실 인식이나 관심이 많이 부족하며, 이것이 변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이 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뉴스 및 미디어 생산 현장에 대한 인터뷰 기반 연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다(Hesmondahlgh, 2010; 박진우, 2020). 그렇기에 이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다소간 주의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이 연구는 인터뷰 대상자 섭외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데스크 급’ 기자의 섭외에 실패하였다. 이는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제약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좁은 영역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 보도를 위해 현장에서 융합적인 취재를 위한 노력, 여타 부서에서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는 노력에 대한 평가 역시 유보적이었다. 현장에서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이는 이 주제에 그만큼 헌신적이었던 일부 기자들의 개인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종합일간지 기자 E, F). 그 성과 역시 아직은 매우 미흡한 편이라고 요약하였다(경제지 기자 J). 융합적인 취재가 필요함에도 이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소통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이슈이지만, 그것이 사건·사고, 법조, 정치 이슈만큼 중요한 ‘진짜 뉴스’라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이러한 모든 협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종합일간지 기자 E, F)이라고 지적하며, 그렇기에 데스크에서 “‘시청자의 관심이 적다’, ‘내용이 어렵다’와 같은 매우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서 보다 체계적인 취재를 제약하는 것 역시 협업에 대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무관심함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혹평하였다(종합편성채널 기자 D).

3. 기후 위기 보도의 전망 : ‘전문성’을 넘어 ‘퀄리티’를 추구하는 저널리즘

이러한 현실로부터 한층 고도화된 기후 위기 보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해야 할까? 언론의 일상적인 실천 과정과 관행에서 직접 유래하는 보도 경향의 구조화에 대한 인식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만큼, 현실적인 제약을 탈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망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기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다른 하나는 기후 위기 보도가 향후 추구할 수 있는 ‘퀄리티’ 차원에 대한 인식으로, 각각에는 상이한 이해 방식이 드러나고 있었다.

우선 기후 보도의 전문성이라는 쟁점은 인터뷰 과정에서 대단히 첨예하게

제기된 문제였다. 이들은 보도 일선에 종사하면서 취재 현장에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정보를 대중의 언어로 전달할 줄 아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인 사고력’의 중요성을 한층 절감하게 된다고 말한다(인터뷰 응답자 A, E, G, O). 특히 저연차의 기자일수록, 그리고 기성 종합 뉴스 매체보다는 신생·디지털·전문 매체 종사자들일수록 새로운 뉴스 포맷, 실험적인 스토리텔링 등 젊은 층 수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기후 위기 보도를 실험할 수 있는 역량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기후 분야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기후 불평등의 현실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윤리적·규범적 자세를 확립하는 한층 윤리적인 태도와 실천 역량 역시 이러한 전문성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인터뷰 대상자 C, O, Q, R). 하지만 그 속에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이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인식의 균열은 뚜렷이 관찰된다.

이 같은 인식의 균열은 사실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기후와 환경을 다루는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들은 1960년대 서구에서 환경 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당대 중요한 환경 이슈들, 즉 유조선 사고에 따른 기름 유출, 대형 산불, 일본의 공해와 미나마타병,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 그리고 체르노빌 핵 위기 등이 다뤄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Ungar, 2014). 초창기의 핵심적인 언론 활동은 ‘과학에 대해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 과학 글쓰기’였다(Sachsman et al., 2010). 이 시기 미국의 환경 및 기후 담당 기자들이 대부분 과학 분야에서의 부전공, 혹은 대학원 학위를 보유한, 소위 ‘일반적’인 기자들과는 분명히 차별적인 존재들로 구성되었던 것은 이러한 과제를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정책이나 경제 문제를 환경과 체계적으로 결부시키는 횡단성 인식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리우 정상회의와 1997년 교토 의정서 이후의 일이다(Ungar, 2014). 기후와 환경에 대한 비서구권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이 촉발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글로벌 활동가 네트워크가 등장하였으며 이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대안적 환경·기후 저널리즘이 등장하게 된다(Antonio & Clark, 2015; Hansen

& Cox, 2023/2024). 이 시점은 환경·기후 저널리즘에 요구되는 기자 전문성의 개념 전환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현실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위한 글쓰기 역량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사고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횡단적인 인식의 역량이 서서히 정착하기 시작한다(Sachsman et al., 2010).

전문성을 둘러싼 한국 기자들 인식의 내적 균열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하였던 것은 이들이 말하는 ‘전문성’이란 상당 부분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을 구성하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것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엘리트 전문가 정보원과 엘리트 전문 기자’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한층 중요시하는 ‘구식 패러다임’에 가까운 것이다. 물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후 위기 관련 정보가 전문가들의 발언을 검증 없이 혹은 검증할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인용함으로써 왜곡되는 현상은 한국 언론의 경우에도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윤순진, 2016). 그런 면에서 보도 기자가 전문가들의 말을 소화하고 다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예컨대 지상파 방송 기자 B는 기후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가 “누가 진정한 전문가인지를 판단하고, 이들의 말을 얼마나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사고력”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역량은 ‘엘리트 전문가 정보원’과의 취재 관계에서 자신들의 글쓰기 혹은 커뮤니케이터 역량의 신뢰성을 보장받고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인식되었다(종합일간지 기자 E와 F, 경제일간지 기자 I와 J가 대표적이다). 그것이 “에너지 문제, 전력 시장의 경제적 메커니즘, 탄소 농도 측정과 포집, 기타 기후 변화 관련 공시된 국내외 정보 등의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심층 보도의 퀄리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경제일간지 기자 J). 다만 한국에 현재 기후 위기 이슈를 언급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매우 좁기에, 현실적으로 소수의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글쓰기와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량 이전에 자신들을 독자적으로 과학 지식으로 무장하는 일이 한층 중요해진다. 종합편성채널 기자 D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 그리고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니 [취재 기자의] 전공에 상관없이 답답함”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자 개인의 ‘과학적’인 전문성 획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지상파 방송 기자 B, C). 그렇기에 다수의 응답자들은 “혼자서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였다. 대기과학이나 기상학을 전공한 기자들은 스스로 IPCC 보고서, 해외 보도 사례, 보고서와 논문 등을 주로 참고하거나 관련 학회에 참석해 조언을 얻고 있었고, 비전공자 기자들은 석·박사 과정 진학해 정규 교육을 받거나, 기후 환경 단체나 기자회견 등에서 교육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과연 기자들이 소망하는 ‘전문성’이 이러한 이중적 맥락에서 기후·환경에 관한 과학적·학술적인 수준 높은 지식의 습득에 그치는 것일까? 이를 엘리트 취재원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점을 가장 중심적인 맥락으로 사고하는 것이 여전히 필수적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기후 정의를 위한 보도의 진화라는 전망 속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가? 인터뷰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질문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을 (전문가 취재원의) 과학적 전문성을 전달하거나, 혹은 이들을 대체하여 스스로가 과학적 전문성을 가지는 집단이 되고자 하는 과거의 맥락으로 축소시키는 인식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과제는 결국 앞으로의 기후 보도의 전망이 전 사회적으로 기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식 체계를 마련하는 보다 큰 과제로 향해야 하며, 그것을 기후 보도의 ‘퀄리티’ 판단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일이다(Brüggemann et al., 2020; Schäfer & Painter, 2021). 그것이 단순한 전문적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기후 저널리즘의 전문성이 새롭게 지향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는 직업 현장에서 기후 보도를 여타의 이슈와 경쟁하는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일에서 출발한다. 정치, 경제, 국방, 노동, 문화 등 언론이 일반적으로 형성시키는 뉴스 가치의 분포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적어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앞의 모든 분야에 대해 기후라는 관점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는 ‘횡단적’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사실상 어떤 분야에 속한다고 정할 수 없는 ‘큰 흐름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자들이 기후 위기를 다루어야 하고, 또 기후 위기를 다루는 기자들은 모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측면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이를 다루어야 한다”(지상파 방송 기자 B)는 언급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후 위기는 결코 개별 취재 부서나 출입처 단위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며, 서로 다른 영역들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반영한 다양한 시각이 기자들에게 요청된다. 이 모든 복합적인 연결의 맥락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기후 보도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므로 각계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이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대중들 및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핵심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횡단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또한 기후 정의라는 새로운 전망의 실현을 위해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전문적 역량이 될 것이다.

4. 기후 위기의 지역성과 글로벌 : 해법을 모색하는 저널리즘으로의 진화 필요성

인터뷰 대상자들은 향후 기후 위기 보도를 둘러싼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대중들에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의 언론 보도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진전하였음에도 여전히 위태롭다는 유보적 태도에서 직접 유래한다. “기후 위기를 부각시키는 경고성 기사도 맥락 없이 반복될 경우 대중들의 즉각적인 공포심을 야기하고, 이것이 축적되면 다분히 종말론적 분위기를 풍기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후 전문 인터넷 언론사 기자 O). 지나친 공포심은 결국 일체의 실천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대신 기후 위기 문제가 상이한 사회적 집단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그것들이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장임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기후 전문 인터넷 언론사 기자 O, 인터넷 언론사 기자 P). 이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 및 합의 중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해법 지향적인 저널리즘, 즉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델이 특별히 기후 위기 보도에서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해당 사회의 어떤 국면적 맥락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지를 설명하는 ‘맥락 보도’의 관점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경제지 기자 J). 그럼으로써 언론은 기후 보도의 질적 향상을 통해 대중들의 무관심 극복을 이끌어내고 이들을 인식의 전환 및 실천으로의 진입으로 향하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후 보도에서 대안적인 비영리 저널리즘,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은 규모의 언론사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적 위기 국면은 대형 레거시 언론사들이 대중적인 수요가 적다고 간주하는 전문 분야들 - 기후 위기나 환경이 대표적이다 - 에 대한 조직적인 관심이나 투자를 이미 중단한지 오래라는 것이다(Mercado-Sáez & Chavez, 2020)⁹⁾. 그리고 맥락은 조금 다를지언정, 이는 한국 언론 역시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

9) “일부 주요 신문사만 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저널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환경 저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미디어에서 환경 정보를 위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정치, 경제 등의 콘텐츠에 집중하는 미디어에서 환경 전문 섹션이 없다면 환경적 관점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공영 미디어만이 전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Mercado-Sáez & Chavez, 2020, 243-244쪽).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의 기후 위기 보도 역시 이와 거의 유사한 구조적 배경을 안고 있다.

제이다. 즉, 환경 문제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지역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체적으로 다시 고민하는 과정은 대형 레거시 언론사들보다는, 한층 대중 밀착적이면서도 실험성이 강한 지역 언론사에 보다 적합한 것이다. 지역성을 충실히 구현하는 언론이 지역 차원에서 기후 이슈에 접근하면서 ‘실행 가능한 해법’을 한층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더 많은 실험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블로그나 유튜브를 망라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지는 보도의 속도, 시각과 영상 중심의 접근, 대중적 활동가들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는 실천적인 장점들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취재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인 실천의 가능성이라는 언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인터뷰 응답자 I, K, O).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사실 매우 유보적이다. 이 문제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크게 예상하지는 못한 답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터뷰 응답자의 구성이 불가피하게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실제 지역에서 기후 문제를 주요한 관심사로 놓고 활동하는 기자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제의식 자체가 공유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성 강화’에 대한 현재의 응답 결과가 직접적으로 기후 보도의 구체적인 미래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정적으로 기존의 보도 방식과 관행, 즉 ‘전문직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취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후 위기 보도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보도 방식으로 보도 전략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향후 보다 상세한 이론적·실증적 검증이 필요한 주제라고 하겠다.

IV. 전환기의 기후 위기 보도 : 결론 및 함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연구는 기후 위기를 다루는 언론 현장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를 극복하면서 한층 높은 수준의 보도를

행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셰퍼와 페인터(Schäfer & Painter, 2021)의 연구가 언급한 대로 기후 저널리즘은 오늘날 “전통적인 뉴스 매체의 위기, 온라인 소셜 미디어의 증가, 그리고 공중 커뮤니케이션에서 목소리와 콘텐츠의 다원화”라는 상호 연동된 변화의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에 비추어 보자면, 이 연구는 언론 현장 종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언론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러한 상호 연동된 변화의 국면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진단을 행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인들의 자사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 보도에서 언론인들의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 그리고 기후 위기 보도의 미래 전망과 새로운 규범적 기준에 대한 인식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내 언론의 기후 위기 이슈에 대한 변화한 대응 태도와 주요한 보도 양상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낳게 만든 언론인들의 선구적인 노력, 뉴스 조직 내부의 여러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조직적 노력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인터뷰 대상자들은 여전히 국내 언론의 기후 보도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라는 현상의 횡단적 측면에 대한 충실한 보도, 나아가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식 역량의 획득에 필요한 개인적·조직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이 있었다. 기후 위기라는 현상은 횡단적이지만, 기후 위기 보도는 이에 매우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응을 위한 준비가 단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습득이라는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언론인들은 기후 위기 보도의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여, 한층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를 글로벌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퀄리티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실험해야 한다는 비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언론인들의 역할 인식과 전문성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퀄리티 저널리즘’ 실현을 위한 자신들의 취재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한

층 높은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의 개념을 둘러싼 내적 균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시작될 필요성도 함께 드러났다.

보다 융합적인 시각에서, 맥락과 함께 기후 위기 이슈를 전달하면서, 이를 ‘기후 정의’ 혹은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노력하면서,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 진행되는 퀄리티 저널리즘의 구현은 결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규모의 대형 언론사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어쩌면 자신들의 지역 사회와 훨씬 직접적으로 밀착하여, 한층 구체적인 방식으로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후 위기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지역 언론들이 이러한 퀄리티 저널리즘을 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제기한다(장슬기, 2024. 8. 7). 가장 지역적인 것을 통해 가장 글로벌한 목표에 도달 가능한 것 역시 기후 위기 이슈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과제들은 이 연구 속에서는 아직은 현장 기자들의 인식 차원에서 제기되었지만,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이론적·실증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한층 정교한 미래 전망과 실천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7월 3일 접수
2026년 8월 19일 수정 완료
2026년 8월 7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기후정치바람 (2026. 3. 9). <2026 지방선거, 유권자의 선택: “기후가 표심을 혼든다”> 세미나 자료집. <https://climatecitizen.co/posts/BataOLO>
- 김다정·서수민 (2025). 기후 위기 해결 담론의 권력 구조와 교착의 경로: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보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34호, 7-57쪽.
- 김선철 (2022). 기후위기의 현실과 도전. <황해문화>, 114호, 14-37.
- 김수진 (2023). 녹색전환의 국가 정당화 의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당 정치의 중요성. <경제와사회>, 137호, 12-41.
- 김종길 (2026). 기후위기 시대의 다중격차와 교차성: 기후정의를 위한 전환적 기획. <사회통합연구>, 제7권 1호, 149-184.
- 김천수 (2025). 국가기간뉴스통신사와 기후변화: <연합뉴스>의 기후변화 보도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9권 1호, 58-85쪽.
- 박시원 (2016).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유엔기후변화 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285-322.
- 박진우 (2020). 미디어 생산연구의 계보: 연구 전통과 자원의 계승 및 단절. <한국언론정보학보>, 101호, 11-47.
- 신방실 (2023). 일상이 된 기후 위기와 기후 뉴스를 원하는 시청자, 그러나 따라가지 못하는 언론사. <신문과방송>, 626호(2023년 2월호), 28-31쪽.
- 신우열 (2023). 언론 논리에 갇힌 기후 위기. <한국언론학보>, 제67권 6호, 87-114.
- 심은정·김위근 (2016).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신문 보도 프레임 변화 연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 비교. <한국언론정보학보>, 76호, 124-150.
- 윤순진 (2016). 한국 언론기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보도 태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권 1호, 7-61.
- 이건혁·안차수 (2025). 기후 위기와 언론인 의식: 기후 관련 연합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8권 4호, 133-166쪽.

- 이상엽·양유경·김소희 (2022).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기반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세종 : 한국환경연구원.
- 이정환 (2022. 11. 20). 기후변화, 충격과 공포를 넘어 해법과 행동을 이야기 하자.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33>
- 임희원 (2023). 기후 위기와 한국인의 위험 인식. <연구동향 건강과 뉴미디어>, 제37호, 3-7.
- 장슬기 (2024. 8. 7). 지역신문으로 본 폭염·폭우 기후 위기의 현장. <미디어 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77>
- 정지영 (2023). 국내 기후 위기 언론 보도에 대한 탐색적 고찰 : 미디어 사회적 책임에서부터 어카운터빌리티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제70호, 5-54쪽.
- 정태석 (2023).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생태 전환 논쟁과 생태 정치 전략의 성찰. <경제와사회>, 137호, 42-79.
- 정태용 (역음). (2023). <기후위기 시대, 12가지 쟁점>. 서울 : 박영스토리.
- 조운재 (2019). 기후변화와 인권 : 환경파괴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外法論集>(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3권 2호, 115-144.
- 진민정 (2023). 기후 위기 심각성, 국민은 인지하나 언론 보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신문과방송>, 626호(2023년 2월호), 32-38쪽.
- 진민정·이봉현·신우열 (2021). <국내 기후변화 보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 진민정·이봉현·문영은 (2022). <기후·환경 저널리즘의 범주와 활성화 방안>.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 진민정·박진우·방희경 (2023). <기후저널리즘의 원칙과 교육 방안>.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 진민정·김창숙 (2024). 국내 기후변화 및 관련 보도에 대한 인식. <Media Issue>, 제10권 6호.

- 최명애·박범순 (2019). 인류세 연구와 한국 환경사회학 : 새로운 질문들. <ECO>, 제23권 2호, 7-41.
- 한상운·조공장·김도균·진대용·정행운·강선우·김민정·반영운·신승철·정주철·한재각·홍덕화·황인철 (2019).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I)>. 세종 : 한국환경연구원.
- 한재각 (2022). 한국에서 기후정치는 가능한가? 기후정의 동맹의 조건. <문화/과학>, 109호, 152-169.
- 한준 (201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언론 보도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 <한겨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2권 2호, 145-175.
- 홍덕화 (2020). 기후불평등에서 체제전환으로 : 기후정의 담론의 확장과 전환 담론의 급진화. <ECO>, 24권 1호, 7-50.
- Antonio, R. & Clark B. (2015). The climate change divide in social theory. in Brulle, R. & Dunlap, R. (eds.). *Climate Change and Society : Sociological Perspectiv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Boykoff, M. T. (2008). Lost in translation? United States television news coverage of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1995-2004. *Climatic Change*, 86, 1-11.
- Brüggemann, M. & Engesser, S. (2014). Between consensus and denial : Climate journalists as interpretative community. *Science Communication*, 36(4), 399-427.
- Brüggemann, M., Lörcher, I. & Walter, S. (2020). Post-normal science communication : Exploring the blurring boundaries of science and journalism. *Journal of Science Communication*, 19(03), A02.
- Carter, N. & Little, C. (2021). Party competition on climate policy : The roles of interest groups, ideology and challenger parties in the UK and Ireland.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42(1) 1-17.

- Crenshaw, K.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 139-167.
- Dyke, J., Watson, R. & Knorr, W. (2021. 4. 21). Climate scientists : Concept of net zero is a dangerous trap.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climate-scientists-concept-of-net-zero-is-a-dangerous-trap-157368>
- Dryzek, J. (2005). *The Politics of the Earth : Environmental Discourse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Hansen, A. & Cox, R. (eds.). (2023). *The Routledge Handbook of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 2nd ed., New York: Routledge.
- 유경한 외 (옮김). (2024).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 한경사.
- Hesmondhalgh, D. (2010). Media industry studies, media production studies. in Curran, J. (ed.). *Media and Society*, 5th ed. (pp. 145-163). London : Bloomsbury.
- Mercado-Sáez, M. T. & Chavez, M. (2020). Environmental journalism in Spain. *Routledge Handbook of Environmental Journalism*(pp. 234-245). New York: Routledge.
- Pezzullo, P. C. "There is no Planet B": Questions during a power shift. *Communication and Critical/Cultural Studies*. 10(2-3), 301-305.
- Pezzullo, P. C. & Onis, C. M. (2018). Rethinking rhetorical field methods on a precarious planet.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103-122.
- Poushter, J., Fagan, M., & Gubbala, S. (2022. 8. 31). Climate change remains top global threat across 19-country survey.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2/08/31/climate-change-remains-top-global-threat-across-19-country-survey/>
- Rahimi, T. (2022. 7. 20). How journalists can better sound the alarm

- on climate change. Center for Journalism Ethic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ttps://ethics.journalism.wisc.edu/2022/07/20/how-journalists-can-better-sound-the-alarm-on-climate-change%EF%BF%BC/>
- Raphael, C. (2019). Engaged communication scholarship for environmental justice: A research agenda. *Environmental Communication*, 13(8), 1087-1107.
- Revkin, A. (2022. 10. 3). Five ways media and journalists can support climate action while tackling misinformation. *UN News*. <https://news.un.org/en/story/2022/10/1129162>
- Sachsman, D. B., Simon, J., & Valenti, J. M. (2010). *Environment Reporters in the 21st Century*. New Brunswick: Transaction,
- Schäfer, M. S. & Painter, J. (2021). Climate journalism in a changing media ecosystem: Assessing the production of climate change-related news around the world.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12(1), e675.
- Sutter, J. D. (2022. 3. 22). It's time for journalists to talk climate change solutions. *Nieman Report*. <https://niemanreports.org/articles/journalism-climate-solutions/>
- Thunberg, G. (2022). *The Climate Book : The Facts and the Solutions*. London : Penguin Books. 이순희 (옮김). (2023). <기후 책>. 서울 : 김영사.
- Ungar, S. (2014). Media context and reporting opportunities on climate change : 2012 versus 1988. *Environmental Communication : A Journal of Nature and Culture*, 8(2), 233-248.

Journalists' Evaluation and Outlook on Climate Crisis Reporting: Journalism's Move Toward Climate Justice Beyond Scientific Expertise

Jin-Woo Park
Konkuk University

Minjung Jin
Korea Press Foundation

Soel-Ah Kim
Hongi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pecific forms of self-perception regarding journalists' roles in climate crisis reporting,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of future prospects and new normative standards, based on Korean journalists' evaluations of their own news organizations' climate coverage.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5 Korean journalists whose primary beat is the climate cri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journalists no longer treat the climate crisis as a secondary issue, and they highly evaluated the concurrent execution of organizational responses and individual efforts. Second, nevertheless, they commonly pointed out that their organizations' reporting tends to be highly asymmetrical concerning the cross-cutting aspects of the climate crisis phenomenon. Furthermore, reflecting the evolving reality of climate journalism, the interviewees recognized that climate crisis coverage is the primary domain demonstrating the potential for a new "quality journalism"—one that further strengthens regionality and integrates it with a global perspective.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heightened social and policy attention to methods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journalists' reporting capabilities to realize this "quality journalism,"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ir role perception and professional judgment in climate crisis reporting.

Key Words: Climate Crisis, Climate Justice, Reporting Routine, Journalistic Speciality, Quality Journalism

신취약계층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중심으로

허 준 기*

요 약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포괄하는 신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신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기존 연구 동향 분석은 개별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수행되어 서로 다른 신취약계층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경향과 집단별 특수성을 비교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신취약계층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중심으로 국내 연구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족돌봄청년 관련 연구 59편과 고립·은둔청년 관련 연구 66편 등 총 125편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기준은 연도별 연구 생산 추이, 연구 분야,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정책 대안으로 구성하여 두 집단의 연구 특성과 차이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에 관한 연구는 202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학술적 관심 또한 확대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는 사회복지·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축적되었으나,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가족, 돌봄 및 교육 영역으로, 고립·은둔청년 연구는 상담심리, 정신건강 및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 학문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연구 방법에서는 양적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질적연구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발전 과정은 두 집단의 잠재된 취약성의 가시화와 개념정립, 경험과 위험요인 탐색, 정책화와 지원체계 구축, 회복과 사회통합의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두 집단은 취약성의 발생 경로와 연구주제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히 포괄되지 못한 문제가 최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가시화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였으며, 과잉연결과 관계단절이라는 상반된 관계적 위험이 청년기 발달과업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독립 연구자, gjwnsr12000@hanmail.net

본 연구는 신취약계층을 하나의 독립적인 학술적 분석범주로 논의하기 위한 기초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축적되어 온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연구의 비교를 통해 신취약계층 연구의 공통성과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향후 자립준비청년, 플랫폼노동자,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른 신취약계층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비교연구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신취약계층,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연구 동향

I. 서론

최근 국내에서는 ‘신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4년 교육부에서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사회정책포럼을 개최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24년 신취약청년 지원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22년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신취약계층에 주목하고 정책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5년 3월 25일자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신취약청년이라고 부르며 시범사업을 시도하는 집단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2026년 통계청의 ‘법·제도상 취약계층의 통계적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도 전통적 취약계층과 신취약계층을 구분하면서 신취약계층으로 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 기후변화 및 재난·안전 취약계층, 디지털 취약계층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정책 범주로 신취약계층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플랫폼 노동자 고용 환경에 주목하거나,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고립청년 문제가 다루어짐에 따라 신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명명하는 신취약계층의 범위나, 정책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집단이 각기 다르고, 용어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등 학술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는 못한 모습을 보인다. 신취약계층을 디지털 전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초고령화 및 저출생이라는 인구 구조변화 등으로 새롭게 등장한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기엔 돌봄 사회화의 부재로 기존 복지체계에서 배제되어온 사각지대 문제가 결합된 측면도 있다. 기존부터 배제되어 온 취약집단이지만 이제야 언론 등을 통해 등장한 집단이 있는 것이다. 신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집단을 살펴보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은 새롭게 등장한 취약계층이라고 하기에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최근에서야 정책적 접근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집단이다. 플랫폼 노동자, 디지털 취약계층 등은 새로운 사회변화로 나타나는 취약집단이다. 이처럼 신취약계층의 정의와 포괄하고 있는 집단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연구에서도(민경아·길유미, 2026) 언급하듯이,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에서의 정의가 저마다 다르고 포함하고 있는 집단도 다르다. 이에 근거한 통계에서도 조사 대상과 범위가 다르며, 신취약계층을 다른 통계 데이터는 기존 통계로 파악이 어려워 새로 개발 중인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도 신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포함하는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여 제시할 때 향후 정책 집행과 통계 생산에 더욱 명확한 기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취약계층이라는 정책, 학술 개념 자체의 형성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 동향 분석은 이러한 과정으로 가기 위한 시도이다.

더불어 신사회위험에 의해 신취약계층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신취약계층의 정의가 변화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집단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존재한다. 신사회위험이 학술적 논의로 등장했을 때 제시된 위험의 종류와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위험이 다른 측면으로 신사회위험이 확장 또는 재구성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신취약계층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하위 집단으로 포괄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들을 신취약계층이라고 명명하고, 특징을 파악하며, 대응해나가야 하는지를 일정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취약계층에 관한 기존 연구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취약계층에 관하여 정의하고, 신취약계층에 어떤 집단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다룬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취약계층 용어의 사용 맥락과 포괄하는 집단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동반한다. 첫째, 신취약계층, 새로운 취약계층, 신복지취약계층, 신사회취약계층 용어 중 무엇이 더 적합한가. 둘째,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와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신사회위험 개념과 연계되거나 불일치하는 지점이 있는가. 신사회위험의 양태가 달라질 때마다 신취약계층 집단도 달라진다면, 신취약계층은 단지 정책적 용어이고 학술적 개념으로 다룰 때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넷째, 신취약계층에 누가 포함되는가이다.

신취약계층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신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개별 집단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신취약계층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각 신취약계층을 다룬 연구 동향 분석은(박병금, 2023; 2026; 구창민, 2025; 김도희, 2024; 이효영, 2019; 광미선·박지영, 2024; 이상희·이윤주, 2024; 방미현·이영민, 2020; 김강민·김수영, 2026; 최보람·이재립, 2024; 정소영·조정민, 2025; 김용갑·정한별·박지원·문성호, 2025; 김을수·조소연, 2024) 한국사회의 신취약계층에 관한 전체 흐름 파악에 한계를 지닌다. 신취약계층에 관한 연구 동향이 개별적으로 분화되어 연구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신취약계층에 관한 제도적 한계와 취약 특성의 원인을 진단하기 어려워지면서 논의가 파편화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 소모적인 결과로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취약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인지 혹은 닥쳐올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인지 집단별 공통된 요인으로 도출하려는 시도가 현재의 개별 연구 동향 분석으로는 힘들다. 하나의 새롭게 명명되는 집단이 생겨날 때마다 새로운 법과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부 부처를 비롯한

행정영역은 이 집단에 대한 대응팀이나 센터를 설립하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문제 해결이 더디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각 집단 간 특성이 공통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대응체계에서 부재한 점을 짚어볼 때 새롭게 생겨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병렬적 나열과 정책 집행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연구를 각각의 독립된 연구영역으로만 다루지 않고 ‘신취약계층’이라는 상위 범주에서 비교하려는 이유는 개별 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취약성을 가진 집단이 기존 복지체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포착되지 못하다가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가시화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신취약계층이라는 범주가 형성되는 공통적인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즉 본 연구에서 신취약계층은 이미 확정된 동질적 집단의 명칭이라기보다, 기존의 소득 및 인구학적 기준만으로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성이 어떠한 사회적·제도적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구성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상위의 분석범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신취약계층 내 여러 집단의 연구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어느 집단이 가장 먼저 연구되었는지, 한국의 신취약계층은 정부 정책의 측면에서, 연구의 측면에서 청년 중심인지, 노동 중심인지, 돌봄 중심인지, 연구 방법이 집단마다 다른지, 정책 제언이 달라지는지 등으로 비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의 신취약계층으로 거론되는 모든 집단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보다는, 가족돌봄청년과 은둔·고립청년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이 특성이 상반되기에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두 집단은 복지사각지대 문제로 청년기에 위험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계적 위험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관계 속에서 부여된 책임이라는 과잉연결로부터 발생하는 발달지연의 문제를 겪고 있다. 고립·은둔청년은 가족, 또래, 지역사회와 관계의 단절로부터 발생하는 취약성이 있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신취약계층 안에서 상반된 관계적 위험에 처했

지만 발달과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양태를 가지고 있기에 비교사례로서 높은 분석적 유용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두 집단 모두 유사한 시기에 전혀 새로운 위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속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로 가시화되고 정책 집행과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두 집단 사이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지, 다르다면 어떤 양상을 보여주기에 보완할 수 있는 연구 공백이 있는지 파악할 때 유용하다고 보았다.

셋째, 이 때문에 이미 연구 동향 분석이 존재하는 집단을 비교하는 것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개별화된 기존의 연구 동향 분석을 넘어서 두 집단에 관한 연구를 동일한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비교함으로써 신취약계층 연구의 공통점과 집단별 특수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넷째, 보건복지부에서는 두 집단을 신취약계층이라고 하며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법으로도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는 신취약계층 집단으로 규정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민경아·길유미, 2026) 두 집단을 함께 다루는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두 집단을 신취약계층이라는 범주로 비교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명명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상선정 방식으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취약성이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형성되는 공통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취약계층 전체의 연구동향을 일반화하려는 연구가 아니라,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라는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신취약계층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연구경향과 집단별 특수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범위를 한정한다. 이를 통해 신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이 독립적인 학술적 분석범주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자립준비청년, 플랫폼노동자, 디지털 취약계층 등으로 비교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기초적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동일한 분석틀로 비교하여 두 집단 연구의 공통성과 특수성을 규명

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신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이 학술적 분석범주로 발전할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신취약계층 정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취약계층에는 어떤 집단들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이후 신취약계층 내 집단별 연구는 어떤 특징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연구동향을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존재되어 있는 신취약계층 정의와 포함되는 집단을 다룰 때 논의 심화에 기여할 수 있고, 관련 연구 동향의 체계적 분석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공백을 찾아내고 향후 연구과제 제시와 대안 마련에 유용하다.

II. 이론적 논의: 신취약계층은 누구인가

1. 기존 연구에서의 정의

신취약계층의 특성과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사회위험에 대한 이해와 신취약계층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신사회위험은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고용 구조 변화, 가족 형태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에 주목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Esping-Andersen, 1999; Taylor-Gooby, 2004).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족해체는 기존의 복지국가가 상정하는 사회권의 의미를 바꿔 놓음으로써(Orloff, 1993) 이후 대응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의 문제 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Bonoli, 2005).

이처럼 신사회위험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신사회위험의 학술적 논의가 심화되는 시기에도 국내에서 신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다. 2008년 경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을 지칭하면서 교육자료에서 등장하기도 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08),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두드러지며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집단도 있었다.

이들을 신취약계층이라고 하면서 국내에서의 정책적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즉, 학술적 차원에서 신사회위험은 개념화되어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취약계층은 한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책적 용어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신취약계층은 신사회위험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신사회위험이 위험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면 신취약계층은 그 위험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어떠한 집단이 기존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뒤늦게 정책대상으로 구성되는가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사회위험론을 신취약계층 개념의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되 양자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또한 신취약계층은 현재 한국의 정책환경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학술개념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한국적 정책범주가 어떠한 학술적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신사회위험과 신취약계층이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신사회위험에서 주목하는 돌봄 공백, 불안정 노동의 문제가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가족돌봄청년이나 고립·은둔청년,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문제로 가시화 되며 정책 대상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사회위험에서 다루는 위험의 종류가 확장되고, 이에 따라 더 다양한 신취약계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취약계층,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 심화로 나타나는 재난 취약계층은 신사회위험 개념의 확장과 재구성 속에서 신취약계층에 포함된 집단을 더욱 다양하게 늘리고 있다.

신취약계층이 누구이고, 어떤 집단이 포함되는지 정의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태완·이주미·김기태·김문길·임완섭·조성은·함영진·정세정·김경휘·성은미, 2022: 120)의 연구에 따르면, 신사회위험 속에서 신취약계층을 협의의 개념에서 “전통적 위기를 넘어 신사회적 위험(돌봄, 정서, 고립, 배제 등) 속에 있으며, 경제적 기준에 부합되지만 부양의무자 조건, 위기사유, 신청 오류, 전달체계 미비, 미신청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배제계층 혹은 비공식적 취약 계층”으로 보고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일정 자산

(소득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사회적 위험(돌봄, 정서, 고립, 배제 등)의 위기 속에서, 경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소외·배제계층 혹은 비공식적 취약 계층”으로 정의한다(김태완 외, 2022: 121).

〈표 1〉 새로운 취약계층 범주화

구분		세부 범주	
		개인	가구
인구사회적 요소		- 생애주기 특성 : 아동, 청년, 장년, 중장년 및 노인 - 개인 및 가구특성 : 장애인, 알콜릭, 정서적 질환, 교정시설 퇴소자, 자녀양육 청년,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성소수자, 자립준비청년,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등 - 지역 특성 :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적 요소		- 소득과 지출 · 협의 : 빈곤층 및 차상위층(⇒기준중위소득 75% 수준) · 광의 : 중간계층(예, 중위소득 100% 이하)	
사회적 위험	전통적 위험	빈곤, 실업, 노령, 질병, 장애, 사망, 폭력(⇒사회보장기본법)	
	신사회 위험	돌봄부재(가족내 돌봄대상자 있음), 고립·단절, 정신(자살, 경제성지능인 등), 불안정고용(→차별 포함) 등	출산·양육, 주거불안(전월세 비용 부담, 노인하우스푸어), 과다채무, 재난·안전 등
	미래 사회 위험	- 디지털전환 : 고용불안정, 디지털소외 등 - 기후위기 : 기후위기층 - 뉴팬데믹 : 감염병위기 등	

자료: 김태완 외(2022: 122).

이에 따라 김태완 외(2022)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 준비 청년, 고독사 위험 집단,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기후위기 취약 계층, 재난 취약계층, 디지털 취약계층, 1인 가구,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금융 부채 과다 저소득층 등 다양한 집단을 신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있다. 신취약계층을 소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익숙한 취약계층이 아니라,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경제적 조건에 부합 하는가와 별개로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위험이 다각화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하는 취약 집단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사각지대와 신취약계층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이를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신취약계층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는 기존 제도의 한계나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말하고 있으며, 신취약계층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신사회위험을 겪고 있는 집단도 포함하고 있어서 유사하지만 다른 지점도 있다. 예를 들어 복지 사각지대에는 놓여 있지만 신취약계층은 아닌 전통적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신취약계층이지만 사례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기존 복지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기존 복지제도가 닿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영역의 위험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집단으로 보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은 복지 사각지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복지 사각지대라기보단 새로운 노동 구조에서의 사각지대화, 디지털 취약계층은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격차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어려움이라고 할 때 조금 다른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취약계층에는 예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된 집단과, 사회구조 변화로 신사회위험에 노출된 집단으로 나뉘서 포괄할 수 있다.

이는 신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틈새복지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기존 복지제도에서 누락된 대상을 포함시키고, 소홀한 영역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위험 속에서 나타난 집단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와 신취약계층은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시화되는 원인과 경로에 따라서 구분하여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2. 신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신취약계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위험발생의 새로움이다. 디지털 전환, 플랫폼경제, 기후위기, 팬데믹 등 이전과 다른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

의 위험이 발생하고 이에 노출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둘째는 가시화와 정책 대상화의 새로움이다. 위험이나 취약성 자체는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대상범주와 선정기준으로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다가 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관심을 통해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부상한 집단을 의미한다.

이 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발생 또는 사회적 가시화 시점, 기존 복지제도의 포괄 여부, 소득·자산 등 전통적인 경제적 기준만으로 취약성을 포착할 수 있는지 여부,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명명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국내 정책 및 선행연구에서 신취약계층으로 논의되는 집단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겪지 못한 새로운 사회위험 속에서 등장한 신취약계층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산업과 노동형태 변화 속에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디지털 전환으로 정보접근과 활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재난 취약계층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새롭게 부상한 정책 대상인 신취약계층으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장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고독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은 신사회위험의 양태 중 하나인 돌봄 공백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위험의 원인이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와 같은 최근에 나타나는 신사회위험과는 다르다. 1990년대부터 논의된 돌봄 공백 위험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다가 이제야 부각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신취약계층으로 가시화의 원인과 경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집단(과다 부채, 북한이탈주민)은 이전부터 취약계층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신취약계층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1인 가구 자체를 신취약계층의 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 집단이라기보다는 가구 형태이고, 1인 가구 안에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이 전부 포함되어 전통적 취약계층과, 신취약계층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1인

가구라고 해서 취약한 것이 아니라 취약한 1인 가구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7개 집단에 1인 가구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신취약계층을 복지 사각지대 또는 신사회위험과 동일시하는 것을 피하게 한다. 복지 사각지대가 기존 제도의 적용 및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제에 초점을 둔다면, 신사회위험은 후기산업사회의 구조변화로 나타나는 위험의 성격에 초점을 둔다. 이에 비해 신취약계층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또는 기존 제도의 포괄 실패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그 집단이 사회적·정책적으로 새롭게 명명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의 정의와 특징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34세 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세~34세에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근거)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 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35세~39세 청년이 제외되거나 돌봄대상 가족을 민법 제779조로 한정 짓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허준기 외, 2025).

가족돌봄청년은 영 케어러(Young Carer)로 1993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장애, 정신질환, 약물, 알콜 의존,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의미한다(Aldridge and Becker, 1993). 이후 18세~24세 사이 청년층까지 돌봄자의 범위가 확대된 영 어덜트 케어러

(Young Adult Carer)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다(Becker and Becker, 2008). 한국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조금 더 넓은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전 연령대에 걸쳐 돌봄의 사회화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의 대표적 특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이들은 돌봄과 생계활동의 이중적 부담에 놓여 있다(허준기·김윤영·박재형, 2024). 이로 인해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이 부족하다. 특히 휴식과 여가를 위한 쉼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둘째,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의 부족은 학업 및 진로 등 발달과업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김주현, 2024). 가족에 대한 돌봄과 생계를 우선시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셋째, 결국 개인 휴식의 부족과 발달과업 지연은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진다(허준기 외, 2024). 교우 관계를 이어가거나 사회적 교류를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만들기도 어렵고, 이는 궁극적으로 물질적, 비물질적 격차가 심화되도록 만든다.

고립·은둔청년도 가족돌봄청년과 마찬가지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34세 이하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고립·은둔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모호한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 지역 간 지원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청년의 고립과 은둔을 연속선 상에서 바라보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주로 취업 교육을 비롯한 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접근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박정민·송현구·라수현, 2025).

고립과 은둔에 대한 정의는 학술연구에서도 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윤수진·송인실·정화정·백우인, 2026). 중요한 점은 고립 상태의 장기화가 은둔으로 이어지고, 향후 고독사까지 나아간다는 점에서 고립·은둔을 해결해야 하는 상태가 아닌, 고통에 대응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Nonaka, Takeda and Sakai, 2022; 윤수진 외, 2026).

대부분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가족 외 타인과 교류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집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고립·은둔청년은 불안정 노동 상태에 놓이게 된다(서울특별시, 2022).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거나 사회활동 및 학업 중단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주로 임시직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거나 무직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서적 건강이 취약한 특성도 있다(서울특별시, 2022). 미래 불안, 무력감,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우울감이 깊어져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황이다.

2. 연구 방법

신취약계층으로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고립청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서 RISS, DBpia, KISS, KCI, 스콜라 학술자료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 학술논문을 수집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을 검색어로 하여 2026년 6월까지 등재된 학술논문으로 선정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브리프와 같은 학술전문잡지글은 제외했다. 학술지 논문 이외의 연구 결과물은 동일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술지의 글이 많이 논의되고 유통된다고 할 때 학술지로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관련 연구는 59편, 고립·은둔청년 관련 연구는 66편으로 총 125편이 선정되었으며 주로 신취약계층을 개별 집단으로 나눠 연구 동향을 다룬 논문을 준거로 삼아서 분석 기준을 도출했다(박병금, 2026; 구창민, 2025; 김도희, 2024; 광미선·박지영, 2024; 이상희·이윤주, 2024; 이효영, 2019). 분석 기준은 연도별 연구 수, 연구 분야,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제시되는 정책 대안이다. 연도별 연구 수를 통해 매년 두 집단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발간되었고 증가 추세인지, 특정한 분기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 분야는 사회복지·사회정책, 상담·심리·정신건강,

디자인 등 어떤 연구 분야에서 더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는지 본다. 연구주제는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기준을 참고하되, 125편의 논문에서 제시된 연구목적과 핵심 연구질문을 검토하여 귀납적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최종적으로 경험·관계·정신건강, 실태·유형·영향요인, 생애과정·진로·노동, 정책·제도·서비스, 담론·인식·개념의 다섯 범주로 분류하였다. 범주 간 중첩이 발생하는 경우 논문에서 사용된 변수나 연구방법이 아니라 주된 연구질문과 설명대상을 우선적인 분류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 변수를 활용하더라도 고립·은둔의 발생 가능성이나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면 ‘실태·유형·영향요인’으로, 우울·불안·삶의 만족 등 정신건강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면 ‘경험·관계·정신건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효과 및 전달체계를 핵심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정책·제도·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을 통해서는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 문헌 연구 등으로 나뉘는 경향을 보면서 어떤 방식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부족한지 살핀다. 연구 대상은 대부분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당사자이겠지만 당사자들의 주변(가족, 사회복지사 등)을 다루는 연구가 있는지, 이에 따른 연구 결과가 기존 연구가 바라보는 대상의 특성과 다른 해석을 하는지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각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을 종합하여 어떤 방식의 정책 제언이 주로 이루어지고, 어떤 정책 제언이 부족한지 살펴서 결론에서 이에 대한 보완적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IV.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연구 동향 분석

1. 시기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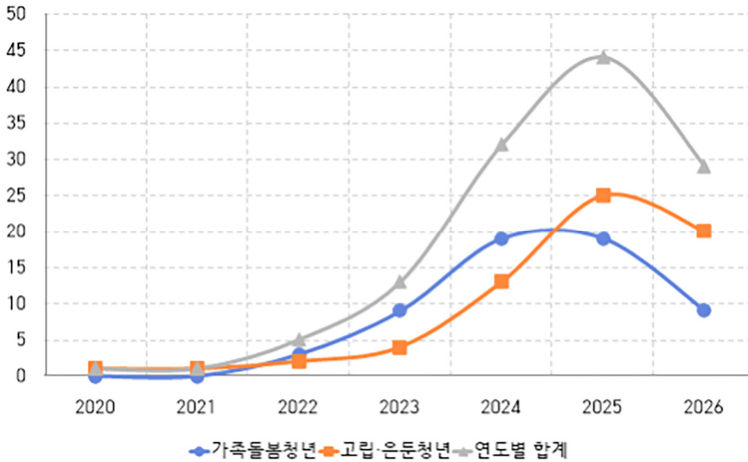
시기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1편, 2021년 1편, 2022년 5편, 2023년 13편, 2024년 32편, 2025년 44편으로 매년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2026년은 29편뿐이지만, 현재 조사 시점(2026년 6월)까지만 게재된 연구를 반영했기 때문에 감소 추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전체 125편 중 2025년의 44편이 35.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발표된 연구는 총 118편(94.4%)으로 신취약계층에 관한 연구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을 나눠서 보면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202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4년(19편), 2025년(19편)으로 지금까지 나온 가족돌봄청년 관련 연구의 64.4%를 차지하고 있다. 2026년에는 6월 기준으로 9편이 발간되었으며 2026년에도 최근 증가추세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연구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청년 연구가 늘어난 배경에는 가족돌봄청년 문제에 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이 겪는 돌봄 공백 문제를 인식하게 된 점,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가 지원 사업을 강화하며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다루게 된 점이 있다.

고립·은둔청년 연구는 2020년부터 가족돌봄청년 연구보다 먼저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4년 13편, 2025년 25편으로 늘어났다. 2024년과 2025년의 연구 발간 수를 합치면 총 38편으로 지금까지 생산된 고립·은둔청년 연구 66편 중 57.6%에 달한다. 이처럼 최근 연구가 증가한 요인은 이들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비대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과 사회서비스 의제화가 되었다.

다만 두 집단에 관한 연구는 증가 양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고립·은둔청년 연구는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며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2023년부터 짧은 기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 그럼에도 두 분야 모두 최근 3년간 연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신취약계층 중 하나인 새로운 정책집단으로 정의되어 학술적 관심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시기별 연구 생산 추이

〈표 2〉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시기별 연구 생산 추이

연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연도별 합계
2020	0	1	1
2021	0	1	1
2022	3	2	5
2023	9	4	13
2024	19	13	32
2025	19	25	44
2026	9	20	29
합계	59	66	125

2. 연구 분야별 분석

연구 분야별로 생산된 논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회정책 분야에서 103편(8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모두 사회복지·사회정책 영역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는 두 집단이 가시화

된 계기도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배제 문제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회정책을 다룬 연구 분야라고 할지라도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은 주로 당사자가 아동, 청소년, 청년이기 때문에 청소년·교육, 가족·돌봄·여성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사회정책을 연구한 흐름이 있었다. 가족돌봄청년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발달과업의 지연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청소년학과 아동복지학에서 고립·은둔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2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돌봄 가족의 질환과 의료 접근성을 다룬 것이다. 즉 가족돌봄청년이 단지 복지 영역의 문제로만 인식되지 않으며 청소년·청년의 발달, 가족관계, 젠더, 건강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신취약계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고립·은둔청년 연구는 상담·심리·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복지·사회정책 분야 다음으로 12편(18.2%)의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사자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 과정에서 겪는 우울, 불안, 외로움,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상태와 심리적 문제를 다룬 측면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그 외 연구 분야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연구가 서비스 디자인, 도시·공공공간, 디지털 기술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사자의 고립·은둔 완화를 위해서 각 연구 분야별로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연구가 사회복지·사회정책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하여 축적되고 있으면서도 상담 심리학, 디자인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다학제적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분야별 분석을 통해 신취약계층 연구가 사회복지학·사회정책 중심이지만, 각 집단이 겪는 어려움과 양태의 차이에 따라 학문의 접근 분야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가족, 돌봄, 교육 영역에서 연구가 주로 생산되었고, 고립·은둔청년은 정신건강, 심리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추후 연구 공백의 지점에서 다루겠지만, 두 집단에 대해

상호 간 비어 있는 연구 분야이기에 새로운 연구를 시도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표 3〉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연구 분야별 연구 생산 추이

구분	가족돌봄 청년 빈도	가족돌봄 청년 비율 (%)	고립·은둔 청년 빈도	고립·은둔 청년 비율 (%)	전체 빈도	전체 비율 (%)
사회복지·사회정책	56	94.9	47	71.2	103	82.4
상담·심리·정신건강	1	1.7	12	18.2	13	10.4
디자인	0	0.0	4	6.1	4	3.2
기타	2	3.4	3	4.5	5	4.0
합계	59	100.0	66	100.0	125	100.0

3. 주제별 분석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면 경험, 정책, 실태, 생애과정의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정책·제도·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는 43편으로(34.4%)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태·유형·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26편으로 20.8%에 이르렀다. 이는 두 집단이 기존 복지제도에 포괄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유사한 법·제도 환경에서 법적 정의, 사례관리, 행정의 역할, 전달체계 개선 등 초기 정책 집행 및 법제화가 시도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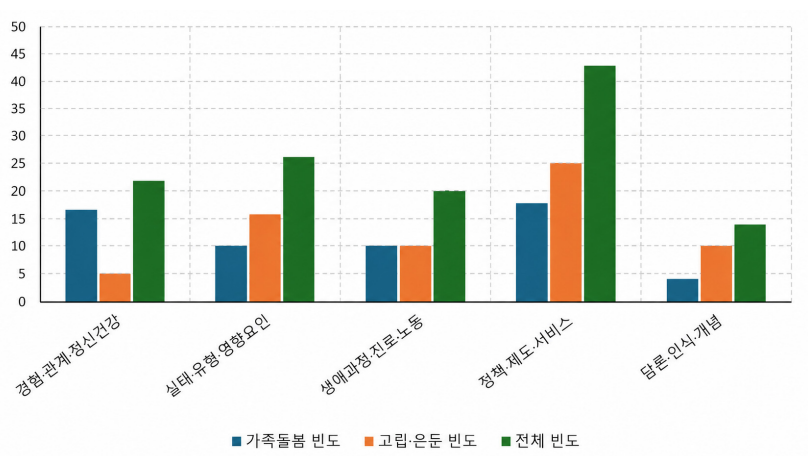
그러나 연구 주제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고립·은둔청년 연구에서는 실태·유형·영향요인 연구가 가족돌봄청년 연구에 비해 더 많이 수행되었다. 반대로 경험·관계·정신건강을 다룬 주제에서 가족돌봄청년 연구가 더 많았다. 아무래도 고립·은둔에 초점을 두어 당사자를 찾아내고,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면서 연구가 축적되는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연구는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경험과 관계의 측면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들의 경험에 조금 더 주목하여 가족과의 관계, 다양한 돌봄

속에서의 상황을 다루었기 때문에 고립·은둔청년 연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경험·관계와 함께 정신건강 주제를 포괄하면서 고립·은둔청년 연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족돌봄청년 집단의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청년 연구에서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제가 별도의 연구 주제로 파악 되었으나, 고립·은둔청년 연구는 정신건강을 다루더라도 실태·유형·영향요인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4〉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주제별 연구 생산 추이

구분	가족돌봄 청년 빈도	가족돌봄 청년 비율 (%)	고립·은둔 청년 빈도	고립·은둔 청년 비율 (%)	전체 빈도	전체 비율 (%)
경험·관계·정신건강	17	28.8	5	7.6	22	17.6
실태·유형·영향요인	10	16.9	16	24.2	26	20.8
생애과정·진로·노동	10	16.9	10	15.2	20	16.0
정책·제도·서비스	18	30.5	25	37.9	43	34.4
담론·인식·개념	4	6.8	10	15.2	14	11.2
합계	59	100.0	66	100.0	125	100.0



〈그림 2〉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주제별 연구 생산 추이

4. 연구 방법별 분석

연구 방법별 추이를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47편으로(37.6%)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질적연구 44편(35.2%)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와 비슷하게 질적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로는 두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아직 통계적 데이터를 충분히 생산해내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통계연구원(민경아·길유미, 2026)의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 신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가 생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추정 데이터나, 각 지자체별 실태조사 시도로 생성되는 일부 데이터 정도만이 있어서 질적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두 집단은 쉽게 포착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양적연구만큼이나 많은 수의 질적연구가 수행되고 있기도 하다.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연구에서는 당사자의 돌봄경험, 학업 및 진로 등 발달과업 수행 과정, 생애 과정을 파악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질적 접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는 최근 들어서 늘고 있다. 이는 가족돌봄청년 연구가 당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들의 돌봄 부담, 삶의 만족도와 같은 결과 요인을 포착할 만한 수치화된 데이터들이 생성되어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헌연구 또한 질적연구나 양적연구만큼 많이 생산되지는 못했지만 국내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 검토, 조례 분석, 법적 근거 마련의 측면에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혼합연구와 프로그램 평가 연구의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아직 양적 데이터가 미비한 측면과, 정부의 지원사업이 본격화된 기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법률 제정 이후 중앙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다면 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비롯한 장기 추적 연구와 실험 연구 또한 충분히 생산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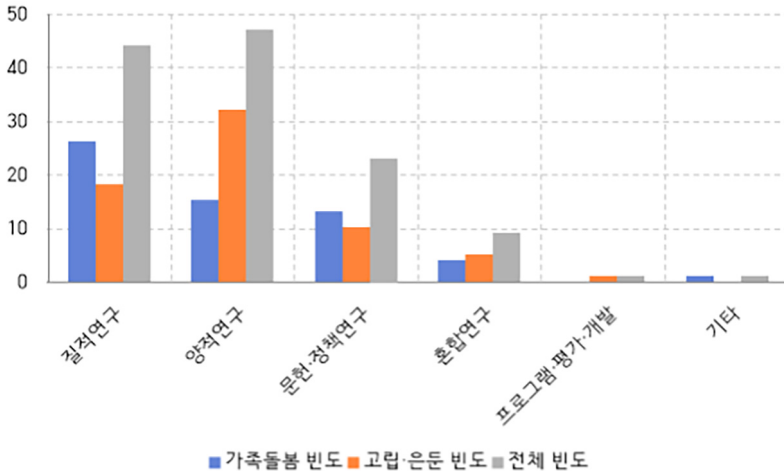
고립·은둔청년 연구는 가족돌봄청년 연구와는 반대로 양적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는 가족돌봄청년 연구에 비해 연구가 축적되는 과정이 조금 더

길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가족돌봄청년보다 먼저 제정되는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실태조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초기 연구는 가족돌봄청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은둔 경험과 사회적 고립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가 주로 사용되었다. 은둔 과정과 사회적 관계 단절, 가족관계의 변화, 회복 경험 등 삶의 내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심층면접과 사례연구가 주로 활용되었다. 이후 각 지자체별 실태조사가 빠르게 수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양적연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고립·은둔에 관한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디자인을 결합한 연구까지 발전하여 당사자들의 은둔·고립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까지 확대되는 실천적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표 5〉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연구 방법별 연구 생산 추이

구분	가족돌봄 청년 빈도	가족돌봄 청년 비율 (%)	고립·은둔 청년 빈도	고립·은둔 청년 비율 (%)	전체 빈도	전체 비율 (%)
질적연구	26	44.1	18	27.3	44	35.2
양적연구	15	25.4	32	48.5	47	37.6
문헌·정책연구	13	22.0	10	15.2	23	18.4
혼합연구	4	6.8	5	7.6	9	7.2
프로그램·평가·개발	0	0.0	1	1.5	1	0.8
기타	1	1.7	0	0.0	1	0.8
합계	59	100.0	66	100.0	125	100.0



〈그림 3〉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연구 방법별 연구 생산 추이

5. 연구 대상별 분석

연구 대상으로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당사자를 직접 분석한 연구가 82편(65.6%)이었다. 가족돌봄청년 연구에서는 청년 당사자 연구가 37편(62.7%)이다. 37편에는 가족돌봄청년과 가족돌봄청소년 및 아동, 장애 가정과 조손가정 등 특정 집단을 다룬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그 외는 정책·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11편(18.6%)이 있다.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9편(15.3%)이 있는데, 주로 지원사업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루면서 정책 담당자의 경험과 지원사업 운영 과정을 분석하며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고립·은둔청년 연구 또한 가족돌봄청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는 가족·부모 대상 연구가 3편(4.5%)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립·은둔청년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교류도 줄어들고 관계 변화가 일어났기에 이를 포착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부모의 부담과 돌봄 스트레스, 부모의 임파워먼트나 가족 회복 등을 분석하는

연구로 확대된 것이다. 결국 고립·은둔청년 연구에서도 당사자 개인만의 영역이 아니라, 가족 전체와의 관계성 회복이 함께 다루어지기에 연구 대상이 가족과 부모에게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정책과 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도 15편(22.7%)이 있다. 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미래센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원 프로그램 등을 분석한 연구로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살펴며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구 대상별 연구 추이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 대상 확장 방향을 짚어볼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 연구에서는 돌봄 대상인 가족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돌봄을 받는 가족원의 입장에서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당사자가 학업과 진로의 측면에서 발달과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 학교 및 지역사회 관계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연구로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고립·은둔청년 연구 또한 당사자의 경험을 다룬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조금 더 다양화하여 당사자의 가족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 적지만 아르바이트 활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기에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고용주와 또래 및 지역 주민 등 당사자 주변의 관계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석 연구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표 6〉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연구 대상별 연구 생산 추이

구분	가족돌봄 청년 빈도	가족돌봄 청년 비율 (%)	고립·은둔 청년 빈도	고립·은둔 청년 비율 (%)	전체 빈도	전체 비율 (%)
당사자	37	62.7	45	68.2	82	65.6
정책·제도·자료	11	18.6	15	22.7	26	20.8
가족·보호자	2	3.4	3	4.5	5	4.0
전문가·실무자	9	15.3	3	4.5	12	9.6
합계	59	100.0	66	100.0	125	100.0

6. 정책 대안별 분석

가족돌봄청년 연구에서의 주된 정책 대안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과 심리 정서적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과 같은 발달과업 지원을 막기 위한 방안,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강화 및 가족단위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특성과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 인식개선 강화 및 조기 발굴, 법제화 및 데이터 구축, 궁극적으로 통합지원 체계의 흐름으로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이들 스스로도 자신이 돌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집단에 대한 인식의 확산 정도가 사회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신청주의적 접근만으로는 이들의 규모를 충분하고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나 지역사회,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조기발굴 및 통합사례관리가 주된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및 생계 활동이라는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경제 영역의 정책 제언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사회서비스 방식을 통해 가사, 간병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돌봄 활동과 생계 활동의 부담을 낮추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가족돌봄청년은 또래와 달리, 가족돌봄에 매몰되어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없고,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미래 불안을 더 크게 느끼거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울, 외로움, 번아웃 등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조모임, 동료 지원, 가족 상담, 다양한 형태의 심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차원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이 겪는 발달과업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학습지원, 교육비 지원, 돌봄 병행이 가능한 교육 과정 마련, 취업 지원, 돌봄경력 인정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이 뒤늦게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고 정책 집단화된 이들에게

필요하기에 별도 법률 제정, 조례 정비, 지원 연령 및 대상 기준 유연화, 전담 기관 설립 및 복지전달 체계 강화 등이 강조되었다.

고립·은둔청년 연구에서는 조기발굴 체계 수립, 장기 사례관리, 정신건강 지원, 사회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다.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정신건강 회복에 관하여 상담, 가족 상담, 의료적 개입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는 고립·은둔청년의 문제를 개인화하고 병리화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시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미래센터의 역할 강화도 주된 정책 제언으로 제시된다.

더불어 최근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사회참여를 추동하는 정책 제언도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정 관리와 사회참여 기술 습득,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회 참여 시도, 온라인 자조모임, 디지털 상담 등 대면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은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제안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 경험 프로그램, 단계적 취업 지원, 진로 상담, 사회적 역할 회복 프로그램 등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제언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고립·은둔청년 연구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정신건강 중심에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로 사회적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V. 결론

1. 종합적 논의: 두 집단 연구 동향의 공통점 및 차이점

지금까지 신취약계층에 속하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연구 동향 총 125편에 관한 분석을 시도했다. 기존 연구는 두 집단의 취약성

을 드러내고, 경험을 개념화하며, 정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첫째, 두 집단에 관한 연구는 모두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다. 연구의 대부분이 2023년 이후에 생산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의 연구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두 집단이 개인적 차원에서 감내하고 있던 문제가 공적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독립적 대상 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공통점으로는 사회복지·사회정책 분야에서 학문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돌봄 공백,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와 이들에게 닿지 않는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등을 다루면서 개인의 심리나 가족 내 갈등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에서는 양적연구만큼 질적연구가 상당수 있었다. 아무래도 통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정책 대상으로의 가시화가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초기 연구에서 중요했으며, 이를 질적연구를 통해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갈수록 통계적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를 활용한 양적연구가 늘고 있지만, 종단 연구와 같이 장기적 추적 데이터가 필요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두 집단에 관한 연구는 경험·관계·실태·정책·제도를 중심으로 공통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다. 당사자의 삶을 이해하고 조명하는 연구와 이를 정책화 및 법제화하려는 연구가 동시에 축적되고 있다. 다만, 가족돌봄 청년 연구는 돌봄, 발달과업, 사회인식에 상대적으로 더 주목했고 고립·은둔 청년 연구는 유형화, 위험예측 및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통한 고립·은둔 완화에 초점을 두면서 연구가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에서 제시한 두 집단의 비교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즉 두 집단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최근의 정책대상화라는 공통된 경로를 보이면서도 취약성이 형성되는 관계적 기제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과의 관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 내 돌봄책임에 과도하게 결속되어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 반면 고립·은둔청년은 가족·또래·학교·직장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정서적·도구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즉 전자가 관계의 과잉에 따른 자원 제약이라면 후자는 관계의 결핍에 따른 자원 접근의 제약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두 경로 모두 학업·진로·취업·자립과 같은 청년기 발달과업의 지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단순히 관계망의 '많고 적음'으로 이해하기보다 관계의 구조와 그 관계를 통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성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취약계층 연구는 개별 집단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정책대상으로 가시화되는 공통된 구조와 집단별 취약성의 발생 기제를 동시에 비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개인의 어려움과 취약성에 주목하여 설명하는 방식에서 관계적이고 구조적 문제, 회복을 위한 시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돌봄의 사회화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돌봄 책임을 가족과 청년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짚어냈고, 고립·은둔청년 연구는 관계 단절과 사회적 배제가 누적된 결과로 고립·은둔-회복 또는 고독사로 이어지는 연속적 경로를 보여주었다. 이는 신취약계층의 취약성이 고정된 개인적 속성이 아니라 가족·제도·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신취약계층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잠재된 취약성의 발견과 개념정립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내부의 돌봄과 개인의 고립·은둔생활처럼 가시화되지 않던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독립된 정책 대상 및 연구 대상으로 규정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당사자 경험과 위험 요인 탐색 단계이다. 질적연구를 통해 당사자들의 삶과 경험을 포착하고, 양적연구로 이들의 정신건강, 관계적 어려움, 생애단계에서의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단계다. 세 번째는 정책화 및 지원체계 구축 단계이다. 실태조사, 법·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당사자를 찾아내어 사례관리 및 전담기관 설립과 통합지원체계를 제안하는 단계다. 네 번째는 회복 및 사회통합 단계다. 당사자의 임파워먼트, 관계 회복, 사회적 역할의 재정립,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정책 제언에 집중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신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집단에 관한 정책은 집단별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기발굴, 관계 기반 지원, 장기 사례관리, 당사자 참여, 생애과정별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공통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각 집단을 분리된 정책대상으로만 다루면서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가족중심의 책임 과중, 관계적 단절, 제도적 배제라는 공통된 취약성의 생성구조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대응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수립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두 집단에 관한 연구에서의 연구 공백을 살펴보면 다음의 측면이 향후 연구과제로 도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두 연구 동향은 질적연구, 횡단적 양적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종단연구, 실험연구를 비롯한 서비스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는 지원 사업이 최근 들어 시작했고, 통계적 데이터도 생산되고 있기에 추후 연구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 연구를 통해 또 다른 연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연령 아동, 농어촌,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맥락과 가족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돌봄청년이나 고립·은둔청년 사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여 향후 연구 과정에서 연령, 돌봄 기준, 고립·은둔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비교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준화된 개념과 측정 도구 마련으로 종단연구와 정책·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시도한다면 신취약계층의 장기적 영향, 지원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신취약계층 개념에서 세 가지 이론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신취약계층의 '새로움'은 위험 자체의 발생 시점만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취약성은 이전부터 존재하였더라도 기존 복지제도가 이를 독립적인 욕구와

위험으로 포착하지 못하다가 최근 사회적 인식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신취약계층은 '새롭게 발생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기존에 존재하였지만 새롭게 가시화·정책대상화된 집단'을 포괄하되 그 형성경로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취약계층의 취약성은 전통적인 소득빈곤이나 인구학적 속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관계적·제도적 차원의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족돌봄청년의 과잉연결과 고립·은둔청년의 관계 단절은 서로 반대되는 관계적 조건이지만, 모두 청년이 학업·고용·자립에 필요한 시간과 정보,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달과업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신취약계층을 특정 인구집단의 목록으로 정의하기보다 사회적 위험이 관계와 제도를 매개로 개인의 생애과정에 누적되는 방식에 주목하여 개념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는 신취약계층을 신사회위험이나 복지 사각지대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보다 양자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정책대상화의 범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신사회위험이 변화하는 위험의 성격을 설명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기존 제도의 포착 실패를 설명한다면, 신취약계층은 이러한 위험과 제도적 배제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그 집단이 사회적으로 명명되어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신취약계층을 단순히 새로운 취약집단의 목록으로 확장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취약성이 어떠한 조건에서 가시화되고 정책적 범주로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정책제언: 사회자본의 역할 강화 필요

앞선 비교분석에서 확인한 것처럼 두 집단은 모두 관계적 취약성을 경험하지만, 필요한 사회자본의 성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돌봄책임을 분담하거나 돌봄·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업·진로의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적·정보적 관계자원이 중요할 수 있다. 반면

고립·은둔청년에게는 단절된 사회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관계적 사회자본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의 규모뿐 아니라 두 집단이 관계를 통해 어떠한 정보적·정서적·도구적 자원을 획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자본이 학업·고용·자립 등 발달과업 수행에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 강화 정책 역시 동일한 형태의 관계망 확대가 아니라 집단별 취약성의 발생경로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동향에서는 두 집단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지만 이들에게 사회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해 보인다. 두 집단을 비롯한 신취약계층에서는 사회자본의 부족이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가족돌봄청년은 돌봄과 경제활동의 병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의 부재는 새로운 욕구 도출을 어렵게 만들고 미래를 계획하거나 상상할 수 없게 된다. 꿈 및 목표 실현 방법이나 정보 접근에 대한 고충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며, 발달과업 지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취약계층 청년에게 사회자본의 부재는 향후 삶의 질 개선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지만, 당사자들은 어떤 지원 정책이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인지 알기 어렵고, 복잡한 신청 과정으로 인해 제도적 접근성이 낮은 문제도 사회자본의 부재와 연관되어 있다. 당사자들이 복지정책을 접하는 경로는 주로 학교 선생님, 주변 공무원 지인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허준기 외, 2024; 허준기·정지연, 2025).

경제적 자본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의 격차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Bourdieu, 1986). 사회자본은 사회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발생하고, 경제자본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 관심, 시간이 필요하다(류태진, 2015). 한국 사회에서는 학력과 학벌에 따른 불평등,

서울-비서울 등 지역 격차에 따른 불평등, 출신 배경에 따른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자본의 차이가 소득격차에 영향을 주면서 연쇄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자본과 연계하여 최근에는 ‘꿈-자본’이라는 개념도 논의되고 있다(한인정·이지수·서정희, 2023). 꿈-자본은 상상력, 낙관, 희망, 회복탄력성으로 구성되어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형태에서 실체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씨앗의 역할을 한다(김석호·정우연·조하영·김지윤·김두환, 2019). 계급별 청소년들의 꿈의 차이는 부모와 친구 등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달라진다(김수정·차영화·최섯별, 2020; 정우연·조하영·김석호, 2022). 상층계급 청소년은 주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폭넓은 꿈을 꾸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자신감을 갖춘다. 중층계급은 안정적이고 성취 가능한 꿈을 선택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하층계급의 경우, 익숙한 직업을 언급하거나, 꿈의 부재 및 상실에 놓이기도 한다(김수정 외, 2020). 이처럼 사회자본이 적은 집단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주변 자원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신영, 2006). 지역사회 단위에서 불평등과 복지체감도 또한 사회자본과의 영향 속에 복지자원 활용에서의 불균등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 2008; 강성익·구자훈, 2020).

따라서 현재 신취약계층에게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전달과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강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복지자원에 대한 접근이 사회자본의 영향을 받는다면,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의 격차만큼 위기 대응 및 미래 설계를 위한 삶의 변화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와 세대를 걸친 불평등 지속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류태진, 2015), 공공부문에서의 개입을 통해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집합적 대응과 해결능력으로서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대안자원을 중심으로 적응 전략을 만드는 점에서 유용하며(박세경 외, 2008),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Light, 2004). 따라서 위기 대응 시

정보 습득의 경로, 사회자본 활용 실태와 현황 파악, 미래 계획 설계 시 활용하는 사회자본 파악 등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연구의 한계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학술논문으로 분석범위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학위논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 또 다른 연구성과와 정책적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분야는 정책 주도로 형성된 연구영역이라는 점에서 연구보고서가 중요한 지식생산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던 연구 동향을 포함한 분석을 통해 학술논문과 정책연구의 주제 및 접근방식 차이를 비교하여 보다 정교하고 총체적인 연구 동향 파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집단을 표현하는 명칭이 달라서 다양한 검색어를 사용해 연구를 수집했음에도 누락될 수 있기에 두 집단에 관련한 모든 학술지 논문을 다 포괄했다고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신취약계층에 관한 연구 동향에서 앞서 7개 집단을 제시하였으나, 그 중 2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5개 집단에 대한 연구도 시도하여 한국의 전체 신취약계층에 관한 연구 조류를 파악하는 보완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접수
2026년 8월 27일 수정 완료
2026년 8월 3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강성익·구자훈. 2020. “지역 불평등과 사회적 자본의 분포특성 및 상관관계 분석 -서울시 권역생활권 및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1(4): 223-238.
- 곽미선·박지영. 2024. “사회적 고립 및 은둔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청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31(8): 195-218.
- 구창민. 2025.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안전취약계층 연구동향 분석.” 『한국 재난정보학회 논문집』21(1): 228-240.
- 김강민·김수영. 202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 『창의정보문화연구』12(1): 21-35.
- 김도희. 202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4(4): 197-223.
- 김석호·정우연·조하영·김지윤·김두환. 2019. “한국인의 꿈 자본과 가족관계의 질: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31(2): 1-57.
- 김수정·차영화·최선헌. 2020. “불평등한 미래: 청소년의 ‘꿈’, 지위표식이 되다.” 『한국사회학』54(1): 101-138.
- 김신영. 2006.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결정요인연구.” 『노인복지연구』37: 99-117.
- 김용갑·정한별·박지원·문성호. 2025.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국내의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32(10): 451-471.
- 김을수·조소연. 202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국내 자립준비 청년 연구 동향.” 『청소년복지연구』26(4): 141-164.
- 김주현. 2024.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돌봄 상황.” 『한국의 사회 동향』12-13. 국가통계연구원.
- 김태완·이주미·김기태·김문길·임완섭·조성은·함영진·정세정·김경휘·성은미. 2022.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태건. 2015.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효과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민경아·길유미. 2026. 『법·제도상 취약계층의 통계적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국가데이 터연구원.
- 박병금. 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관련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30(8): 59-80.
- 박병금. 2026.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연구동향분석.” 『청소년학연구』33(3):
245-273.
- 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 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
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정민·송현구·라수현. 2025.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책의 의의와 한계:
청년정책 기 본계획과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26(2):
147-183.
- 방미현·이영민. 2020. “플랫폼노동 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430-440.
- 윤수진·송인실·정화정·백우인. 2026. “고립·은둔청년의 고립과 회복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자기자비의 해석적 관점에서.” 『다문화와 교육』
11(1): 231-258.
- 이상희·이윤주. 2024. “은둔 청소년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청소년의 은둔
예방을 중심으 로.” 『청소년학연구』31(8): 219-249.
- 이효영. 2019. “국내 취약계층 평생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21』
10(1): 645-658.
- 정소영·조정민. 2025. “고독사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주제범위 문헌고찰.”
『한국생활환 경학회지』32(3): 371-378.
- 정우연·조하영·김석호. 2022. “무엇이 청년의 꿈을 가르는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역량에 따른 꿈의 내용 차이.” 『조사연구』
23(1): 107-130.
- 최보람·이재림. 2024.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가족정책연 구』4(2): 27-51.

-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 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격차해소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Ⅲ) : 신취약 계층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 한인정·이지수·서정희. 2023. “청년의 꿈-자본 구성과 확장의 서사: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30(4): 103-142.
- 허준기·김윤영·박재형. 2024.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과 지원 경험 연구』. 광 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 허준기·정지연. 2025.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실태조사』. 광주광역시사회서비 스원.

- Aldridge, J. and S. Becker. 1993. *Children Who Care: Inside the World of Young Carers*, Loughborough: Loughborough University.
- Becker, F. and S. Becker. 2008. *Young Adult Carers in the UK: Experiences, Needs and Services for Carers Aged 16-24*. London: The Princess Royal Trust for Carers.
- Bonoli, G. 2005. “The politics of the new social policies: Providing coverage against new social risks in mature welfare states.” *Policy & Politics* 33(3): 431- 449.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 G. Richardson. New York: Greenwood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ight, I. 2004. “Social capital’s unique accessibility.”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2): 145-151.
- Nonaka, S., T. Takeda. and M. Sakai. 2022. Who are hikikomori?

Demographic and clinical features of hikikomori(prolonged social withdrawal): A systematic review.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56(12): 1542-1554.

Orloff, A. S.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03-328.

Taylor-Gooby, P. 2004. "New Risks and Social Change" pp. 1-28 In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edited by P. Taylor-Gooby, 1-2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분석대상 논문 목록

1. 가족돌봄청년 관련 연구(59편)

- 강시운·최은희. 2024.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충북지역 전문가FGI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51(3): 33-65.
- 강희주·정익중·이진혁. 2024. “장애인 가구 영케어러(young carer)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돌봄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5): 249-278.
- 고준호·김성규. 2025. “초고령사회와 영케어러 문제에 대한 문학적 고찰: 『로스트 케어』와 『52헤르츠 고래들』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동서 비교문학저널』 74: 77-99.
- 구슬이. 2025.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사회복지정책』 52(3): 103-138.
- 권나현·김동이·박해인·이경민·이지민·염원경·백형의. 2026.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 경험: 나로 돌아가는 길.” 『Crisisonomy』 22(2): 79-100.
- 권지성·좌현숙·최서경. 2023.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대리가정위탁 보호아동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의 전환.” 『한국가족복지학』 70(2): 5-42.
- 권진숙. 2026.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의 돌봄 불평등: 공공 복지 돌봄의 재구성.” 『신학과 실천』 98: 193-223.
- 기은하·윤명숙. 2025.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14(2): 157-181.
- 김동현·강현지. 2026.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과 우울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7(1): 275-297.
- 김민정·김현주. 2023. “영케어러의 가족돌봄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31(4): 375-405.
- 김보경·최유석. 2024. “가족돌봄청소년의 돌봄경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7): 1-37.
- 김서영·이재림. 2023.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과 가족체계 역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1): 3-32.
- 김서현·이나운. 2024. “조손가정 돌봄 대상자에서 제공자로 다해낸 숙명: 두 조부모를 인생 끝날까지 책임진 가족돌봄청년의 생애사.” 『한국사회복지학』 76(3): 89-122.
- 김성희·남석인. 2025.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식적 사회적 지지의 작동과 제약: 다중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4(4): 195-238.
- 김송이. 2025. “영 케어러 지원 법제화와 정책 쟁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72(2): 277-306.
- 김아래미·정소연·서홍란. 2025. “가족특성이 가족돌봄청소년의 돌봄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72(3): 181-209.
- 김아롱·정익중. 2023. “영 케어러의 가족 돌봄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70(1): 77-105.
- 김연정. 2025. “영케어러의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리양육가정의 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4(1): 223-260.
- 김연정·김혜미·이충권. 2025. “돌봄의 틀에 갇힌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관한 탐색: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28: 103-142.
- 김윤나·서보람. 2024. “충청남도 조손가정 현황 및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10(2): 1-20.
- 김은지·황보람. 2022. “지적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 청소년의 성장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7: 239-272.
- 김재윤·김주은·진미정. 2024. “가족돌봄청년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 돌봄 부담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9(3): 3-22.
- 김정현·박선영. 2023. “영 케어러 대응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영국, 호주, 스웨덴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0(1): 251-280.

- 김지선·주영선. 2025. “우리나라 가족돌봄청년은 누구인가?: 행정데이터, 한국의료패널,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72(2): 251-276.
- 김지현·조운호·김미정. 2026. “영케어러의 돌봄 부담과 삶의 만족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42(1): 1-28.
- 김지혜·서보람. 2024. “조손가정 청소년의 진로 준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6(1): 25-49.
- 김진희. 2024.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비교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8(2): 151-175.
- 김혜영·김남옥·장안식·석승혜. 2025. “한국의 영 케어러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가별 유형화 연구: 영국, 스웨덴, 호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8(1): 37-94.
- 노혜진. 2023.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현황 분석.”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20(3): 75-105.
- 노혜진. 2024. “가족돌봄청년 일상의 재구성고 정서적 경험.” 『보건사회연구』 44(2): 336-359.
- 노혜진. 2025. “니트상태 가족돌봄청년의 생애사: 일, 학업, 돌봄의 위태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한국사회복지학』 77(2): 7-35.
- 노혜진·박나리. 2023.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실태 및 심리정서 상태의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70(4): 181-213.
- 박시균·이지혜·김수연. 2025. “장애 가구 가족돌봄청년의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72(3): 145-180.
- 박지영·김병철. 2023. “영국의 영케어러 지원정책 및 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 영케어러 정책예의 시사점 탐색.” 『인문사회21』 14(3): 2115-2130.
- 서혜지·김교성. 2024. “가족돌봄청년(Young Adult Carer)은 누구인가?: 개념 정의와 규모 및 실태.” 『사회보장연구』 40(4): 81-113.
- 서홍란·김아래미·정소연. 2025.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에 대한

- 현장전문가의 경험과 인식.” 『한국사회복지교육』 69: 139-168.
- 선미정. 2024.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 탐색: 델파이 및 IPA 기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21(3): 57-87.
- 선미정. 2025. “아동권리 관점에서 고찰한 돌봄아동의 가족돌봄경험.” 『한국 사회복지학』 77(3): 157-177.
- 선미정. 2026. “논리모델 기반 가족돌봄청년 집단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성과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69(1): 99-120.
- 선미정·장정은·김진영. 2022.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3(3): 33-67.
- 신인순. 2024.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구.” 『사회과학리뷰』 9(2): 399-415.
- 양현·신지원·이무원·박혜연·배수영. 2025.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와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보건사회연구』 45(2): 543-557.
- 와제이컨산·전진우·윤경덕·정규형. 2026.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와 주거환경 만족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34(2): 413-437.
- 유정원·선미정. 2024. “가족돌봄청(소)년의 욕구와 지원전략: 경기도 청(소)년을 사례로.” 『청소년학연구』 31(4): 389-413.
- 이가은·곽서연·김유진·조서영·최현영·노충래. 2024.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가족돌봄청년 관련 동영상 댓글 분석.”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21(2): 45-74.
- 이슬기·박광옥. 2024. “가족돌봄청년이 인식하는 돌봄에 관한 연구: Q방법론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76(4): 91-114.
- 이시은·이은아. 2024. “청년기 ‘생애과업’과 가족돌봄의 경험: 가족돌봄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6(2): 40-72.
- 이의빈·김진원. 2024. “장애부모를 돌보는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돌봄부담과 우울 간 관계: 부모의 장애로 인한 삶의 부정적 변화 인식의

-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29(3): 527-546.
- 이정민·정경아. 2024. “가족돌봄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31(5): 157-179.
- 이충권·김혜미·이재원. 2025. “인천 가족돌봄청년 지원 방안 탐구: 전문가 초점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43: 259-301.
- 임소진·김준범·이재은. 2026. “강제된 돌봄을 넘어 회복으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돌봄 경험 과정과 유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1): 283-319.
- 장안서. 202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장애인 가족 돌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42(1): 311-333.
- 정소연·서홍란·홍순혜. 2023. “영케어러의 돌봄활동과 그 영향: KBS 1TV <동행> 출연 가족 사례 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61: 151-182.
- 조명아·김주현. 2025. “가족 관계와 성역할 규범 속에서 재편되는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수행과 책임.” 『한국가족복지학』 72(2): 189-220.
- 조명아·김주현. 2025. “가족돌봄청년의 생애과업 수행 전략: 재편과 단념의 경계에서.” 『가족과 문화』 37(3): 291-332.
- 조원희·조운호·최영준. 2025. “영케어러의 발달과업 중요도·수행도 불일치와 영향요인.”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22(3): 209-243.
- 최유나·남석인. 2026.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재구성과 주체성 형성 과정: 가족 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비판사회정책』 91: 398-431.
- 최희경. 2024.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여성학연구』 34(1): 221-273.
- 하수정. 2022. “스웨덴의 영 케어러 연구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3: 35-49.

2. 고립·은둔청년 관련 연구(66편)

- 강라현·이근무. 2026.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문화기술지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10(1): 529-570.

- 강민희·전종설. 2026. “고립은둔 청년의 자살 및 자해생각 영향요인: Joiner의 대인관계이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6(2): 53-79.
- 강상준. 2026. “청년 세대의 물리적·정서적 고립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인문학연구』 18(1): 1-33.
- 강희주·강현아·안선경·양유진·이민지·정익중. 2025.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 은둔·고립 청년의 경험.” 『보건사회연구』 45(4): 91-115.
- 권혜림. 2025. “고립·은둔 청년의 자살 및 자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정보연구』 11(1): 27-46.
- 김민지·김현경. 2026.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의 어려움 유형화와 영향요인.” 『한국청소년연구』 37(2): 59-80.
- 김민지·한단비·김현경. 2026. “성인 초기 성취 좌절 경험이 청년의 고립·은둔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가족 친밀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3(4): 367-393.
- 김서현. 2023. “니트 청년의 고립과 연결의 뒤섞임 경험에 관한 질적 해석적 메타합성.” 『인문사회과학연구』 31(4): 51-90.
- 김솔아·김지수·성진루빈·정재희. 2024. “고립·은둔 청년의 정신건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안.”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30(3): 81-93.
- 김아래미·이해남·노혜진. 2025. “청년 사회적 고립의 유형화와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 52(1): 187-218.
- 김윤나. 2025. “고립·은둔청(소)년들의 일상생활 회복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모형탐구: NPO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주침과 얽힘에 관한 관계망 형성기.” 『미래사회』 16(2): 29-39.
- 김은숙·김지연. 2026. “고립·은둔 청년의 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안전문화연구』 51: 151-178.
- 김이준. 2025.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내러티브 접근의 진로상담 개입에 관한 탐색적 논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6): 97-118.
- 김정열. 2024. “기독교 메타버스를 활용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제언.” 『기독교교육정보』 81: 71-94.

- 김태연·김준혁·정재원. 2026. “국내 고립·은둔 청년 관련 연구에 대한 주제 범위 문헌고찰.” 『Crisisonomy』 22(1): 245-257.
- 김태연·김지선. 2025. “은둔형 외톨이의 집단상담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12(6): 469-487.
- 김평화. 2025. “지방정부 조례에 나타난 고립·은둔청소년 제도화 특성 분석.” 『예술과 인간』 8(2): 57-76.
- 김현옥·김소형·박해선. 2024. “청년의 고독생과 고독사: 언론보도와 학술연구에 관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중심.” 『비판사회정책』 85: 129-166.
- 나기희·권해수. 2024.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비대면 행동활성화 상담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4): 1591-1612.
- 노가빈·이소민·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노영희·강정아. 2024.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4): 49-71.
- 노혜진·김민정·김아래미·이해님·최윤희. 2025. “고립은둔 청년의 서비스 이용 과정.” 『한국지역사회복지학』 95: 99-129.
- 류비. 2025. “고립 청년의 지원사업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앤더슨 행동 모형의 적용.” 『Crisisonomy』 21(3): 191-204.
- 류주연·성기옥·김수진. 2023. “청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가?.” 『사회과학연구』 34(3): 47-71.
- 문성호·김수경·노지혜. 2025. “고립·은둔 위기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연구: 서울시 행복동행학교 유스톡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11(3): 99-127.
- 민기채. 202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에 관한 비교 연구.” 『GRI연구논총』 25(3): 1-22.
- 박규범·이영글·최윤희. 2025.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관계 및 지지체계 유형과 고립 및 은둔의 관계.”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57: 109-136.

- 박세훈·배서윤. 2024. “청년의 은둔기간, 지각된 사회적 불평등 및 불신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10): 354-362.
- 박은정·김현주. 2026.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23(1): 37-72.
- 박정민·송현구·라수현. 2025.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책의 의의와 한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6(2): 147-183.
- 박주홍·김남숙. 2025. “부산 청년이 말하는 고립은둔 회복방안: 지역기반 사회적 연결 체계.” 『사회융합연구』 9(5): 49-61.
- 박지선. 2020.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적질연구』 4(2): 19-45.
- 박진우·박성준. 2026. “청년의 사회적 참여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정신건강 차이 분석.” 『공공정책연구』 43(1): 463-490.
- 박향미·최유정·정재희. 2022. “1인 가구 청년 고독사 극복을 위한 사회 정서 능력 발달 기반 서비스디자인.”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8(4): 137-148.
- 박현비·최별·전보영. 2026. “기계학습 기반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측 및 취약요인 분석.” 『보건정보통계학회지』 51(2): 102-117.
- 서윤경·안선경·정익중. 2024. “은둔청년의 물리적 고립 완화를 위한 미션보상형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4(1): 27-44.
- 송도연·전성은·강영신. 2025. “‘아싸’라는 용어를 통해 살펴본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 유튜브 댓글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1(4): 715-749.
- 송현구·박정민. 2026. “은둔·고립 청년을 위한 시민교육에 관한 기초연구: 시민성 관점에 기반한 조건 탐색.” 『한국사회』 27(1): 47-91.
- 신상준. 2025.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와 지원 방안.” 『도시연구』 28: 63-102.

- 신수진·오현지. 2026. “한국 언론의 ‘은둔형외톨이 청년’ 보도에 대한 내용 분석: 원인-해결책 프레임과 공동언급집단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63(1): 119-155.
- 안선경·김소연·정익중. 2025.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화.” 『보건사회연구』 45(3): 383-408.
- 오유경·박희진. 2025. “은둔 청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은둔 초기와 중기 이후의 비교분석.” 『청소년문화포럼』 82: 133-170.
- 오지연. 2026. “고립·은둔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 돌봄에 관한 경험 연구.” 『에듀테인먼트연구』 8(2): 119-136.
- 유은·유예린·김민경·정서영·정집원. 2024. “사회적 고립청년의 은둔 극복과 사회관계망 구축을 위한 서비스 방향성 제안.”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7(2): 333-350.
- 유지희·양정빈·김자영. 2024. “청년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친구·이웃 접촉 빈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웰니스학회지』 19(3): 279-285.
- 윤수진·송인실·정화정·백우인. 2026. “고립·은둔청년의 고립과 회복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자기자비의 해석적 관점에서.” 『다문화와 교육』 11(1): 231-258.
- 이윤수. 2025. “고립은둔 경험 청년의 군 입대 후 집단생활 적응을 위한 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18(2): 51-74.
- 이윤희·김지연·곽미선. 2026. “상담자의 고립·은둔 청년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13(2): 559-584.
- 이정은. 2025. “고립·은둔 청년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3): 1105-1118.
- 이정은·조한아. 2024. “고립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9(4): 491-497.
- 이중섭·이동기. 2026. “은둔청년의 은둔 및 심리사회적 특성이 사회적 지지 체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은둔청년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40(2): 31-52.
- 이해남·노혜진·김아래미·신동인. 2026.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화와 개인적·사회적 인식 구조.” 『보건사회연구』 46(1): 101-122.
- 이혜일·나기희. 2025.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정신건강.” 『한국웰니스학회지』 20(2): 255-261.
- 장원빈·문의정. 2024. “청년의 은둔이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 및 친구·동료와의 소통 단절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2(4): 135-146.
- 정수남·소준철. 2026. “은둔생활 청년의 단절적 사회화와 은둔관행: 고립과 퇴행의 감정동학.” 『구술사연구』 17(1): 49-90.
- 제지수·박승민. 2025. “고립·은둔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지역 활성화 개선 제안: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 커뮤니티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8(1): 311-332.
- 조미형·고아라. 2022. “사회적 고립 청년은 누구인가?: 고립청년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4): 127-152.
- 조연주. 2025.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한 시기별(2010~2024) 언론 보도 변화 분석: 토픽 모델링(LDA)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30: 196-245.
- 조영아·이윤희·김지연·곽미선. 2024. “은둔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실태 분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2): 375-392.
- 차주환·이자영·백정원·편여울강·어혜원. 2024. “은둔청소년 판별을 위한 스크리닝 척도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32(2): 251-269.
- 최고은·한창근. 2025.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과거 및 현재 고립은둔 경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32(5): 405-433.
- 최선아·김태영·이서현·임가영. 2025. “청년의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건강 상태와 은둔의 관계 분석: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 『사회과학연구』 36(4): 49-73.
- 최성수·이영주·박소정. 2023. “청년1인가구의 인지된 고립감이 우울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8(4): 217-224.

최하영·오유라. 2025.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유형과 평등에 대한 인식.” 『청소년 문화포럼』 84: 319-343.

한상윤·신하영. 2026. “청년의 고립·은둔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고립의 발생에서 사회참여까지.” 『한국지역사회복지학』 97: 199-224.

홍창현. 2026.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장애와 디지털 환대: 몰트만의 생명신학과 호주 ‘Head to Health’ 모델의 신학적 대화.” 『기독교사회윤리』 64: 467-502.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n Newly Vulnerable Groups: Focusing on Young Carer and Socially Withdrawn Youth

JunGi Heo
Independent Researcher

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newly vulnerable groups, including young carers and socially withdrawn youth, has been growing in Korean society. However, academic discussion regarding the concept and scope of newly vulnerable groups remains insufficient. In particular, previous research trend analyses have largely been conducted in a fragmented manner,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groups, which has limited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the common tendencies and group-specific characteristics found across studies on different newly vulnerable groups. Accordingly, as a preliminary study aimed at advancing academic discussion on newly vulnerable groups, this study sought to compare and analyze domestic research trends concerning young carers and socially withdrawn youth. A total of 125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s accredited by, or candidates for accreditation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cluding 59 studies on young carers and 66 studies on socially withdrawn youth. The analysis focused on annual publication trends, research fields, research topics, research methods, research subjec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in order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bodies of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on both groups increased sharply after 2023, with growing academic interest as young carers and socially withdrawn youth emerged as major social policy issues. Second, although research was concentrated primarily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policy, studies on young carers expanded into the areas of family, care, and education, whereas studies on socially withdrawn youth extended into counseling psychology, mental health, and digital services. Third, quantitative research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while qualitative research was also conducted at a similarly high level.

Based on these findings, the development of research on the two groups could be organized into four broad trajectories: the visualization and conceptualization of previously hidden vulnerabilities; the exploration of lived experiences and risk factors; policy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s; and recovery and social integration. Ultimately, although the two groups differed in the pathways through which vulnerability emerged and in the research topics emphasized, they shared the experience of previously insufficiently covered problems within the existing welfare system becoming visible as distinct policy concerns.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contrasting relational risks—over-embeddedness in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and social disconnection—may both contribute to delays in the fulfillment of developmental tasks during youth.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proposes a preliminary analytical framework for discussing newly vulnerable groups as an independent academic category and systematically identifies both commonalities and specificities in research on newly vulnerable groups through a comparison of studies on young carers and socially withdrawn youth that have developed separately. It also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future comparative research that extends the scope of analysis to other newly vulnerable groups, including care leavers, platform workers, and digitally vulnerable populations.

Key Words: Newly Vulnerable Groups, Young Carer, Socially Withdrawn Youth, Research Trends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경험이 대학 진학 희망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체성을 이용한 도구변수 추정 분석

박 세 황* · 이 정 택**

요 약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과 시민사회의 핵심 구성원이 될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집단 괴롭힘과 같은 구조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험이 이들의 장기적인 교육 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집단 괴롭힘이 대학 진학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와 개인의 시간 불변 특성에 따른 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정체성을 도구변수로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 2단계 최소제곱법(fixed-effects 2SLS)을 적용하였다. 분석에는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 2기(MAPS 2기)의 2019~2024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총 2,270명의 다문화 청소년이다. 분석 결과, 집단 괴롭힘 피해는 다문화 청소년의 대학 진학 희망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 고정효과 2SLS 모형에서 추정된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도구변수를 적용하지 않은 패널모형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정에서 집단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이 과소추정되었거나, 도구변수에 반응하는 특정 하위집단에서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처치 효과의 이질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서로 다른 식별전략을 적용한 모형에서 집단 괴롭힘 피해가 대학 진학 희망을 낮추는 방향의 효과가 일관되게 확인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는 집단 괴롭힘의 영향이 단기적인 학교 적응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 청소년의 장기적인 교육 포부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학업 지원뿐 아니라 집단 괴롭힘과 차별의 예방, 사회적 소속감의 강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집단 괴롭힘, 대학 진학 희망, 국가정체성, 도구변수, MAPS 2

* 제1저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hwang9973@dgu.ac.kr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jungtaeklee@dongguk.edu

I. 서론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란 언어, 문화, 관습,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설동훈, 2025). 실제 체류 외국인인 2025년 약 280만 명을 넘어섰으며,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그 유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최근에는 단기 체류를 넘어 장기 체류와 결혼 이민의 증가 등 정착형 이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법무부, 2025). 정착형 이주가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한 다음 세대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로 2024년 다문화 가족은 약 37만 가구에 달하며, 다문화 출생아 비중도 5.6%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다문화 배경 학생 수는 약 20만 명을 넘어 전체 학생의 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교육부, 2025; 국가데이터처, 2025; 여성가족부, 2025). 특히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다문화 배경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청소년은 향후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성장할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이들은 신체적·정서적 급격한 변화와 자아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한편, 다문화 배경에서 오는 차별과 제도적 배제, 문화적 갈등과 같은 구조적 스트레스에 동시에 노출된다(Coll·Crnic·Lamberty·Wasik·Jenkins·Garcia·McAdoo, 1996; Erikson, 1968).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1.9%로 나타났고, 차별 경험은 2021년 2.1%에서 증가한 4.7%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 여성가족부, 2025).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경험 중 집단 괴롭힘에 주목한다. 집단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또래집단의 규범과 지위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집단과정이라는 특성을 지닌다(Salmivalli, 2010). 이러한 반복적 피해 경험은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과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학 진학과 같은 장기적인 교육적 포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집단 괴롭힘 피해가 교육적 포부의 악화로 이어지는 과정은 참여-동일시 모형(participation-identification model)과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핀(Finn, 1989)의 참여-동일시 모형에 따르면 학교활동에 대한 참여와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가치 인식은 상호 강화되며, 반복되는 부정적 학교 경험은 학교에 대한 동일시와 참여를 약화시켜 학교교육으로부터의 점진적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기대-가치이론에 따르면 교육을 비롯한 성취 관련 선택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성공 기대와 해당 선택의 가치 및 비용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형성된다(Wigfield·Eccles, 2000; Eccles·Wigfield,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피해는 학교와의 관계 및 참여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성공 가능성과 학교교육을 지속하는 데 따르는 가치 및 비용에 대한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대학 진학과 같은 장기적 교육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또래 피해 경험은 학교참여의 저하를 통해 이후의 대학 진학 포부 및 실제 대학 진학 가능성과 부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rew·Baysu·Turner, 2022), 잠재적 개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에서도 집단 괴롭힘 피해가 이후의 대학 진학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Sarzosa·Urzuá, 2021).

그러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교육적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통제해 왔음에도, 괴롭힘 피해와 진학 포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은 개인 특성과 환경 요인을 충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관련성이 집단 괴롭힘 피해의 영향인지, 아니면 누락변수에 의한 편향(omitted variable bias)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가정체성을 도구변수로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분석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때 도구변수로 활용되는 국가정체성과 집단 괴롭힘 피해의 관련성은 사회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반한 연구들은

학교 괴롭힘이 개인 간 행위에 그치지 않고, 또래집단의 내집단·외집단 구분과 집단 규범, 집단 내 위치에 따라 형성되는 집단 현상임을 보여준다(Ojala·Nesdale, 2004; Duffy·Nesdale, 2009). 따라서 국가적 또는 문화적 소속이 학교의 또래관계에서 집단 경계로 작동하는 경우, 국가정체성과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은 공통된 집단 간 관계의 맥락에서 서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집단 괴롭힘 피해와 유의하게 관련되었고(Choi·Kruis·Lee, 2022), 집단 괴롭힘 피해 상태로의 전환은 한국 사회에 대한 정서적 문화적응의 감소와 연결되었다(Kim·Fong, 2024).

본 연구는 국가정체성과 집단 괴롭힘 피해 간의 이론적, 경험적 관련성에 근거하여 국가정체성을 도구변수로 설정하고, 2단계 최소제곱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분석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첫째, 2단계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통제되기 어려웠던 내생성 문제를 분석에 반영하고, 집단 괴롭힘 피해가 대학 진학 희망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가 일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차별과 사회적 배제라는 구조적 조건에 노출된 다문화 청소년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집단 괴롭힘 경험과 대학 진학 희망 간의 관계를 이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셋째, 단기적인 학업 성과 지표가 아니라 대학 진학 희망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집단 괴롭힘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장기적 교육 경로 선택과 진로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 선행연구

1. 집단 괴롭힘 경험의 영향

집단 괴롭힘은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 행동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으로, 피해 학생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힘의 불균형을 수반

한다(Olweus, 1993).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갈등에 그치지 않고, 가해 행동에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방어하고 상황을 방관하는 또래들의 반응과 집단 규범 속에서 지속되는 집단적 현상이다(Salmivalli, 2010). 집단 괴롭힘 피해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뿐 아니라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단 괴롭힘 피해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교육적 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핀(Finn, 1989)의 참여-동일시 모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수업과 학교활동에 대한 참여는 긍정적인 성취 경험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가치 인식을 강화하고, 이러한 동일시는 다시 참여를 촉진한다. 그렇기에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피해는 학교를 안전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하여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또래관계와 학교 내 소속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경험은 긍정적인 성취 경험의 기회를 줄이고 학교교육의 의미를 약화시켜, 학교로부터의 정서적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학교와의 관계 약화가 대학 진학 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기대-가치이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기대-가치이론은 성취와 관련된 선택이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그 선택에 부여하는 가치 및 비용에 따라 형성된다고 본다(Wigfield·Eccles, 2000; Eccles·Wigfield, 2002).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피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생활과 학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낮추고, 학교교육을 지속하는 데 따르는 정서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참여와 소속감이 약화되면 대학 진학이 자신의 미래 목표에 갖는 가치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집단 괴롭힘 피해는 학교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교육에 대한 기대와 가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대학 진학과 같은 장기적인 교육적 포부를 낮출 수 있다.

집단 괴롭힘과 또래 피해의 교육적 결과를 다룬 실증연구는 주로 피해 경험과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나카모토·슈워츠(Nakamoto·Schwartz, 2010)는 33개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을 통해 또래 피해와 학업성취 사이에 작지만 유의한 부적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단자료를 활용한 유보넨·왕·에스피노사(Juvonen·Wang·Espinoza, 2011)의 다층모형 분석에서도 중학교 시기의 또래 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과 교사가 평가한 학업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 외(Grew et al., 2022)는 영국 청소년을 추적한 종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또래 피해 경험이 학교참여의 저하를 거쳐 이후의 대학 진학 포부와 실제 대학 진학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는 집단 괴롭힘과 또래 피해가 단기적인 학업성취를 넘어 학교참여와 장기적인 교육 경로에도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련성을 집단 괴롭힘 피해의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연구 설계와 분석모형에 따른 제약이 따른다. 괴롭힘 피해와 학업성취 및 교육적 포부는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개인의 성향, 또래관계 특성과 같은 관찰되지 않은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들 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괴롭힘 피해의 영향으로 추정된 결과에 기존의 개인·환경적 차이가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 학업 부적응이 괴롭힘 피해보다 앞서 나타나 또래 배제와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역인과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집단 괴롭힘 피해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누락 변수와 역인과로 인한 내생성을 완화할 수 있는 분석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부 연구는 내생성을 완화할 수 있는 분석전략을 적용하였다. 고먼·하먼·멘돌리아·스타네바·워커(Gorman·Harmon·Mendolia·Staneva·Walker, 2021)는 종단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성향점수매칭, 역확률가중 회귀조정 및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에릭센·닐센·시몬센(Eriksen·Nielsen·Simonsen, 2014)은 학급 내 취약가정 출신 또래의 비율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괴롭힘 피해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사르소사·우르수아(Sarzosa·Urzúa, 2021)는 개인의 잠재적 인지·비인지 역량이 괴롭힘 피해 가능성과 이후의 학업, 건강, 행동 결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잠재요인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관찰되지 않은 개인 간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집단 괴롭힘 피해의 내생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으나, 결과변수는 주로 학업성취, 실제

진학 여부 및 건강에 집중되어 대학 진학 희망과 같은 장기적인 교육적 포부를 직접 다루지 못하였다. 분석 대상 역시 주로 일반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어, 차별과 사회적 배제, 문화적응과 사회적 소속 등 다문화 청소년이 처한 특수한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대학 진학의 의의

대학 진학 희망 여부는 현재 학습 성취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학업 성적과 달리, 개인이 인식하는 기회 구조와 자기 전망을 포함하는 미래 지향적 의사결정 변수로 이해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대학 진학 및 졸업을 포함하는 교육적 성취가 사회적 상향 이동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능함을 제시하며(Rumbaut, 2005), 이민자 청소년의 학업적 포부가 이후 대학 진학 및 졸업과 연계되는 경향 역시 보고한다(Yeung, 2022). 또한 교육 기대와 희망은 실제 대학 진학에 선행하는 단계로서, 중등 시기의 대학 진학 기대가 이후 진학 여부와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remer·Huang·Vaughn·Maynard, 2019). 이는 대학 진학 희망 여부가 단순한 태도나 일시적 선호가 아니라, 청소년이 인식하는 구조적 기회와 장기적 경로 선택을 반영하는 지표임을 시사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험을 분석할 때 이러한 관점은 특히 중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은 이주 배경에 따른 언어 능력,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익숙함, 학교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의 차이로 인해 현재의 학업 성취도가 실제 역량이나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단기적 성취 지표만으로는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경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향후 기회에 대한 기대와 자기 전망, 그리고 이에 기반한 교육적 포부가 이후의 학업 참여와 성취, 나아가 진학 경로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차별이나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 또래 경험이 현재 성적의 변동으로만 드러나기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고 장기적

목표 설정과 경로 선택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게 만드는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보다 교육적 포부를 결과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 진학 희망 여부는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하는 구조적 기회와 장기적 경로 선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이러한 분석 목적에 부합한다.

3. 국가정체성과 집단 괴롭힘 경험 및 대학 진학과와의 관계

국가정체성은 자신이 특정 국가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주관적 감각과 이를 자아개념의 일부로 내면화한 정도를 의미하며,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와 구별된다(Huddy·Khatib, 2007). 다문화 청소년에게 국가정체성은 법적 국적이나 문화적응을 넘어, 자신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또래와 사회로부터 그 소속을 인정받는 경험과 관련된다. 이들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한국에 대한 국가정체성과 부모 출신국에 대한 정체성을 함께 가질 수 있지만, 배타적인 한국인 범주와 차별은 두 정체성의 양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Hornsey·Hogg, 2000; Kende·Baysu·Phalet·Fleischmann, 2021).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학교와 사회의 집단 경계 및 수용·배제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정체성과 집단 괴롭힘 피해는 관련될 수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과 타인을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한다(Tajfel·Turner, 2001). 자기범주화이론 역시 특정 상황에서 두드러진 집단범주가 구성원의 지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며, 개인이 자신과 타인을 집단의 전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된다고 본다(Turner·Hogg·Oakes·Reicher·Wetherell, 1987). 따라서 학교에서 국가적·문화적 배경이 의미 있는 집단 경계로 활성화되면,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을 한국인 집단에 어느 정도 소속된 것으로 인식하는지와 또래들이 그를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지는 또래관계 및 배제 경험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괴롭힘에 대한 또래의 태도는 개인적 성향뿐 아니라 집단의 괴롭힘 규범과 외집단에 대한 위협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jala·Nesdale, 2004). 이러한 집단 규범은 또래의 동조와 묵인을 통해 실제 집단 괴롭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또래의 괴롭힘과 집단적 거부 경험은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 사회로부터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국가적 동일시를 약화시키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집단적 거부와 차별을 다룬 거부-비동일시 모형 기반 연구들은 이러한 경험이 낮은 국가정체성 또는 높은 국가 비동일시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Verkuyten·Yildiz, 2007; Jasinskaja-Lahti·Liebkind·Solheim, 2009). 따라서 국가정체성과 집단 괴롭힘 피해의 관계는 자기범주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인정, 또래 규범과 반복적인 거부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상호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관련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과 집단 괴롭힘 피해를 직접 다룬 실증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수용사회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응, 국가적 소속 및 또래의 수용·배제 경험을 분석한 연구들은 두 변수의 관련성을 뒷받침한다. 최재용 외(Choi et al., 2022)는 한국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집단 괴롭힘 피해와 유의하게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김진호·퐁(Kim·Fong, 2024)은 집단 괴롭힘 피해 상태로의 진입이 한국 사회에 대한 정서적 문화적응의 감소와 관련됨을 확인하여, 피해 경험에서 수용사회에 대한 정서적 관계로 이어지는 역방향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수용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관계가 집단 괴롭힘 피해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국가정체성을 집단 괴롭힘 피해의 도구변수로 활용한다. 적절한 도구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이 다른 통제변수를 조건으로 집단 괴롭힘 피해와 유의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대학 진학 희망의 구조적 오차항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정체성이 집단 괴롭힘 피해 이외의 경로를 통해 대학 진학 희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배제제약이 충족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이론과 실증연구는 국가정체성과 집단 괴롭힘 피해 간의 관련성을 뒷받침한다. 두 변수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기범주화, 또래로부터의 집단 구성원 인정, 배제적 집단 규범 및 반복적인 거부 경험이라는

공통된 맥락에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괴롭힘 경험이 국가적 소속감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구변수의 관련성 조건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요구할 뿐 그 인과 방향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맥락적 관련성은 국가정체성을 집단 괴롭힘 피해의 도구변수로 설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도구 외생성과 배제제약은 국가정체성이 집단 괴롭힘 피해를 거치지 않고 대학 진학 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학 진학 희망을 결정하는 관측되지 않은 요인이나 구조적 오차항과도 무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가정은 직접 검정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먼저 국가정체성이 진학 희망에 미칠 수 있는 직접 경로를 이론 및 경험적으로 검토한다. 대학 진학 의사 결정에 관한 기존 모형은 진학 희망과 선택을 교육의 기대 비용과 편익, 학업 준비도와 성취,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 부모의 기대와 지원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설명해 왔으며, 국가정체성을 독립적인 결정 요인으로 포함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장윤선·양계민·이정민, 2024; Chhor·Sek·Norng·Hoeurn·Sam, 2024; Cozzolino·Smith·Crosnoe, 2018; Perna, 2006). 이는 국가정체성의 직접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정체성이 대학 진학 희망의 주된 독립적 결정 요인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중요한 점은, 국가정체성이 진학 희망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경로가 본 연구의 매개변수와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거주국에 대한 소속감은 대체로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또래의 수용과 배제를 통해 경험되며, 집단 괴롭힘은 그러한 사회적 배제가 구체화된 형태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이 진학 희망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은 집단 괴롭힘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외생성 위반이라기보다 본 연구가 상정한 인과 경로 그 자체에 해당한다. 여기에 종속변수가 한국 내 진학에 한정되지 않고 타국에서의 진학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는 점은, 거주국에 대한 애착이 진학 동기를 직접 끌어올리는 통로의 설명력을 한층 약화시킨다.

또한 한국의 교육제도를 고려한다면, 국가정체성과 대학 진학 희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도 제한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민족 또는 국가적 배경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학교 선택, 사립학교 진학, 교육정보 제공 등을 통해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학업 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거주지와 제도적 배정 기준이 학교 진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체성 기반 네트워크가 학교 선택이나 교육 기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이는 국가정체성이 대학 진학 희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그럼에도 국가정체성과 대학 진학 희망 사이에 집단 괴롭힘 피해를 거치지 않는 연관성이 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정서적 상태, 부모의 교육 기대와 희망직업 등의 요인은 국가정체성과 대학 진학 희망에 공통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국가정체성이 구조적 오차항과 상관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건성 분석에서 잠재적 교란변수를 추가로 통제하고, 이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추정계수의 방향 및 크기를 비교한다. 통제변수의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배제제약을 직접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추정 결과가 관측된 교란요인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관측되지 않은 교란에 대해서도 일정한 강건성을 가질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MAPS 2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회씩 총 6개년에 걸쳐 실시된 종단 조사이다. 자료 수집은

원칙적으로 전문 조사원에 의한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구축된 표본은 패널 조사 기간 중 입국한 중도입국가정을 포함하여 2,249가구의 청소년 2,271명과 학부모 2,249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료 중 주요 변수에 결측이 존재하는 관측치를 제외한 후 청소년 2,270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패널 구조로 재구성하여 총 11,815개의 관측치를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조사 기간 내 단 1개 연도만 관측된 170명의 개인(170개 관측치)은 개인 내 변화를 식별할 수 없어 패널 고정효과 및 무작위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총 11,645개이다.

2. 주요 변수

1) 대학 진학 희망 여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학 진학 희망 여부’는 MAPS 2기의 ‘희망교육수준’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교육 수준이 “대학교” 혹은 “대학원 이상”인 경우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고 간주하였다.

2) 집단 괴롭힘 경험 여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경험 여부’는 MAPS 2기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이해경·김혜원(2001)의 집단 괴롭힘 경험 중 피해경험의 문항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한 6개 문항((1)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2)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심한 집적거림이나 또는 놀림을 당했다, (3)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했다, (4)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을 당했다, (5)나에 대해 거짓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다, (6)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당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①한 번도 없었다”를 제외한 답변(②한 달에 1-2번 있었다, ③한 주에 1-2번 있었다, ④거의 매일 있었다)을 선택한 경우 ‘집단 괴롭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 국가정체성

본 연구의 도구변수인 ‘국가정체성’은 성한기(2001)의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를 토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한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4개의 문항(1)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2)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3)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4)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④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도구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복수의 문항을 단일 변수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리커트 척도 문항은 응답값을 합산하거나 평균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응답 범주 간 간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어려운 서열척도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에 각 문항의 응답을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이하와 ‘그런 편이다’ 이상으로 이분화한 후, ‘그런 편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문항의 수를 합산하여 국가정체성 변수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국가정체성 변수는 0에서 4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국가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4) 기타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비롯하여 대학 진학 희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지역규모’, ‘부모의 결혼 상태’, ‘가계소득’을 사용하였는데, ‘가계소득’은 분석 과정에서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대학 진학 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관련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가족 안정성, 부모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어머니 직업’, ‘아버지 직업’, ‘어머니 교육 수준’, ‘아버지 교육 수준’, ‘부모의 상위학교 진학 격려도’, ‘부모의 자녀 희망 교육 수준’을 사용하였다(장운선 외, 2024; Chhor et al., 2024; Cozzolino et al., 2018). 이때 부모의 직업과 교육 수준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부모의 상위학교 진학 격려도’와 ‘부모의 자녀 희망 교육 수준’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기대를 반영하며, 앞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포함한 ‘부모의 결혼 상태’와 ‘가계소득’은 가족 구조의 안정성과 경제적 여건을 함께 반영한다.

한편 아버지 직업 중 ‘군인’ 범주는 표본 내 관측치가 1명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범주로 유지할 경우 계수 추정의 불안정성과 표준오차 왜곡이 우려되므로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아버지 직업’과 ‘아버지 교육 수준’ 항목에 대해서 결측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실제 아버지의 부재 또는 정보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아버지의 부재 자체가 가정 환경과 대학 진학 기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아버지 직업’, ‘아버지 교육 수준’이 결측인 경우 하나의 독립 범주인 “정보 없음”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다만 정보 부재와 실제 부재는 차이가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을 위해 희망직업과 정서적 변수를 활용하였다. 희망직업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변수로는 6년의 조사 기간 동안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된 차별인식,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차별인식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문항과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을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는 문항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응답을 활용하였다. 정신건강은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

가족부, 2017)의 문항을 일부 수정한 3개 문항((1)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이가영(2006)의 문항을 인용한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제오(2010)에서 발췌한 3개 문항((1)나는 사는 게 즐겁다, (2)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3)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④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 연구모형

도구변수를 사용한 추정에 앞서 집단 괴롭힘 경험이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구조적 모형(structural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Y_{it} = X'_{it}\alpha_0 + \beta_1 GB_{it} + \epsilon_{1it} \quad \text{식 (1)}$$

Y_{it} 는 t 년 응답자 i 의 대학 진학 희망 여부이며, GB_{it} 는 t 년 응답자 i 의 괴롭힘 경험 여부이다. X'_{it} 는 t 년 응답자 i 의 통제변수이고, ϵ_{1it} 는 t 년 응답자 i 와 관련된 오차항으로 측정되지 않은 누락변수를 포함한다.

식 1을 이용한 추정에서는 괴롭힘 경험과 상관된 관측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이 대학 진학 희망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누락변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관측 불가능한 개인 특성을 통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괴롭힘 경험과 대학 진학 희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내생성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 또한 대학 진학 희망이 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 역시 내생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고정효과와 도구변수를 결합한 2단계 최소제곱법을 활용하여 괴롭힘 경험의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시간 고정효과는 분석 자료에서 조사 시점의 변화가 연령의 증가와 사실상 일치하므로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령 변수만으로 발달단계에 따른 이질성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정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GB_{it} = X'_{it}\alpha_2 + \beta_2 Z_{it} + \epsilon_{2it} \quad \text{식 (2)}$$

2단계 최소제곱 추정을 위해 1단계 회귀모형(first-stag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도구변수인 국가정체성이 관심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추정한 식은 식 2와 같으며 Z_{it} 는 t 년 응답자 i 의 국가정체성이다.

$$Y_{it} = X'_{it}\alpha_3 + \beta_3 Z_{it} + \epsilon_{3it} \quad \text{식 (3)}$$

식 3은 축약형 모형(reduced form model)으로 도구변수인 국가정체성이 종속변수인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Y_{it} = X'_{it}\alpha_4 + \beta_4 \widehat{GB}_{it} + \epsilon_{4it} \quad \text{식 (4)}$$

식 4는 2단계 회귀모형(second-stage regression model)으로 $\widehat{GB}_{it}$ 는 1단계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집단 괴롭힘 경험이다. 이때 β_4 는 2단계 최소제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집단 괴롭힘 경험이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다. 만약 도구변수가 관련성 조건과 외생성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도구변수 추정치인 β_4 는 $\text{Cov}(Y_{it}, Z_{it})/\text{Cov}(GB_{it}, Z_{it})$ 의 표본 유사치가 된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tata 17의 xtreg, xtivreg 및 기타 명령어를 통해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표 1은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한다. 전체 관측치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97%로, 표본에 포함된 다수의 다문화 청소년이 고등교육 진학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99%로 나타나, 대다수는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일정 비율의 청소년이 여전히 학교 내 부정적 관계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의 경우 ‘그런 편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수가 1개인 비율이 15.97%, 2개인 비율이 10.73%, 3개인 비율이 17.91%, 4개 모두인 비율이 42.51%로 나타난다. 성별 분포는 남성 51.36%, 여성 48.64%로 비교적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 소득수준은 로그 변환 이전의 값으로 평균은 약 333만 원, 표준편차는 약 147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주요 변수 기술통계

범주형 변수		
변수명	빈도	백분율 (%)
대학 진학 희망 여부		
희망하지 않는다	3,312	28.03
희망한다	8,503	71.97
괴롭힘 경험		
없다	10,398	88.01
있다	1,417	11.99
성별		
남성	6,068	51.36
여성	5,747	48.64
거주지역		
서울	1,287	10.89
경인(경기도+인천)	3,375	28.57

범주형 변수		
변수명	빈도	백분율 (%)
충청 및 강원권	2,088	17.67
경상권	2,992	25.32
전라 및 제주권	2,073	17.55
지역규모		
대도시	3,816	32.30
중소도시	6,180	52.31
읍/면	1,819	15.40
어머니 직업		
관리자	329	2.7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72	8.23
사무 종사자	404	3.42
서비스 종사자	1,512	12.80
판매 종사자	607	5.1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21	4.4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73	8.24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1,869	15.82
단순 노무 종사자	1,359	11.50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3,090	26.15
정보 없음	179	1.52
아버지 직업		
관리자	569	4.8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60	5.59
사무 종사자	941	7.96
서비스 종사자	282	2.39
판매 종사자	468	3.9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40	8.8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57	13.18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2,396	20.28
단순 노무 종사자	1,891	16.01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488	4.13
정보 없음	1,523	12.89

범주형 변수		
변수명	빈도	백분율 (%)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3,576	30.27
고졸	5,217	44.16
대학(2~3년제) 졸업	1,230	10.41
대학교(4년제) 졸업	1,536	13.00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256	2.17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1,480	12.53
고졸	6,336	53.63
대학(2~3년제) 졸업	893	7.56
대학교(4년제) 졸업	1,688	14.29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296	2.51
정보 없음	1,122	9.50
부모 결혼 상태		
결혼	10,396	87.99
결혼 외	1,419	12.01
부모의 상위학교 진학 격려도		
전혀 그렇지 않다	200	1.6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32	9.58
그런 편이다	6,651	56.29
매우 그렇다	3,832	32.43
부모의 자녀 희망 교육 수준		
초등학교	48	0.41
중학교	134	1.13
고등학교	3,337	28.24
대학교	7,174	60.72
대학원	1,122	9.50
연속형 변수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국가정체성	2.6026	1.5043
연령	12.4088	1.7380
소득수준	333.2619	147.4080

국가정체성이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진학 희망 여부가 한국 내 대학 진학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대학 진학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전제하였다. MAPS 2기 자료에서는 5차 및 6차 조사에서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 희망 시 원하는 교육 수준”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추가 검토 결과,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은 희망하지 않는 관측치가 5차 및 6차 조사에서 총 100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 진학 희망 변수가 특정 국가에 한정된 교육 선택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고등교육 지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2단계 최소제곱 회귀분석

표 2의 (1)과 (2)는 도구변수 없이 식 1을 추정한 결과로 괴롭힘 경험이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fixed effect, FE)와 무작위효과(random effect, RE) 추정치로 제시한다. 고정효과 추정에 따르면 괴롭힘 경험은 대학 진학 희망 여부를 7.46%p만큼 감소시키며, 무작위효과 추정에 따르면 8.81%p만큼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역인과성, 누락 변수 등으로 편향된 추정치일 수 있다.

표 2의 (3)과 (4)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제곱 회귀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2단계 최소제곱 회귀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과 무작위효과 모형 모두에서 괴롭힘 경험이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경험이 존재할 때 대학 진학 희망 여부는 고정효과 추정에서는 1.6849, 무작위효과 추정에서는 1.92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무작위효과 모형의 추정치가 일관적이라는 가정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무작위효과 모형이 선호된다.

〈표 2〉 괴롭힘 경험의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대한 영향

변수명	OLS Regression		2SLS Regression	
	(1) FE (SE)	(2) RE (SE)	(3) FE (SE)	(4) RE (SE)
괴롭힘 경험	-0.0746*** (0.0141)	-0.0881*** (0.0117)	-1.6849*** (0.5527)	-1.9290*** (0.3966)
성별				
남성	(Base)	(Base)	(Base)	(Base)
여성	- (0.0080)	0.0367*** (0.0080)	- (0.0080)	-0.0395* (0.0217)
연령	-0.0708*** (0.0028)	-0.0635*** (0.0026)	-0.1153*** (0.0159)	-0.1118*** (0.0113)
거주지역				
서울	(Base)	(Base)	(Base)	(Base)
경인(경기도+인천)	-0.0110 (0.0847)	0.0452*** (0.0167)	-0.2581* (0.1555)	0.0227 (0.0299)
충청 및 강원권	-0.1412 (0.1274)	0.0230 (0.0178)	-0.3867* (0.2134)	0.0226 (0.0316)
경상권	0.0920 (0.1405)	0.0548*** (0.0157)	-0.2845 (0.2518)	0.0357 (0.0282)
전라 및 제주권	0.2191 (0.1578)	0.0163 (0.0178)	0.2553 (0.2431)	-0.0100 (0.0321)
지역규모				
대도시	(Base)	(Base)	(Base)	(Base)
중소도시	0.0609 (0.0655)	-0.0277** (0.0108)	0.1628 (0.1066)	-0.0037 (0.0198)
읍/면	0.0694 (0.0755)	-0.0237 (0.0148)	0.0890 (0.1164)	0.0097 (0.0272)
어머니 직업				
관리자	(Base)	(Base)	(Base)	(Base)

변수명	OLS Regression		2SLS Regression	
	(1) FE (SE)	(2) RE (SE)	(3) FE (SE)	(4) RE (SE)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07 (0.0799)	-0.0333 (0.0284)	-0.0025 (0.1229)	-0.0721 (0.0509)
사무 종사자	-0.0366 (0.0830)	0.0009 (0.0323)	-0.0977 (0.1294)	-0.0979 (0.0609)
서비스 종사자	-0.0616 (0.0725)	-0.0264 (0.0268)	-0.0307 (0.1121)	-0.0441 (0.0474)
판매 종사자	-0.0114 (0.0752)	0.0024 (0.0298)	-0.0117 (0.1156)	-0.0321 (0.053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462 (0.0916)	-0.0206 (0.0336)	0.0048 (0.1420)	0.0606 (0.061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68 (0.0786)	0.0097 (0.0283)	0.0232 (0.1210)	0.0261 (0.0501)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0.0384 (0.0732)	-0.0199 (0.0265)	-0.0033 (0.1133)	-0.0362 (0.0469)
단순 노무 종사자	-0.0355 (0.0729)	-0.0387 (0.0271)	-0.0759 (0.1130)	-0.0710 (0.0484)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0.0660 (0.0701)	-0.0203 (0.0257)	-0.0503 (0.1079)	-0.0443 (0.0457)
정보 없음	-0.1973** (0.0794)	-0.1076*** (0.0393)	-0.2409* (0.1230)	-0.1636** (0.0702)
아버지 직업				
관리자	(Base)	(Base)	(Base)	(Base)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737 (0.1270)	0.0139 (0.0260)	0.0118 (0.1965)	0.0498 (0.0466)
사무 종사자	-0.0940 (0.1140)	0.0254 (0.0234)	-0.2467 (0.1831)	0.1489*** (0.0492)
서비스 종사자	-0.1166 (0.1454)	0.0301 (0.0319)	-0.1517 (0.2240)	0.0682 (0.0570)

변수명	OLS Regression		2SLS Regression	
	(1) FE (SE)	(2) RE (SE)	(3) FE (SE)	(4) RE (SE)
판매 종사자	0.1412 (0.1224)	-0.0021 (0.0272)	0.0891 (0.1892)	0.1527*** (0.058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809 (0.1407)	-0.0106 (0.0255)	0.0630 (0.2165)	0.0135 (0.045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990 (0.1145)	-0.0006 (0.0219)	-0.1036 (0.1893)	0.0389 (0.0397)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0.0837 (0.1080)	0.0143 (0.0209)	-0.2336 (0.1986)	0.0784** (0.0395)
단순 노무 종사자	0.1626 (0.1078)	0.0277 (0.0214)	0.0437 (0.1708)	0.0684* (0.0389)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0.0009 (0.1057)	-0.0306 (0.0273)	-0.0340 (0.1630)	0.0669 (0.0526)
정보 없음	0.1322 (0.1063)	0.0693** (0.0281)	0.0528 (0.1658)	0.1044** (0.0502)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Base)	(Base)	(Base)	(Base)
고졸	-0.2493 (0.3218)	0.0256*** (0.0097)	-0.1031 (0.4977)	0.0172 (0.0173)
대학(2~3년제) 졸업	0.1006 (0.3229)	0.0397*** (0.0149)	0.4091 (0.5079)	0.0395 (0.0264)
대학교(4년제) 졸업	-0.0558 (0.5439)	0.0371** (0.0148)	-1.0749 (0.9068)	0.0498* (0.0263)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0.2395 (0.5543)	0.0108 (0.0318)	-1.3344 (0.9318)	0.1781*** (0.0668)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Base)	(Base)	(Base)	(Base)
고졸	-0.1081 (0.2231)	0.0155 (0.0130)	0.2769 (0.3677)	-0.0065 (0.0236)

변수명	OLS Regression		2SLS Regression	
	(1) FE (SE)	(2) RE (SE)	(3) FE (SE)	(4) RE (SE)
대학(2~3년제) 졸업	0.1661 (0.2543)	0.0092 (0.0191)	0.7654* (0.4419)	0.0335 (0.0341)
대학교(4년제) 졸업	-0.1758 (0.2802)	0.0507*** (0.0171)	0.2488 (0.4550)	0.0370 (0.0304)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0.3233 (0.5188)	0.0132 (0.0318)	-1.4029 (0.8798)	-0.1032* (0.0616)
정보 없음	-0.2515 (0.2141)	-0.0378 (0.0334)	-0.0389 (0.3374)	0.0121 (0.0599)
부모 결혼 상태				
결혼	(Base)	(Base)	(Base)	(Base)
결혼 외	0.0258 (0.0339)	-0.0033 (0.0231)	-0.0301 (0.0556)	0.0008 (0.0406)
부모의 상위학교 진학 격려도				
전혀 그렇지 않다	(Base)	(Base)	(Base)	(Base)
그렇지 않은 편이다	0.1186*** (0.0340)	0.1316*** (0.0309)	0.0046 (0.0654)	0.0130 (0.0600)
그런 편이다	0.1571*** (0.0324)	0.2102*** (0.0291)	0.0341 (0.0653)	0.0114 (0.0665)
매우 그렇다	0.1431*** (0.0331)	0.2239*** (0.0294)	0.0156 (0.0671)	0.0034 (0.0700)
부모의 자녀 희망 교육 수준				
초등학교	(Base)	(Base)	(Base)	(Base)
중학교	-0.1158 (0.0737)	-0.2348*** (0.0678)	-0.0928 (0.1136)	-0.1228 (0.1215)
고등학교	-0.0697 (0.0641)	-0.0906 (0.0587)	-0.0989 (0.0991)	-0.1083 (0.1032)
대학교	0.1505** (0.0636)	0.1373** (0.0583)	0.1085 (0.0990)	0.1115 (0.1025)

변수명	OLS Regression		2SLS Regression	
	(1) FE (SE)	(2) RE (SE)	(3) FE (SE)	(4) RE (SE)
대학원	0.1831*** (0.0651)	0.1772*** (0.0594)	0.1818* (0.1001)	0.2231** (0.1048)
소득수준(로그 변환)	0.0056 (0.0138)	0.0197** (0.0092)	0.0158 (0.0215)	0.0120 (0.0164)
상수	1.4382*** (0.3485)	1.0661*** (0.0921)	2.3206*** (0.6157)	2.1485*** (0.2835)
하우스만 검정 (<i>p-value</i>)	207.8 (0.0000)		43.38 (0.5824)	
Observations	11,815	11,815	11,815	11,815
Number of PID	2,270	2,270	2,270	2,270

*** $p < 0.01$, ** $p < 0.05$, * $p < 0.1$

도구변수를 적용한 2단계 최소제곱법의 추정계수는 도구변수를 적용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계수보다 절댓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내생성 보정의 관점이다. 비도구변수 모형의 추정치는 괴롭힘 경험과 대학 진학 희망 간의 내생성으로 인해 괴롭힘 경험의 부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작게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누락변수가 대학 진학 희망을 높이는 동시에 또래 갈등이나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이는 경우, 비도구변수 모형은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므로 괴롭힘의 부정적 효과가 일부 상쇄되어 추정될 수 있다. 또한 피해 경험을 이분형 자기보고 변수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분류로 인해 개인 내 변화에 의존하는 고정효과 추정치의 절댓값이 축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는 처치 효과의 이질성 관점이다. 도구변수 가정이 성립할 경우, 2단계 최소제곱법 추정치는 전체 모집단의 평균 처치 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가 아니라 도구변수인 국가정책 성과 괴롭힘 경험 여부가 연관된 집단에 대한 국소적 평균 처치 효과(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LATE)를 식별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정치는

국가정체성의 변화와 괴롭힘 경험 가능성이 연동되어 변화하는 청소년에게서 집단 괴롭힘 경험이 대학 진학 희망에 미치는 효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이 괴롭힘 경험의 부정적 영향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집단이라면 도구변수 모형의 추정계수 절댓값이 비도구변수 모형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두 모형 간 계수 차이는 내생성 보정뿐 아니라 이와 같은 처치 효과의 이질성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

도구변수를 적용하지 않은 고정효과 추정에서는 집단 괴롭힘 피해가 대학 진학 희망 확률을 평균적으로 7.46%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구변수 추정치는 국가정체성의 변화에 따라 괴롭힘 피해 여부가 달라지는 집단에 한정된 국소적 효과이며, 추정의 불확실성이 커 정확한 크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선형확률모형의 계수로 해석할 경우, 95% 신뢰구간의 상한인 $-0.6016^{(1)}$ 조차 대학 진학 희망 확률의 약 60%p 감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하위집단에서 나타나는 괴롭힘의 부정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두 추정치는 서로 다른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상이한 식별전략과 대상 집단에서도 괴롭힘 피해가 대학 진학 희망을 낮추는 방향의 효과가 일관되게 확인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집단 괴롭힘의 영향이 당면한 학교 적응이나 학업성취의 저하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자신의 장기적인 교육 경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동일시 모형과 기대-가치이론이 예측하듯, 괴롭힘 피해를 통해 학교와의 관계 및 소속감이 약화되고 학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질 경우,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대학 진학이라는 장기적 교육 목표의 약화 또는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

3. 도구변수 관련성

2단계 최소제곱 추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도구변수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체성과 괴롭힘 경험과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표 3은 식 2를 추정한

1) $-1.6849 + 1.96 \times 0.5527 = -0.6016$

결과로 고정효과 모형과 무작위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국가정체성은 괴롭힘 경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국가정체성의 괴롭힘 경험에 대한 영향

변수명	First-Stage Regression	
	(1) FE (SE)	(2) RE (SE)
국가정체성	-0.0090*** (0.0024)	-0.0108*** (0.0021)
하우스만 검정 (<i>p-value</i>)	114 (0.0000)	
Observations	11,815	11,815
Number of PID	2,270	2,270

*** $p < 0.01$, ** $p < 0.05$, * $p < 0.1$

바운드·제이거·베이커(Bound·Jaeger·Baker, 1995)가 제기한 약한 도구 변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과 무작위효과 모형에서 도구변수로 사용된 국가정체성의 F-통계량과 χ^2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의 F값은 14.72로 나타나 스테이저·스톡(Staiger·Stock, 1997)이 제시한 경험적 기준인 10을 초과하였다. 또한 스톡·요고(Stock·Yogo, 2005)의 약한 도구변수 검정 기준에 따르면, 최대 상대적 편향을 10%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Cragg-Donald F-통계량의 임계값은 16.38이며,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임계값은 8.96이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고정효과 모형에서 산출된 F값 14.72는 10%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5% 기준은 충족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약한 도구변수로 인한 편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우려는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축약형 회귀인 식 3을 이용하여 국가정체성이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표 4와 같이 고정효과 모형, 무작위효과 모형 모두에서 국가정체성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희망 여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추정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국가정체성의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대한 영향

변수명	Reduced Form Regression	
	(1) FE (SE)	(2) RE (SE)
국가정체성	0.0152 ^{***} (0.0032)	0.0222 ^{***} (0.0026)
하우스만 검정 (<i>p-value</i>)	205.2 (0.0000)	
Observations	11,815	11,815
Number of PID	2,270	2,270

^{***} $p<0.01$, ^{**} $p<0.05$, ^{*} $p<0.1$

4. 강건성 분석

도구변수의 외생성 가정 가운데 배제제약은 국가정체성이 집단 괴롭힘 경험 이외의 경로를 통해 대학 진학 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배제제약의 성립 여부를 통계적으로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가정체성과 대학 진학 희망을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와 관련된 변수를 추가로 통제하고, 둘째, 국가정체성이 대학 진학 희망에 일정한 직접효과를 갖는 경우를 허용하는 콘리(Conley) 배제제약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추가 통제변수를 활용한 강건성 분석

국가정체성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포함하므로, 소속감을 느끼는 국가에서 선호되는 직업을 자신의 희망직업으로 선택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희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직업은 학업동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이 희망직업을 통해 대학 진학 희망과 관련되는 별도의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희망직업을 추가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이러한 경로를 고려한 이후에도 기존 추정 결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차별인식과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등 정서적 변수도 국가 정체성과 일정 부분 관련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서적 요인은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장운선 외, 2024). 따라서 국가 정체성이 이러한 정서적 요인을 통해 대학 진학 희망과 관련된다면 배제제약이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정서적 변수를 추가로 통제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정서적 변수는 독립적 변수가 아니라 괴롭힘 경험의 결과로 대학 진학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괴롭힘 경험이 정서적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학 진학 희망을 낮추는 경로가 전체 효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정서적 변수를 통제할 경우 괴롭힘 경험의 주요 영향 경로가 상당 부분 차단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변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기존 모형과 비교하는 것은 배제제약을 점검하기 위한 보조적 분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5〉 추가 통제변수별 2SLS 강건성 분석 결과

추가 통제변수	변수명	2SLS Regression with Additional Control	
		(1) FE (SE)	(2) RE (SE)
희망직업 (대분류)	괴롭힘 경험	-1.6268*** (0.5333)	-1.8463*** (0.3741)
	하우스만 검정 (<i>p-value</i>)	22.34 (1.0000)	
희망직업 (중분류)	괴롭힘 경험	-1.5947*** (0.5269)	-1.7977*** (0.3676)
	하우스만 검정 (<i>p-value</i>)	24.39 (1.0000)	
차별인식	괴롭힘 경험	-1.9590*** (0.7065)	-2.0909*** (0.4425)
	하우스만 검정 (<i>p-value</i>)	11.40 (1.0000)	
정신건강	괴롭힘 경험	-1.8545*** (0.6561)	-2.2483*** (0.5818)
	하우스만 검정 (<i>p-value</i>)	38.86 (0.8500)	

추가 통제변수	변수명	2SLS Regression with Additional Control	
		(1) FE (SE)	(2) RE (SE)
삶의 만족도	괴롭힘 경험	-2.2094** (0.8864)	-2.6720*** (0.9222)
	하우스만 검정 (<i>p-value</i>)	19.69 (1.0000)	
자아존중감	괴롭힘 경험	-2.2282** (0.9610)	-3.0233*** (0.9988)
	하우스만 검정 (<i>p-value</i>)	-7.50 (1.0000)	
Observations		11,815	11,815
Number of PID		2,270	2,270

*** $p < 0.01$, ** $p < 0.05$, * $p < 0.1$

분석 결과, 희망직업을 추가로 통제한 경우에도 집단 괴롭힘 경험이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기본모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고정효과 모형의 1단계 F-통계량은 각각 15.16과 15.13으로, 스테이저·스톡(Staiger·Stock, 1997)이 제시한 경험적 기준인 10을 모두 상회하였다. 이는 국가정체성과 대학 진학 희망 사이에 희망직업을 통한 별도의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기본적인 추정 결과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며, 배제제약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차별인식,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모형에서도 괴롭힘 경험의 추정계수는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 역시 유지되었다. 다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추정계수의 절댓값이 기본모형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각각 통제한 모형의 1단계 F-통계량은 8.28과 7.12로, 스테이저·스톡(Staiger·Stock, 1997)이 제시한 경험적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서적 요인은 괴롭힘 경험과 대학 진학 희망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일 가능성이 있기에 정서적 변수를 추가로 통제한 이후 추정계수가 달라지거나 1단계 F-통계량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도구변수의 배제제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 배제제약 민감도 분석

추가 통제변수를 활용한 분석은 관측 가능한 특정 경로만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가정체성이 대학 진학 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배제제약을 완화한 상태에서도 괴롭힘 경험의 추정효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콘리·헨슨·로시(Conley·Hansen·Rossi, 2012)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콘리 민감도 분석에서는 국가정체성의 직접효과를 0으로 고정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이 대학 진학 희망에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직접효과를 축약형 계수의 0%에서 10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각 가정하에서 보정된 고정효과 2SLS 추정 계수와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직접효과의 비율이 커질수록 국가정체성과 대학 진학 희망 간 축약형 관계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이 괴롭힘 경험을 통하지 않는 직접 경로에 의해 설명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배제제약 완화 수준에 따른 콘리 민감도 분석 결과

유의수준	FE-2SLS (SE)	배제제약 완화 수준
1%	-1.1912 (0.4625)	29.30%
5%	-0.7942 (0.4052)	52.86%
10%	-0.6382 (0.3880)	62.12%

주: 배제제약 완화 수준은 도구변수의 직접효과를 축약형 효과의 몇 %까지 허용할 때 해당 유의수준에서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소멸하는지 의미한다. 또한 위 표에서 FE-2SLS의 계수는 해당 임계점에서의 추정치이다.

분석 결과, 국가정체성의 직접효과를 축약형 계수의 약 52.86%까지 허용할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추정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를 축약형 계수의 약 62.12%까지 허용할 경우에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소멸하였다. 이는 국가정체성과 대학 진학 희망 간 축약형 관계의 상당 부분이 괴롭힘 경험 이외의 직접 경로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임계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괴롭힘 경험의 부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준다.

추가 통제변수 분석과 콘리 민감도 분석을 종합하면, 제한적인 위반 가능성을 허용한 경우에도 기본 추정 결과는 대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서적 변수를 통제한 모형에서는 매개경로 차단과 약한 도구변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결과는 보조적인 근거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가정체성을 도구변수로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경험이 대학 진학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관찰되지 않은 특성과 역인과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완화하고, 부정적인 또래 경험이 단기적인 학교 적응을 넘어 장기적인 교육적 포부와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괴롭힘 경험은 고정효과 및 무작위효과 모형과 도구변수 모형 모두에서 대학 진학 희망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도구변수 모형의 추정계수는 비도구변수 모형보다 절댓값이 크게 나타났다.

두 모형의 계수 차이는 내생성과 처치 효과의 이질성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개인 고정효과 모형은 시점에 따라 변화하면서 괴롭힘 경험과 대학 진학 희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제거하지는 못한다. 학업 기대가 높거나 학교활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활발한 환경은 대학 진학 희망을 높이는 동시에 또래 갈등이나 괴롭힘의 노출 가능성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누락되면 괴롭힘의 부정적 효과가 고정효과 모형에서 일부 상쇄될 수 있다. 또한 피해 경험을 이분형 자기보고 변수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분류는 개인 내 변화에 의존하는 고정효과 추정치의 절댓값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도구변수 추정치는 국가정체성과 괴롭힘 경험이 연동되어 변화하는 특정 집단의 국소적 평균 처치 효과이므로, 계수의 확대를 내생성이나 측정오차가 보정된 결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집단이 괴롭힘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가능성과 도구변수 추정의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모형의 추정 결과는 또래 피해가 학업성취와 학교참여에 부정적으로 관련된다는 나카모토·슈워츠(Nakamoto·Schwartz, 2010), 유보넨 외(Juvonen et al., 2011)의 연구 및 또래 피해가 학교참여 저하를 거쳐 대학 진학 포부와 실제 대학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인 그루 외(Grew et al., 202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내생성을 고려하여 괴롭힘 피해가 학업성취와 대학 진학 등 장기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에릭센 외(Eriksen et al., 2014)와 사르소사·우르수아(Sarzosa·Urzúa, 2021)의 논의를 확장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대학 진학 희망이라는 미래지향적 교육 포부를 직접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집단 괴롭힘의 교육적 영향을 단기적인 학업성취나 학교 적응의 저하를 넘어, 청소년이 장기적인 교육 경로를 형성하는 단계의 문제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대학 진학 희망은 이미 실현된 교육성과가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학업 성공 가능성, 교육을 지속하는 데 따른 가치와 비용, 앞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교육 기회를 종합하여 형성하는 미래지향적 포부이다. 따라서 집단 괴롭힘 경험이 대학 진학 희망을 낮춘다는 결과는 피해의 영향이 성적 저하나 실제 진학 실패가 나타난 이후에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 교육 경로를 구상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시간 불변 특성을 통제한 패널모형뿐 아니라 국가정체성을 이용하여 괴롭힘 경험의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부정적

효과가 유지되었다. 이는 괴롭힘과 낮은 진학 희망의 관계가 단순히 원래 학교 적응이나 학업동기가 낮은 청소년이 괴롭힘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적 기회를 설명할 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 언어 능력 및 부모의 교육지원과 같은 개인 및 가정 차원의 요인뿐 아니라, 학교 내 또래 관계와 사회적 수용·배제의 경험 역시 장기적인 교육 포부를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체성과 괴롭힘 피해 가능성이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 또한 이러한 조건이 개별 청소년의 특성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와 또래집단 안에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의 함의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에서는 학업 및 언어 지원과 함께 학교 내 괴롭힘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예방과 개입이 중요하다. 학교는 괴롭힘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학교 소속감과 참여, 진학 희망이 함께 약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상담과 진로, 학업 지원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 괴롭힘이 또래의 동조와 방관 속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사건의 사후 처리와 더불어 또래 존중과 방어 행동을 강화하고 배제적 학급규범을 개선하는 예방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개입은 다문화 청소년을 별도로 분리하기보다 전체 학생의 또래관계와 학급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국가정체성을 도구변수로 활용하고 추가 통제변수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배제적 약을 직접 입증할 수는 없다. 또한 고정효과 모형의 1단계 F-통계량이 엄격한 약한 도구변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추정치가 특정 하위집단의 국소적 평균 처치 효과라는 점에서 계수의 크기와 전체 집단으로의 일반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변수를 이분화하거나 합산하는 과정에서 측정의 세부 정보가 제한되었다. 집단 괴롭힘 변수는 피해의 빈도, 심각성 및 유형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대학 진학 희망 역시 이분화 과정에서 희망 수준의 차이가 단순화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척도를

활용하고, 진학 포부의 강도 등을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발달단계와 학교급 전환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분리하지 못하였다. 연령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지만, 또래관계의 중요성, 괴롭힘의 의미 및 대학 진학 희망의 구체성이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분석이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전후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교육 경로는 개인적 적응을 넘어 사회통합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내생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집단 괴롭힘 경험이 단기적인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뿐 아니라 대학 진학 희망과 같은 장기적인 교육적 포부에도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업 및 언어 지원과 더불어 또래관계, 학교 소속감 및 괴롭힘 예방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2026년 6월 22일 접수
2026년 8월 25일 수정 완료
2026년 8월 21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교육부. 2025. “2025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세종: 교육데이터담당관.
국가데이터처. 2025.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대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부. 2025. “2025년 10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과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설동훈. 2025. “다문화사회의 의미.” 『고령사회의 삶과 일』 18: 4-7.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청소년정책과.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다문화가족과.
여성가족부. 2025.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다문화가족과.
이해경·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
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
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장윤선·양계민·이정민. 2024. “별점회귀모형을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대학
진학 영향요인 탐색.” 『교육과학연구』 55(1): 105-130.
Bound, J., D. A. Jaeger and R. M. Baker. 1995. “Problems with 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ion whe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struments
and the endogenous explanatory variable is weak.”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0(430): 443-450.
Chhor, C., V. Sek, R. Norng, S. Hoeurn and R. Sam. 2024.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enrollment decision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 case study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Battambang.”

- Europ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and E-Learning* 2(6): 169-186.
- Choi, J., N. Kruis and J. Lee. 2022. "Target congruence a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risk of bullying victimiz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y youth in South Korea." *Crime & Delinquency* 68(13-14): 2395-2421.
- Coll, C. G., K. Crnic, G. Lamberty, B. H. Wasik, R. Jenkins, H. V. García and H. P. McAdoo. 1996. "An integrative model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competencies in minority children." *Child Development* 67(5): 1891-1914.
- Conley, T. G., C. B. Hansen and P. E. Rossi. 2012. "Plausibly exogenou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4(1): 260-272.
- Cozzolino, E., C. Smith and R. L. Crosnoe. 2018. "Family-related disparities in college enrollment across the Great Recess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61(5): 689-710.
- Duffy, A. L. and D. Nesdale. 2009. "Peer groups, social identity, and children's bullying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8(1): 121-139.
- Eccles, J. S. and A. Wigfield. 2002. "Motivational beliefs,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109-132.
- Eriksen, T. L. M., H. S. Nielsen and M. Simonsen. 2014. "Bullying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Human Resources* 49(4): 839-87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inn, J. D. 1989. "Withdrawing from school."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9(2): 117-142.
- Gorman, E., C. Harmon, S. Mendolia, A. Staneva and I. Walker. 2021. "Adolescent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later life outcom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1048-1076.

- Grew, E., G. Baysu and R. N. Turner. 2022. "Experiences of peer victimization and teacher support in secondary school predict university enrolment 5 years later: Role of school engagemen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4): 1295-1314.
- Hornsey, M. J. and M. A. Hogg. 2000. "Subgroup relations: A comparison of mutual intergroup differentiation and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s of prejudice redu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2): 242-256.
- Huddy, L. and N. Khatib. 2007.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63-77.
- Jasinskaja-Lahti, I., K. Liebkind and E. Solheim. 2009. "To identify or not to identify? National disidentification as an alternative reaction to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Applied Psychology* 58(1): 105-128.
- Juvonen, J., Y. Wang and G. Espinoza. 2011. "Bullying experiences and compromised academic performance across middle school grade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1(1): 152-173.
- Kende, J., G. Baysu, K. Phalet and F. Fleischmann. 2021. "Dual identity in context: The role of minority peers and school discrimin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77(4): 1087-1105.
- Kim, J. and E. Fong. 2024. "The influence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accultur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50(18): 4718-4737.
- Kremer, K. P., J. Huang, M. G. Vaughn and B. R. Maynard. 2019. "College expectations of eighth grade students: The role of learning approaches and parent influen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4: 104396.

- Nakamoto, J. and D. Schwartz. 2010. "Is peer victimization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tic review." *Social Development* 19(2): 221-242.
- Ojala, K. and D. Nesdale. 2004. "Bullying and social identity: The effects of group norms and distinctiveness threat on attitudes towards bully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19-35.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Perna, L. W. 2006. "Studying college access and choice: A proposed conceptual model." pp. 99-157 in J. C. Smart (ed.).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Vol. 21*. Dordrecht: Springer.
- Rumbaut, R. G. 2005. "Turning point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terminants of educational attainment, incarceration, and early childbearing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Ethnic and Racial Studies* 28(6): 1041-1086.
- Salmivalli, C. 2010. "Bullying and the peer group: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2): 112-120.
- Sarzosa, M. and S. Urzúa. 2021. "Bullying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skills." *Quantitative Economics* 12(3): 945-980.
- Staiger, D. O. and J. H. Stock. 1997. "Instrumental variables regression with weak instruments." *Econometrica* 65(3): 557-586.
- Stock, J. H. and M. Yogo. 2005. "Testing for weak instruments in linear IV regression." pp. 80-108 in D. W. K. Andrews and J. H. Stock (eds.). *Identification and inference for econometric models: Essays in honor of Thomas Rothenber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and J. C. Turner. 2001.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pp. 94-109 in M. A. Hogg and D. Abrams (eds.). *Intergroup relations: Essential readings*.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 Turner, J. C.,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and M. S. Wetherell.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 Verkuyten, M. and A. A. Yildiz. 2007. "National (dis)identification and ethnic and religious identity: A study among Turkish-Dutch Musli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10): 1448-1462.
- Wigfield, A. and J. S. Eccles. 2000. "Expectancy-value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68-81.
- Yeung, J. W. K. 2022. "The academic aspiration of immigrant youths and their college graduation in young adulthood: A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carry-over ef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11: 101888.

The Effect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College Aspiration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 Using National Identity

Sehwang Park

Department of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Jungtaek L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Abstract

As Korean society becomes increasingly multicultural, greater policy attention is needed to support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will become key participants in the future labor market and civil society. Multicultural adolescents may be particularly vulnerable to structural stressors such as bullying during identity formation, raising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such experiences for their long-term educational aspirations. This study therefore estimates the causal effect of bullying on the college aspiration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account for unobserved time-invariant individual heterogeneity through individual fixed effects while addressing potential endogeneity with national identity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his study employs a fixed-effects two-stage least squares (FE-2SLS) approach. The analysis draws on data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 (MAPS 2) covering the period from 2019 to 2024 and includes 2,270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results show that bullying victimization significantly reduces college aspiration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Moreover, the negative effect estimated by the FE-2SLS model is larger than that estimated by the panel model without an instrumental variable, suggesting that estimates that do not account for endogeneity may understate the adverse effect of bullying or that the effect may be relatively larger among compliers whose bullying exposure changes in response to the instrumental variable. Nevertheless, the negative effect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college aspirations is

consistently observed across models employing different identification strategies. This indicates that the consequences of bullying may extend beyond short-term school adjustment to adolescents' long-term educational aspirations. Policies target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should therefore go beyond academic support to include the prevention of bullying and discrimination and efforts to strengthen social belonging.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bullying, college aspirations, national identity, instrumental variable, MAPS 2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관련 요인 탐색연구: 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부 민 서*

요 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사회경제적 배경 및 심리적 특성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청소년 6,68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모형 1에는 성별, 재학 여부, 가족구조 및 가정경제력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을 추가하였다. 모형 3에는 불안과 우울을 표준화한 후 평균하여 구성한 내재화 증상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모형에서 재학 여부, 가족구조, 가정경제력 및 내재화 증상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부모가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일수록, 가정경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내재화 증상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가 높았다. 반면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은 모형 2에서는 유의하였으나, 내재화 증상을 추가한 최종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점을 본문에서 다루었다.

주제어: 청소년, 학습 외 온라인 이용, 학교 밖 청소년, 내재화 증상

* 제1저자,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강사, minseo.lyla@dgu.ac.kr

I. 서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청소년의 학습과 정보탐색을 지원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여가, 오락, 또래관계 형성 및 정서적 휴식이 이루어지는 일상적 생활환경이 되었다. 청소년은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 영화,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채팅, 메신저, SNS 등을 통해 또래와 소통한다. 이러한 학습 목적 이외의 온라인 활동은 10대 청소년의 보편적인 여가 및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게임, 영화, 음악 등 학습 목적 이외의 온라인 이용과 온라인 소통은 청소년의 주요 디지털 미디어 활동으로 조사되었다(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2021). 이처럼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병리적이거나 중독적 이용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와 생활환경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상적 인터넷 이용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또는 충족되지 않은 심리적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이용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보상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Kardefelt-Winther, 2014). 이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은 기분 전환, 정서적 완화, 현실적 문제로부터의 일시적 거리두기 등을 목적으로 게임, 영상, 음악, SNS와 같은 온라인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단순한 여가활동으로만 보거나 문제적 이용으로 이해할 수 없다. 즉, 심리적 어려움과 일상적 이용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은 자신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식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긍정적 자기인식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긍정적 자기인식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자아존중감과 온라인 이용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문제적

인터넷 이용 또는 문제적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해 왔다(Shannon, Bush, Villeneuve, Hellemans, & Guimond, 2022; Soriano-Molina, Limiñana-Gras, Patró-Hernández, & Rubio-Aparicio, 2025). 특히 최근 메타분석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또는 문제적 인터넷 이용이 자아존중감과 부정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oriano-Molina et al., 2025).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온라인 이용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문제적 이용이나 중독적 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상적 수준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하는 일반 청소년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주로 화면 이용 시간, 소셜미디어 이용, 문제적 인터넷 이용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Keles, McCrae, & Grealish, 2020; Tang, Werner-Seidler, Torok, Mackinnon, & Christensen, 2021). 또한 장시간의 화면 이용이 수면시간 감소, 취침 지연, 우울감, 낮은 삶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 저하와 관련될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Hale & Guan, 2015; Stiglic & Viner, 2019).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그 효과의 크기도 대체로 크지 않거나 연구설계, 콘텐츠 유형, 이용 동기, 측정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Odgers & Jensen, 2020; Tang et al., 2021; Valkenburg, Meier, & Beyens, 2022). 따라서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을 단순한 이용 시간이나 병리적 이용 여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습 목적 이외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학교 소속과 가족 배경 맥락에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학습 활동뿐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시간, 또래 관계, 교사의 지도,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일상생활의 시간 구조, 또래 관계의 장, 여가활동 기회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도 관련될 수 있다. 가족구조와 가정경제력 역시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여가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가정경제력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스로의 가족 경제적 자원과 생활 여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이용과의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학교 소속과 가족 배경이 결합된 생활환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우울과 불안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에 투입하기보다, 두 증상이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구성하는 주요 내재화 증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울과 불안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경험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두 변인을 동시에 투입할 경우, 개별 계수의 해석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통합한 내재화 증상 변수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성별, 재학 여부, 가족구조 및 가정경제력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관련되는지 추가로 확인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긍정적 자기인식을 고려한 이후에도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내재화 증상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관련되는지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청소년의 일상적 디지털 생활양식으로 보고, 이러한 이용이 학교 소속, 가족구조, 주관적 가정경제력 및 내재화 증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문제·중독적 이용의 하위 형태로 간주하거나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만 설명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정신건강, 학교 소속 및 가족환경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청소년의 일상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심리사회적 특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의 개념과 일상성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학습, 정보탐색, 그리고 과제 수행과 같은 도구적 목적뿐 아니라 여가, 오락, 또래 관계 및 정서적 휴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영상, 음악, SNS, 메신저 이용은 청소년의 일상적 온라인 활동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이다(질병관리청, 2025). 이러한 학습 목적 이외의 온라인 활동은 이제는 청소년의 보편적인 생활양식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청소년의 일상 생활과 심리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관련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인터넷 중독, 문제적 인터넷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용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중독이나 문제적 인터넷 이용은 통제력이나 일상 기능이 손상되고 금단이나 집착 등 병리적 또는 부정적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제적 소셜미디어 이용은 주로 SNS 이용과 관련된 과도한 몰입이나 기능 손상에 초점을 둔다. 반면 이 연구에서 다루는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학습 목적 이외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이 일상적 활동이라는 점이 온라인 이용과 심리적 어려움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연구는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학습 목적 이외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전반적 참여 정도로 보았다. 그리고 이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가족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2. 학교·가족 배경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은 성별, 학교 재학 여부, 가정경제력 및 가족구조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별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와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남자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을, 여자 청소년은 관계 유지와 의사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보고되기도 하였다(Leonhardt & Overå, 2021).

학교 재학 여부는 청소년의 일상 패턴과 여가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다. 재학생은 수업과 방과 후 활동을 중심으로 생활이 구조화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일상 시간 사용 패턴이나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방식이 재학생과 다를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학습 목적 이외의 온라인 이용 정도는 재학생보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최정원 외, 2021).

가정경제력은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과 관련될 수 있는 가족 배경 요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경제력은 객관적 소득이나 자산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의 경제적 위치는 어쩌면 청소년이 경험하는 생활기회, 여가 자원, 또래와의 활동 및 디지털 미디어 이용환경과 관련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 또는 가족 풍요도가 스크린 시간, 게임 및 TV 시청과 관련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Ke, Chen, Hong, Liang, & Liu, 2023; Inchley, Mabelis, Brown, Willis, & Currie, 2023.).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유시간 중 게임 시간 비중은 낮고 검색 시간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재기, 2011).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이 개인의 선호나 정신건강 상태만이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여건과 그에 따른 오프라인 여가자원 및 생활환경의 차이와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 연구의 가정경제력은 청소년이 인식한 주관적 지표이므로, 인식된 가족 경제상황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간의 관련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 및 화면 이용 시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도 있었다(McMillan, McIsaac, & Janssen, 2015; Langøy, Smith, Wold, Samdal, & Haug, 2019). 즉 부모의 동거 여부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돌봄, 감독, 정서적 지지, 생활 안정성과 관련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부모가 함께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의 기능과 지지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결핍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족구조의 차이는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온라인 이용을 둘러싼 감독 및 지지의 양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별, 재학 여부, 가정경제력 및 가족구조를 위계적 회귀분석의 첫 단계에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가족 배경을 고려한 이후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 그리고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내재화 증상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추가적으로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

지각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의 요구가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주는가를 측정하는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지각된 스트레스는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상황을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온라인 활동은 긴장을 완화하고 일상적인 문제로부터 잠시 벗어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은 오락과 정보 탐색을 통한 기분 조절이나 관계 유지 및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Leung, 2007).

긍정적 자기인식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심리적 자원을 나타낸다. 긍정적 자기인식은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긍정적 자기인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중 자신에 대한 만족, 가치감, 장점 및 긍정적

태도를 묻는 ‘본인에 대한 인식’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최정원 외, 2021). 이러한 자기평가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과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Rosenberg, 1965).

두 변인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구체적인 정서 증상과 관련되지만, 그 자체로 정신건강의 부정적 증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청소년의 전반적인 심리상태와 자기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변인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내재화된 정신건강 증상인 불안과 우울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또래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자신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자기표현, 사회적 비교 및 타인의 반응은 자기 인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공간은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래의 반응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게 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긍정적 자기인식과 온라인 이용의 관계는 온라인 활동의 목적과 경험의 내용,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387명을 대상으로 3주간 반복 측정한 결과, 소셜미디어 이용 후 대부분의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부 청소년에게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상반된 변화가 확인되었다(Valkenburg, et al., 2021). 이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특성과 개인의 온라인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적 인터넷 이용이나 문제적 소셜미디어 이용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부적 관련성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 중국 청소년 1,552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문제적 인터넷 이용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게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Mei, Yau, Chai, Guo, & Potenza, 2016). 또 다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수준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신체에 대한 이미지상이 두 변수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ak, Bingol, & Dayi, 2023).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신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 메타분석도 문제적 인터넷 이용과 자아존중감 간의 부적 관련성을 뒷받침한다. 총 33개 연구와 청소년 303,243명의 자료를 분석한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및 문제적 인터넷 이용이 자아존중감과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Soriano-Molina, et al., 2025). 즉, 문제적 인터넷 이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스트레스 역시 온라인 이용과 관련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이 기분 조절을 위한 오락과 온라인의 또래 관계 등과 같은 인터넷 이용 동기와 관련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으며(Leung,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에서 사회불안이 일부 매개 역할을 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도 있었다(Feng, Ma, & Zhong, 201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문제적 소셜미디어 이용과 정적인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artberg, Thomasius, & Paschke, 202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불편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이용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추가로 중국에서 시행된 종단연구에서는 문제적 인터넷 이용, 자아존중감 및 우울 증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중국 청소년 1,736명을 2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 문제적 인터넷 이용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이후 우울 증상을 예측하였으며, 우울 증상 역시 이후 문제적 인터넷 이용과 자아존중감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ai, Wang, Li, Wang, Lu, & Guo, 2023). 이는 자기인식과 온라인 이용의 관계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관계일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스트레스가 온라인 활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문제적 인터넷 이용, 인터넷 중독 또는 문제적 소셜미디어 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습 외 온라인 이용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루는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병리적이거나 중독적 이용을 의미하기보다 학습 목적 이외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전반적 참여 정도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심리적 적응 상태와 자기평가를 반영하는 변인이며, 보상적 인터넷 이용 관점에서도 온라인 활동이 정서적 긴장 완화나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의 관련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이후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관련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4. 내재화 증상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중 우울과 불안은 대표적인 내재화 증상으로 이해된다. 내재화 증상은 정서적 고통이 주로 개인의 내면으로 향하는 양상을 의미하며, 우울감, 불안, 걱정, 무기력, 긴장, 부정적 정서 경험 등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기의 내재화 문제는 주로 우울과 불안의 발달 및 공존 양상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으며(Zahn-Waxler, Klimes-Dougan, & Slaterry, 2000), 청소년기의 우울과 불안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경험에서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울과 불안을 각각 독립된 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할 경우, 두 변인의 고유한 관련성을 해석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울과 불안을 통합한 내재화 증상 변인을 구성하고, 이것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청소년 정신건강의 관계는 국내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의 초점이었다. 선행연구들은 화면 이용 시간, 소셜미디어 이용,

문제적 인터넷 이용 등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Keles, et al., 2020; Tang, et al., 2021). 또한 장시간의 화면 이용이 수면시간 감소, 취침 지연, 우울감, 낮은 삶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 저하와 관련될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Hale & Guan, 2015; Stiglic & Viner, 2019).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정서적 어려움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그 효과의 크기 역시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규모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 이용과 청소년 안녕감 간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는 확인 되더라도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점이 보고되었으며(Przybylski & Weinstein, 2017; Orben & Przybylski, 2019), 여러 선행연구는 온라인 이용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가 콘텐츠의 종류, 이용 동기, 이용 맥락, 측정 방식 및 연구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Odgers & Jensen, 2020; Tang et al., 2021; Valkenburg, et al., 2022).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을 단순한 이용 시간이나 병리적 이용 여부만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게임·영상·음악과 같은 오락적 콘텐츠 이용, 채팅·메신저·SNS 등을 통한 소통,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이용 등 서로 다른 성격의 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학습 목적 이외 온라인 활동 전반과 내재화 증상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인터넷 중독이나 문제적 인터넷 이용과 동일 개념이 아니므로, 기존의 문제적 이용을 다뤘던 선행 연구 결과를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청소년의 일상적 온라인 활동과 정서적 어려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상적 인터넷 이용 관점에서 봤을 때 내재화 증상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의 관련성을 해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또는 충족되지 않은 심리적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Kardefelt-Winther, 2014).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온라인 공간은 현실에서의 부담을

잠시 피하고, 기분 전환, 정서적 완화, 즉각적 자극 또는 사회적 연결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내재화 증상이 높은 청소년에게 학습 목적 이외의 온라인 활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이는 정서적 어려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거나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한 온라인 이용 가능성과 연결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온라인 공간은 현실에서의 부담을 잠시 피하고, 즉각적인 자극이나 사회적 연결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인과관계로 보기 어렵다. 온라인 활동이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일시적 완화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온라인 이용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수면, 학습, 대인관계와 충돌할 경우 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내재화 증상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학교 소속과 가족 배경,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 그리고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내재화 증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심리적 적응 변인, 내재화 증상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성별, 재학 여부, 가족구조 및 가정경제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

연구문제 2.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관련되는가?

연구문제 3. 불안과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증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긍정적 자기인식을 통제한 이후에도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관련되는가?

III. 연구설계

1. 표본 및 변수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10대 청소년이 경험하는 주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 보호·위험요인,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경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전국 단위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원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PC 및 모바일을 활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었다. 원자료는 학생 청소년 5,937명과 학교 밖 청소년 752명, 총 6,68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이 중 성별, 재학 여부, 가족구조, 가정경제력,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적 자기인식, 우울, 불안 및 학습 외 온라인 이용 문항에 응답한 전체 사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이다. 이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 영화, 음악, 도박, 성인물, 채팅 SNS 등 공부 및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게임, 영화, 음악 등 공부 및 학습 목적 이외의 콘텐츠 이용’, ‘도박, 성인물 등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이용’, ‘채팅, 메신저,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의 세 문항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많이 이용한다’ 4점까지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재학 여부, 가족구조, 그리고 가정경제력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활용한 공개 원자료에는 응답자의 정확한 연령 또는 학년 변수가 제공되지 않아 이를 회귀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고, 재학 여부는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가족구조는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와 이혼, 별거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부모가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가정경제력은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청소년이 최근 생활에서 경험한 상황을 얼마나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힘들며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 문항의 총점으로 산출하였다. 문항은 총 10개 이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중요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없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등의 문항에 ‘전혀 없었다(0)’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4)’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자기인식은 원자료의 ‘본인에 대한 인식’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자신에 대한 만족, 가치감, 장점 및 긍정적인 태도 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에 각각 ‘전혀 그렇지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게 하였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코딩한 후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재화 증상은 원자료에서 우울과 불안을 측정한 변수를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우울과 불안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정서 증상이지만 청소년기에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 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r=.863$, $p<.001$). 이에 우울과 불안을 각각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할 경우 개별 회귀계수의 해석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울 총점과 불안 총점을 각각 표준화한 후, 두 표준화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내재화 증상 변수를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내재화 정서 증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변수코딩과 분석방법

성별은 남자를 0, 여자를 1로 코딩하였다. 재학 여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0, 재학생을 1로 코딩하였다. 가족구조는 부모가 이혼, 별거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0,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가정경제력은 원자료의 응답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는 1점부터 4점까지의 원자료 응답값을 사용하였다. 세 문항의 합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세 문항의 Cronbach's α 는 .472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 결과, KMO 값은 .534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288.833$, $df=3$, $p<.001$). 고유값 1 이상 기준에 따라 1개 성분이 추출되었고, 해당 성분은 전체 분산의 48.705%를 설명하였다. 문항별 성분부하량은 채팅·메신저·SNS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 .802, 게임·영화·음악 등 학습 목적 이외 콘텐츠 이용 .799, 도박·성인물 등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이용 .423으로 나타났다.

세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높지 않고, 도박·성인물 등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이용 문항의 성분부하량과 공통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점수는 심리측정학적 의미의 단일 척도라기보다, 학습 목적 이외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전반적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합산지표로 해석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적 자기인식, 불안 및 우울은 각 척도의 채점 기준에 따라 산출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기인식의 부정적 문항은 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기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일관성은 지각된 스트레스 Cronbach's $\alpha=.830$, 긍정적 자기인식 $\alpha=.857$ 이었다. 불안은 $\alpha=.894$ 우울은 $\alpha=.908$ 이었으며 이후 두 척도 점수를 각각 표준화한 뒤 평균하여 내재화 증상 변수를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표 1〉).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적 자기인식, 불안 및 우울의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재학 여부, 가족구조, 가정경제력을 투입하였다. 모형 2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요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지각된 스트레스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인 긍정적 자기인식을 추가하였다. 모형 3에는 보다 내재화 증상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반적인 심리상태 및 자기인식을 통제한 이후에도 내재화된 증상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에 가진 추가적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결정계수(R^2), 수정된 결정계수, 결정계수 변화량(ΔR^2) 및 F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개별 변인의 관련성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t값 및 유의확률을 통해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VIF)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해 잔차의 독립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및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분석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사례는 목록별로 제외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표 1〉 표본의 특성(N=6,689)

	구 분	평균 (빈도)	표준편차 (비율)	최소	최대
성별	남자	(3104)	(46.4)		
	여자	(3585)	(53.6)		
재학여부	학교밖 청소년	(752)	(11.2)		
	재학생	(5937)	(88.8)		
가족구조	별거이혼사별	(863)	(12.9)		
	부모가동거	(5826)	(87.1)		

	구 분	평균 (빈도)	표준편차 (비율)	최소	최대
가정경제력	1 매우 못산다	(29)	(.4)		
	2	(168)	(2.5)		
	3	(516)	(7.7)		
	4 보통수준	(2989)	(44.7)		
	5	(1626)	(24.3)		
	6	(899)	(13.4)		
	7 매우 잘산다	(462)	(6.9)		
	지각된 스트레스	13.388	7.286	0	40
	긍정적 자기인식	30.768	5.883	10	40
	내재화증상	0	.9653	-.63	5.65
	학습외 온라인 이용	6.771	1.743	3	12
	게임, 영화, 음악 등	2.94	.890	1	4
	도박, 성인물 등 청소년 이용불가	1.18	.531	1	4
	채팅, 메신저, SNS등 소통	2.65	1.004	1	4

주: 범주형 변수의 경우 ()안에 빈도와 비율 값을 제시

IV.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6,689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자 3,104명(46.4%), 여자 3,585명(53.6%)이었다. 재학 여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752명(11.2%), 재학생이 5,937명(88.8%)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의 경우 부모가 이혼, 별거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함께 동거하지 않는 청소년은 863명(12.9%),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청소년은 5,826명(87.1%)이었다.

가정경제력은 4점인 보통 수준이 2,989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점 1,626명(24.3%), 6점 899명(13.4%), 3점 516명(7.7%), 7점인 매우 잘산다 462명(6.9%), 2점 168명(2.5%), 1점인 매우 못산다 29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 중 다수가 자신의 가정경제력을 보통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연속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지각된 스트레스의 평균은 13.388(SD=7.286)이었으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40이었다. 긍정적 자기인식의 평균은 30.768(SD=5.883)이었고, 최소값은 10, 최대값은 40이었다. 불안과 우울을 표준화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 내재화 증상의 평균은 0.000(SD=0.965)이었으며, 최소값은 -.63, 최대값은 5.65이었다. 내재화 증상은 표준화 점수로 구성되었으므로 평균이 0에 가깝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의 평균은 6.771(SD=1.743)이었으며, 최소값은 3, 최대값은 12이었다.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구성하는 문항별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게임, 영화, 음악 등’ 이용의 평균은 2.940(SD=0.8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팅, 메신저, SNS 등 소통’ 이용의 평균은 2.650(SD=1.004)이었으며, ‘도박, 성인물 등 청소년 이용 불가’ 이용의 평균은 1.180(SD=0.53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 문항 모두 최소값은 1, 최대값은 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이 주로 게임, 영화, 음악 등 오락적 콘텐츠 이용과 채팅, 메신저, SNS 등 소통형 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도박 및 성인물 등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구 분	학습외 온라인 이용(1)	지각된 스트레스(2)	긍정적 자기인식(3)	내재화증상 (4)
(1)	1	.069**	-.086**	.138**
(2)		1	-.186**	.465**
(3)			1	-.527**
(4)				1

* p<.05, ** p<.01, ***p<.001

주요 연속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지각된 스트레스 및 내재화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적 자기인식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는 내재화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긍정적 자기인식은 지각된 스트레스 및 내재화 증상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모두 .60 미만으로 나타나, 변인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성별	.050	.043	.014	1.173	.017	.043	.005	.394	.019	.043	.005	.434
재학여부	-.532***	.069	-.096	-7.670	-.497***	.070	-.090	-7.145	-.445***	.070	-.081	-6.381
가족구조	-.182**	.065	-0.035	-2.792	-.162	.065	-.031	-2.479	-.131*	.065	-.025	-2.012
가정 경제력	-.102***	.020	-.066	-5.217	-.084***	.020	-.055	-4.232	-.086***	.020	-.056	-4.326
지각된 스트레스					.012***	.003	.048	3.903	.002	.003	.009	.619
긍정적 자기인식 정도					-.013***	.004	-.045	-3.555	.000	.004	.001	.090
내재화 증상									.192***	.029	.106	6.668
F	35.434***				29.262***				31.596***			
ΔF	35.434				16.586				44.432			
R ²	0.027				0.032				0.038			
ΔR^2	0.027				0.005				.006			
adjR ²	0.026				0.031				0.037			

* p<.05, ** p<.01, ***p<.001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재학 여부, 가족구조 및

가정경제력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5.434$, $p<.001$), 학습 외 온라인 이용 변량의 2.7%를 설명하였다. 성별은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재학 여부, 가족구조 및 가정경제력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생보다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가 높았으며, 부모가 함께 동거하지 않는 청소년과 가정경제력이 낮은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을 추가하였다. 모형 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9.262$, $p<.001$), 설명력은 3.2%로 증가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의 추가에 따른 설명력 증가는 .5%p였다. 이 단계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가 높았고, 긍정적 자기인식이 낮을수록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는 불안과 우울을 통합한 내재화 증상을 추가하였다. 모형 3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1.596$, $p<.001$), 학습 외 온라인 이용 변량의 3.8%를 설명하였다. 내재화 증상의 추가에 따른 설명력 증가는 .6%p였다. 최종모형에서는 재학 여부, 가족구조, 가정경제력 및 내재화 증상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부모가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일수록, 가정경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내재화 증상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가 높았다. 반면 성별, 지각된 스트레스 및 긍정적 자기인식은 최종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V. 논의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이 학교·가족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청소년

6,689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인터넷 중독이나 문제적 인터넷 이용과 동일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 학습 목적 이외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전반적 참여 정도로 이해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모형에서 재학 여부, 가족구조, 가정경제력 및 내재화 증상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유의하였으나, 내재화 증상을 추가한 최종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재학 여부는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생보다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교 재학 여부가 청소년의 일상생활 습관, 또래 관계, 오프라인 활동 기회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일정이 하루의 상당 부분을 구성할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가 제공하는 규칙적인 시간표, 교사 또는 또래 집단과의 접촉 등과 상대적으로 멀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차이는 온라인 공간이 여가, 소통, 정보탐색, 정서적 휴식의 주요 장으로 기능할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가 학교 밖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이 문제행동이라 근거한다고 보지 않고 학교 소속의 차이가 청소년의 일상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정원 외, 2021).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에 있어 이용량의 차이 비교만을 중점으로 두기보다 이용 목적이나 유형, 오프라인 여가 자원 여부, 또래 관계 또는 생활 리듬의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구조와 가정경제력은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최종모형에서 부모가 이혼 등의 이유로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가정경제력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가족 배경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구조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돌봄이나 감독, 정서적 지지, 그리고 생활 안정성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온라인 이용을 둘러싼 생활환경과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가족구조로 인한 가족 돌봄이나 감독의 차이가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McMillan, et al., 2015; Langøy, et al., 2019).

가정경제력의 경우,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객관적 소득이나 자산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의 경제적 여건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간의 관련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정경제력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비용이 필요한 오프라인 여가, 문화, 또래 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높은 접근성을 가진 온라인 활동이 여가와 정서적 휴식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 방식, 가족 의사소통, 오프라인 여가자원,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가정경제력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간의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내재화 증상을 추가한 최종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기인식이 낮을수록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온라인 활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상적 인터넷 이용 관점에서도 온라인 활동은 현실의 긴장이나 불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Kardefelt-Winther, 2014).

그러나 내재화 증상을 투입한 이후에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는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그 관련성이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내재화 정서 증상과 상당 부분 중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긍정적 자기인식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부정적 자기평가가 문제적 인터넷 이용 또는 문제적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annon et al., 2022; Soriano-Molina et al., 2025).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일상적 수준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에서는 긍정적

자기인식의 고유한 관련성이 내재화 증상을 고려한 이후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문제적 온라인 이용과 일반적인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내재화 증상은 최종모형에서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즉,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내재화 증상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정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이 단순한 여가활동으로만 이해되기보다 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생활양식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울감, 불안과 같은 내재화 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기분 전환, 정서적 완화, 현실적 부담으로부터의 일시적 거리두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활동이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보상적 대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점과도 연결된다(Kardefelt-Winther, 2014).

그러나 내재화 증상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내재화 증상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보다 선행하였거나 또는 제3의 요인이 두 변인 모두와 관련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재화 증상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두 변인이 통계적으로 관련되어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문제행동으로 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크기가 작거나 혼재되어 있으며, 이용 동기, 콘텐츠 유형, 연구설계 및 개인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Odgers & Jensen, 2020; Tang et al., 2021; Valkenburg et al., 2022). 이 연구의 종속변수 역시 인터넷 중독이나 과의존이 아니라 게임, 영화, 음악, 온라인 소통 및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이용 등을 포함한 학습 목적 이외의 온라인 활동이다. 따라서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청소년이 어떤 심리적 상태와 생활환경 속에서 온라인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이용하는가를 탐색했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문제적 인터넷 이용이나 인터넷 중독이 아니라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이라는 일상적 온라인 활동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학교·가족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병리적 이용 중심으로만 설명하기보다, 일상적 생활양식의 일부로 이해하고 그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기인식이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관련되지만, 내재화 증상을 함께 고려한 이후에는 그 관련성이 유지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해석할 때 일반적인 스트레스나 자기평가와 우울·불안을 포함한 정서 증상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재학 여부, 가족구조, 가정경제력이 최종모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 소속과 가족 환경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해당 청소년의 정서적 상태, 생활 리듬, 오프라인 활동 기회, 그리고 또래 관계 및 가족 지원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우울과 불안 등 내재화 증상이 동반 여부, 일상생활의 균형 유지 여부, 그리고 오프라인 관계와 활동 기회가 충분한가를 함께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횡단자료에 기반한 탐색 연구이므로, 특정 개입이나 정책의 효과를 직접 제안하기엔 부족하며 청소년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과정에서 온라인 이용의 심리사회적 맥락을 함께 파악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간의 시간적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최종모형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 이는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이 정신건강 변인이나 일부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일상적

행동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관련된 일부 학교·가족 배경 및 심리적 특성을 확인한 탐색적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 부모의 미디어 중재, 온라인 접근성, 오프라인 여가 자원, 수면 및 생활 리듬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공개 원자료에는 응답자의 정확한 연령 또는 학년 변수가 제공되지 않아 이를 회귀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재학 여부에 따른 차이는 학교 소속의 차이뿐 아니라 연령 또는 학년 구성의 차이를 일부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과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학 여부와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경제력은 객관적 소득이나 자산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각된 가정경제력이 최종모형에서도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온라인 이용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주관적 경제 인식이 오프라인 여가 자원, 또래 활동 참여, 그리고 생활기회 및 정서적 경험과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이 연구는 이러한 경로를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주관적 가정경제력과 학습 외 온라인 이용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 2021년에 수집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학교 활동 제한, 가정 내 체류시간 증가와 같은 시기적 맥락이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코로나19 시기의 특수한 상황과 분리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증가한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청소년의 학습, 여가, 또래 관계 및 정서적 휴식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된 생활양식으로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후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과

주요 디지털 콘텐츠 이용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26; 질병관리청, 202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자료에 기반한 이 연구 결과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의 영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이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는 전환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와 이후 시기의 온라인 이용 양상을 비교하고, 당시 형성되거나 강화된 온라인 이용 경험이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거나 변화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은 게임, 영화, 음악, 온라인 소통,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이용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온라인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활동들에 참여한 정도를 합산하여 학습 목적 이외의 온라인 이용 정도를 분석하였으나, 각 이용유형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생활환경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련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학습 외 온라인 이용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높지 않았고, 특히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이용 문항은 다른 문항들과 비교하여 성격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특정 온라인 이용 유형에 대한 결과는 아니며 학습 목적 이외 온라인 활동 전반에 대한 합산지표의 결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오락적 콘텐츠 이용, 온라인 소통, 게임, SNS,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이용, 도박성 온라인 이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 관련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나 도박성 온라인 이용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위험 행동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 온라인 이용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부민서·조운오, 2023).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연구에서는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행태를 이용 유형 별로 구분하고, 각 이용유형이 정서적 어려움, 또래 관계, 경제적 동기, 위험 행동 요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이 재학 여부, 가족구조, 주관적 가정경제력 및 내재화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습 외 온라인 이용을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서적 어려움이 함께 반영된 일상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 7월 14일 접수
2026년 8월 28일 수정 완료
2026년 8월 25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부민서·조운오. 2023. “보호관찰 청소년의 도박문제 실태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 중독범죄학회보』, 13(2):63-85.
- 정재기. 20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 생활 시간조사의 활용.” 『한국사회학』, 45(5):197-225.
- 질병관리청. (2025).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5년 주요결과 발표』.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5.12.4.
-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1-R03.
- 통계청·여성가족부. (2026). 『2026 청소년 통계』.
- Cohen, S., Kamarck, T., and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4), 385-396.
- Colak, M., Bingol, O. S., and Dayi, A. 2023. “Self-esteem and social media addiction level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body image.” *Indian Journal of Psychiatry*, 65(5), 595-600.
- Feng, Y., Ma, Y., and Zhong, Q.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A mediated-moderation model.” *Frontiers in Psychology*, 10, 2248.
- Hale, L., and Guan, S. 2015. “Screen time and sleep among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leep Medicine Reviews*, 21, 50-58.
- Inchley, J., Mabelis, J., Brown, J., Willis, M., and Currie, D. 2023.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2022 Survey in Scotland: National Report.” *Glasgow: MRC/CSO Social and Public Health Sciences Unit*, University of Glasgow.
- Kardefelt-Winther, D. 2014.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ritique

- of internet addiction research: Towards a model of compensatory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351-354.
- Ke Y, Chen S, Hong J, Liang Y and Liu Y. 2023. “Association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screen tim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hina: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18(3): e0280248.
- Keles, B., McCrae, N., and Grealish, A. 2020. “A systematic review: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on depression, anxie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5(1), 79-93.
- Lai, W., Wang, W., Li, X., Wang, H., Lu, C., and Guo, L. 2023.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roblematic Internet use,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adolescent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7), 1273-1283.
- Langøy, A., Smith, O. R. F., Wold, B., Samdal, O., and Haug, E. M. 2019. “Associations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young people’s physical activity and screen time behaviors.” *BMC Public Health*, 19, 433.
- Leonhardt, M., and Overå, S. 2021. “Are there differences in video gaming and use of social media among boys and girls?—A mixed methods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1), 6085.
- Leung, L. 2007. “Stressful life events, motives for Internet use, and social support among digital kid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0(2), 204-214.
- McMillan, R., McIsaac, M., & Janssen, I. (2015). Family structure as a predictor of screen time among youth. *PeerJ*, 3, e1048.
- Mei, S., Yau, Y. H. C., Chai, J., Guo, J., and Potenza, M. N. 2016.

- “Problematic Internet use, well-being, self-esteem and self-control: Data from a high-school survey in China.” *Addictive Behaviors*, 61, 74-79.
- Odgers, C. L., and Jensen, M. R. 2020. “Annual research review: Adolescent mental health in the digital age: Facts, fear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1(3), 336-348.
- Orben, A., & Przybylski, A. K.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well-being and digital technology use.” *Nature Human Behaviour*, 3(2), 173-182.
- Przybylski, A. K., & Weinstein, N. 2017. “A large-scale test of the Goldilocks hypothesis: Quantifying the relations between digital-screen use and the mental well-being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Science*, 28(2), 204-21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nnon, H., Bush, K., Villeneuve, P. J., Hellemans, K. G. C., and Guimond, S. 2022.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MIR Mental Health*, 9(4), e33450.
- Soriano-Molina, E., Limiñana-Gras, R. M., Patr6-Hernández, R. M., and Rubio-Aparicio, M. 2025.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Behavioral Sciences*, 15(2), 116.
- Stiglic, N., and Viner, R. M. 2019. “Effects of screentime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of reviews.” *BMJ Open*, 9(1), e023191.
- Tang, S., Werner-Seidler, A., Torok, M., Mackinnon, A. J., and Christensen, H.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creen time and mental

- health in young people: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6, 102021.
- Valkenburg, P. M., Meier, A., and Beyens, I. 2022. "Social media use and its impact on adolescent mental health: An umbrella review of the evidenc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4, 58-68.
- Wartberg, L., Thomasius, R., and Paschke, K. 2021. "The relevance of emotion regulation, procrastination, and perceived stress for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21, 106788.
- Zahn-Waxler, C., Klimes-Dougan, B., & Slattery, M. J. 2000.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spects, pitfalls, and progress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3), 443-466.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Non-Learning Online Use: Focusing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Minseo Boo

Lecture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associations between adolescents' non-academic online use and their school and family backgrounds as well a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ata were drawn from the "Survey on the Mental Health of Teenager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the final sample included 6,689 adolesc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Model 1 included gender, school enrollment status, family structure, and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Model 2 added perceived stress and positive self-perception. Model 3 added internalizing symptoms, which were constructed by standardizing and averaging anxiety and depression scores.

The results showed that school enrollment status, family structure,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and internalizing symptom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non-academic online use in the final model. Specifically, non-academic online use was higher among out-of-school youth, adolescents whose parents did not live together, those who perceived their family economic status as lower, and those with higher levels of internalizing symptoms. Perceived stress and positive self-perception were significant in Model 2, but they were no longer significant after internalizing symptoms were added in the final mod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olescents' non-academic online use should be understood not simply as leisure activity or problematic behavior, but as an everyday online activity associated with school enrollment, family background, and emotional difficul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s, non-academic online use, out-of-school youth, family background, internalizing symptoms

〈한국사회〉 투고 및 발행규정 (2026. 6. 10. 개정)

제 1 조 (발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제 2 조 (목적) 〈한국사회〉는 한국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 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발간회수 및 일자) 〈한국사회〉는 연 2회, 2월 28일과 8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한국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중 1인이 겸임하며, 10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에 있어서 탁월하며,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제반학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및 발행과 관련한 예산의 집회
2. 논문심사의 방법 및 논문심사위원의 결정,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3. 특집호의 발행 및 내용의 결정
4. 본 학술지의 대내외적 홍보

제 8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 원고모집 및 발행과 관련된 공고를 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원고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발표된 원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관분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의 위촉은 연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4. 신청된 논문은 3인 이상의 전문영역 학자들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원은 게재 가(O), 재심(D), 게재 부적합(X) 등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5.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① 연구목적의 명료성, ② 분석의 엄밀성, ③ 이론적용의 타당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⑥ 관련문헌의 취급, ⑦ 연구결과의 의의, ⑧ 문장의 가독성, ⑨ 논문의 독창성, ⑩ 논문제목의 적합성, ⑪ 연구주제의 중요성, ⑫ 이론적 기여도, ⑬ 방법론적 기여도, ⑭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으로 나뉘어진다.
6. 재심 판정된 논문은 재심 의견을 준 심사자(들)에게 재심을 다시 의뢰한다.
7. 투고 원고에 대한 최종판정은 아래의 심사판정기준을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초심결과			판정	게재 및 재심 과정
○	○	○	게재 가능	게재확정
○	○	△		수정권고후 게재
○	○	X		수정을 전제로 게재
○	△	△	재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초심결과			판정	게재 및 재심 과정
X	X	X	게재 불가	
X	X	△		
X	X	○		

8.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최종원고 제출 등은 모두 전자메일을 이용한다.

제 10 조 (이의신청)

1. 논문 투고자가 게재불가 판정 결과에 불응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 심사 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다시 한번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 11 조 (투고 규정) <한국사회>에 게재될 논문은 ‘<한국사회> 원고 작성 및 제출요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제 12 조 (게재) 원고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13 조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고 연구윤리준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연구소에 속한다.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사회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제 14조 (표절 방지)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최종본을 제출하기 전에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등 표절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투고 논문은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 유사도 검사 상세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사도 검사는 6단계 기준으로 실시하며, 유사도 결과가 1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3. 생성형 AI 도구(예: ChatGPT)는 저자로 기재될 수 없으며,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도구의 활용 범위와 목적을 원고 내 적절한 진술(statement)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 15 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재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이하 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저자의 연구윤리)

1. (연구의 객관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의 독창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연구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의 책임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연구를 수행한 경우, 사회적·학문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연구임을

논문에 명시하거나 심의면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5. (연구의 공개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 및 심사자의 의무 및 책임)

1. 편집위원회의 의무 및 책임

- (1)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위촉할 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제하도록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술적인 독립성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저자의 신원이나 배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원고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엄격한 기준으로 삼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공정한 안목을 지닌 인물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하며, 심사위원 간의 평가 결과가 현저하게 엇갈릴 때는 제3의 전문가에게 추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저자의 신원 등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심사위원의 의무 및 책임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심사위원은 약속된 기한 내에 책임감을 갖고 심사를 마친 후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문적 성향이나 저자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저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연구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심사 의견서에는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원활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의뢰 받은 논문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 4 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 5 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자료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 6 조 (표절)

1. 표절이라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 7 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 8 조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 9 조 (중복 게재) 중복 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제 10 조 (재투고)

1.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장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의 윤리적 사용

제11조 (정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함은 데이터의 구조와 패턴을 학습하여 텍스트 혹은 이미지 등 새로운 콘텐츠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하며, 그 예로는 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 Grok 등이 있다.

제12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연구물은 저자 본인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학문적 성취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를 독창적인 연구 성과로 속여 제출하는 행위는 엄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의 주체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문법 교정이나 형식 수정, 단순 정보 검색과 같은 보조적인 도구로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13조 (책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결과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사실과 다른 허구 정보(환각 현상) 오류, 그리고 인용·참고 문헌의 원천자료 실존 여부에 대한 모든 검증과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심사자 또한 심사 대상 논문을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업로드하여 자신의 독립적인 검토와 판단 없이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제 4 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

제14조 (편집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1. 편집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본 연구소 소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사회연구소 소장이 맡으며,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전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의원의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전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하며, 심의는 제보일로부터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제16조 (이의 신청)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보장의 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비밀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 5 장 별 칙

제 18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2장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거나 3장에 명시된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 지침에 위반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장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거나 3장에 명시된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 지침에 위반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 3 조 (규칙 재·개정)

1. 이 규약은 199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제3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원고제출

1. 투고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이면서 학술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제출된 논문은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치며 평가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당해 원고마감은 발행일 30일전이며 발간예정일은 당해 2월 28일, 8월 30일입니다. 게재 원고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합니다.
4.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원고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백색 A4 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한 원고 4부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편집위원회로 우송합니다.

보낼 곳: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Homepage: <https://socialresearch.korea.ac.kr/>

원고작성

1. 원고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부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흔글 97 기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초과시 추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고작성의 기본적인 형식요건은 다음과 같다.

글자크기: 본문 10p, 각주 9p, 인용문단 9p

줄 간격: 170%

여백 주기: 좌우 3cm, 위 2cm, 아래 1.5cm, 머리말·꼬리말 각 1.5cm

3.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넣어서 쓸 수 있다. 기타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 쓴다.

4. 원고는 표지, 국문요약, 영문 주제어(Key Words) 순서로 구성한다.

5. 표지에는 논문제목,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전화·팩스)가 명기되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하되, 1명의 ‘제1저자’(교신저자)를 지정하여 명시하고 다른 저자들은 ‘공동저자’로 표기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6. 국문요약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2장 이내 분량으로 작성한다.

7.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8.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장·절·항·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서로 매긴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로 둘러싼다.

3)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이용할 때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논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홍승직(1994: 23)은 ...”;

[예2] “...라 했다(홍승직, 1994: 23).”

(2) 외국인 저자명은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예1] “...밀즈(Mills, 1956)”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가운데점으로 구분하고 항상 병기한다.

[예] “...(김용학·임현진, 2000)”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양춘·김문조·손장권·박길성·김철규, 2001)”; “...(양춘 외, 2001)”

- (5)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현영석, 2003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9.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10.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한 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 1)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 2)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되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가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 3)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4)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 5)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최재석. 1990.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임희섭. 1987a. “한국정치체계의 위기구조와 정책정향: 1961-8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93-218

_____. 1987b. “정보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의 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25-149.

菅谷章(스가라 아기라). 1988. 「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社.
Berger, P. L. and H. M. Hs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Transaction.

Cannell, C. F., P. Miller and L. Oksenk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pp. 389-437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Amsden, A. H. 1989. *Asian's Next Giants: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인근달 역. 1990.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 공업화」. 시사영어사).

(2)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손장권. 2001. “정보사회의 환경과 조직변화.” 「한국사회」 4: 147-172.

Heckman, James.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2.

Shin, Ho Hyun. 1990. “S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of Hawaii.

Krafcik, J. F. and J. D. Macduffie. 1989. “Explaining High Performance Manufacturing.” *Working Paper of IMVP*. MIT.

Kollock, P. and M. Smith. 1994. “Managing the Virtual Commons: Cooperation and Conflic in Computer Communities.”

<http://www.sscnet.ucla.edu/soc/csoc/vcommons.htm>.

(3) 번역서

휴이트(John P. Hewitt). 2001. 「자아와 사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사회심리학」. 윤인진 역. 학지사.

클레크·히긴스·스파이비(S. R. Clegg, W. Higgins and T.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김

혁래·박길성·유홍준 편.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역사비평사. pp. 195-210.

Weber, Max. 1951(1920). The Re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11.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하나씩 별지에 작성하되 본문 속에 들어갈 자리를 지정하여 “〈표 1〉 여기에 제시”와 같이 표시한다.
- 2) 제목은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 3)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 ”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 4) 표 속에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 5) 표의 선은 맨 위에 맨 아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선 까지만 굵도록 한다.
- 6)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시에는 흑백으로 표현됨을 유의한다.
- 7) 그림에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한다.
- 8)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p < .01$.” “*** $p < .001$ ”과 같이 표기한다.

한국사회 제27집 2호

2026년 8월 28일 · 인쇄

2026년 8월 30일 · 발행

편집 · 발행/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전화: 02-3290-1651 팩스: 02-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s://socialresearch.korea.ac.kr/>

인쇄 · 출판/도서출판 새로운문화

전화: 02-313-1431 팩스: 02-313-1434

ISSN 1229-036X

Journal of Social Research

Vol.27 No.2 / August 2026

* 이 책은 한국리서치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
ISSN 1229-036X